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이우태·조원빈·박준호·송영훈·강병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이우태·조원빈·박준호·송영훈·강병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KINU 연구총서 16-07

인 쇄 2016년 12월

발 행 2016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02-2275-6894)

인 쇄 처 세일포커스(02-2275-6894)

ISBN 978-89-8479-851-9 93340

통일 의식 조사[統一意識調査], 남북 통일[南北統一]

340.911-KDC6 / 320.9519-DDC23 CIP2016032359

가 격 12,000원

© 통일연구원, 201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요약	xii
I. 서론	1
1. 연구 목적	3
2. 조사 내용	14
3. 조사의 기본설계	19
II. 한국 사회의 통합인식	23
1. 통합의지	25
2. 통합역량	55
3.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	86
III. 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1
1. 대북정책	103
2. 안보의식	110
3. 핵위협 지각	1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IV. 심층분석	129
1. 통일유형과 통합의식: 현상과 결정요인	131
2. 한국 사회 내 갈등과 국가 신뢰도	169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요인	193
4. 북한·통일문제 인식과 안보의식	213
V. 남북통합을 위한 정책적 함의	239
참고문헌	248
최근 발간자료 안내	253

표·그림목차

표 IV-1 통일 필요성과 분단 고착 동기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132
표 IV-2 성별 통일유형	135
표 IV-3 연령별 통일유형	136
표 IV-4 학력별 통일유형	137
표 IV-5 월 소득별 통일유형	137
표 IV-6 이념 및 지지정당별 통일유형	138
표 IV-7 통일유형별 국가에 대한 자부심, 애국심 그리고 민족 정체성	146
표 IV-8 통일유형별 삶의 만족도, 신뢰도와 시민성	149
표 IV-9 통일유형별 갈등 수준에 대한 평가, 갈등 해결 역량, 그리고 사회구조에 대한 견해	153
표 IV-10 통일유형별 북한에 대한 태도	156
표 IV-11 통일유형 예측값과 관측값의 분류 결과	162
표 IV-12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64
표 IV-13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요인분석	174
표 IV-14 국가 신뢰도 기술통계	175
표 IV-15 계층별 국가 신뢰도 차이(ANOVA)	178
표 IV-16 선호정당별 국가 신뢰도 차이(ANOVA 분석)	180
표 IV-17 정치이념별 국가 신뢰도 차이(ANOVA)	180
표 IV-18 세대별 국가 신뢰도 차이(ANOVA)	182
표 IV-19 지역별 국가 신뢰도 차이(ANOVA)	183
표 IV-20 대북정책별 국가 신뢰도 차이(ANOVA)	18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표 IV-21 한국 내 사회갈등과 국가 신뢰도: 회귀분석	187
표 IV-22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207
표 IV-23 심리요인들 간의 단순상관계수	208
표 IV-24 심리요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09
표 IV-25 심리요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209
표 IV-26 주요 안보의식의 기술통계	220
표 IV-27 안보의식의 상관관계	222
표 IV-28 북한에 대한 태도의 기술통계	223
표 IV-29 북한에 대한 태도와 안보의식의 상관관계 계수	224
표 IV-30 북한에 대한 태도와 안보의식 회귀분석 결과	225
표 IV-31 북한에 대한 태도와 핵위협 안보의식 회귀분석 결과	227
표 IV-32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 대북정책 평가	229
표 IV-33 박근혜 정부의 구체적 대북정책 지지도	230
표 IV-34 대북정책 지지도와 안보의식의 상관관계 계수	232
표 IV-35 대북정책 지지도와 핵위협 우려 교차분석	234
표 IV-36 대북정책 지지도와 핵위협 인지 교차분석	235

표·그림목차

그림 I-1 남북통합의식에 대한 개념도	15
그림 II-1 통일의 도덕적 의무감	25
그림 II-2 통일에 대한 태도	27
그림 II-3 통일에 관한 헌법 인지여부	28
그림 II-4 통일의 이유	29
그림 II-5 통일의 국가에 대한 편익	31
그림 II-6 통일의 개인에 대한 편익	32
그림 II-7 통일의 북한 주민에 대한 편익	33
그림 II-8 통일의 시기	34
그림 II-9 통일의 방식	34
그림 II-10 통일을 위한 국내적 조건	36
그림 II-11 통일을 위해 필요한 환경	37
그림 II-12 한국 발전 방향에 대한 평가	40
그림 II-13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	41
그림 II-14 발전과 안정 부문에서의 목표	42
그림 II-15 거버넌스 및 사회적 가치 부문에서의 목표	44
그림 II-16 물질적/탈물질적 가치 부문에서의 목표	46
그림 II-17 통일 이후 부문별 갈등 양상 예측	47
그림 II-18 통일한국의 목표	48
그림 II-19 통일 시 국가와 국민들이 추구할 가치 1	50
그림 II-20 통일 시 국가와 국민들이 추구할 가치 2	51
그림 II-21 통일 이후 통합 장애 요인	52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그림 II-22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이주 의향	53
그림 II-2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55
그림 II-24 국가에 대한 영역별 자긍심	57
그림 II-25 애국심 평가	58
그림 II-26 한민족에 대한 인식 평가	60
그림 II-27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61
그림 II-28 기관별 신뢰도	63
그림 II-29 대인 신뢰도	64
그림 II-30 사회단체 활동과 기부활동	67
그림 II-31 주요기관에 대한 기부	67
그림 II-32 한국 사회 갈등의 심각성	68
그림 II-33 한국 사회 갈등의 원인	69
그림 II-34 한국 사회의 분야별 갈등 정도	70
그림 II-35 한국 사회 갈등의 장기적 영향력	72
그림 II-36 한국 사회의 민주성 평가	73
그림 II-37 사적/공적 시민성 평가	75
그림 II-38 권위주의에 대한 공감도	77
그림 II-39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	78
그림 II-40 다양한 종교의 공존에 대한 의견	79
그림 II-41 다양한 문화 공존에 대한 의견	80
그림 II-42 귀화자 증가가 국가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	81
그림 II-43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84

표·그림목차

그림 II-44 북한에 대한 관심도	86
그림 II-45 북한 정보 획득 경로	88
그림 II-46 북한에 대한 인식	89
그림 II-47 김정은 정권과 대화 타협 가능성	90
그림 II-48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추구 필요성 인식	91
그림 II-49 북한에 대한 항목별 인식	92
그림 II-5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96
그림 II-51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	97
그림 III-1 박근혜 정부의 정책 현안 대처능력	103
그림 III-2 대북정책별 찬반	106
그림 III-3 향후 정책 방향	108
그림 III-4 남북한 전쟁 발병 우려도	111
그림 III-5 안보위협 국제적 요인	112
그림 III-6 안보위협 국내적 요인	113
그림 III-7 향후 한미·한중 외교 정책	114
그림 III-8 북한의 핵무기 개발	117
그림 III-9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관심도	118
그림 III-10 북한의 핵위협이 삶에 미치는 영향	119
그림 III-11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언론 기관의 관심도	119
그림 III-12 핵전쟁 발생 가능성	121
그림 III-13 핵전쟁 시 생존 가능성	122
그림 III-14 핵무기 보유	123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그림 III-15 핵무기 관련 항목별 동의도	124
그림 IV-1 통일인식의 4유형	134
그림 IV-2 통일과 관련한 긍정적 정서와 통일유형	139
그림 IV-3 통일과 관련한 부정적 믿음과 행동의도와 통일유형	140
그림 IV-4 통일의 이유와 통일유형	141
그림 IV-5 통일편익과 통일유형	142
그림 IV-6 통일을 위한 환경과 통일유형	143
그림 IV-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통일유형	158
그림 IV-8 국가 기관별 신뢰도	174
그림 IV-9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의 태도	197
그림 IV-10 남한 주민의 삶의 만족도	200
그림 IV-11 남한 주민의 대인신뢰도	201
그림 IV-12 다양한 인종 공존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의견	202
그림 IV-13 다양한 종교 공존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의견	203
그림 IV-14 다양한 문화 공존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의견	204
그림 IV-15 귀화자 증가에 따른 국가 결속력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의견	205
그림 IV-16 우리나라 사회구조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의견	206
그림 IV-17 안보의식의 두 측면	216
그림 IV-18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의 이중성	231
그림 IV-19 개성공단 폐쇄 결정 및 재개에 대한 평가	232

본 연구의 목표는 남북통합, 특히 남북한 주민 간 인식·문화·심리적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정치·경제·복지 등 제도통합의 효력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로 강제할 수 있는 반면 인식·문화·심리적 통합은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는 과정이며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용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제도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심리적 통합으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통일의 개념은 통합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의 남북통합역량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남북통합의 방향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남북통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통합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부재하다. 이는 남북통합의 바탕이 되는 사회통합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은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 환경, 사회적 역량, 통합의 목표와 방식에 가변적인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남북통합의 개념적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남북통합의 방향을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달성하는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통합을 ‘통합의지’, ‘통합역량’,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의 3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영역인 ‘통합의지’는 다시 통일에 대한 태도와 통일국가에 대한 비전으로 구분되며,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 분단 고착에 대한 견해, 통일과 관련된 정서, 통일과 관련된 인지적 믿음 그리고 통일과 관련한 행동의도로 구성하였다. 통일국가에 대한 비전은 통일국가의 방향성과 목표, 통일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 탈물질적 가치에 대한 견해, 통일 후 통합의 장애물 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남북통합의 두 번째 영역인 ‘통합역량’은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그리고 사회적 이동으로 구분되며,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만족도와 경제적 만족도, 공동체에 대한 신뢰, 사회적 참여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포용에서는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 원인, 해결 방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을 전반적 차원과 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의 구체적 차원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갈등의 원인을 가치관의 차이, 개인이익 추구, 정부의 대처 부족, 정보 부족과 오해 등의 수준에서 탐색하였다. 갈등 해결 역량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 민주성, 권위주의 사회적 관용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우리 사회의 구조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이동에서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가 지속될 것인지,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가 정당한 것인지, 사회구조의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남북통합 측정의 세 번째 영역인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는 북한에 대한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었다. 북한에 대한 태도는 북한에 대한 관심, 북한정보 획득 경로와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지원, 협력대상, 경제 혹은 적대의 대상,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를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남북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평가'를 상정하여 조사하였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를 포함한 11개 영역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 그리고 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압박과 제재 정책 등 11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안보에 대한 전반적 평가, 안보위협 요소, 그리고 향후 외교 정책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평가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 여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 등을 1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 심층분석에서는 통일에 대한 인식을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의 현실성’을 기준으로 ‘통일무관심 집단’, ‘통일선호집단’, ‘분단체제 선호집단’,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일선호집단, 공존통일 병행집단, 그리고 분단체제 선호집단은 남북통합의 3요소인 통합의지, 통합역량,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일인식 유형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전쟁에 대한 우려’와 ‘통일의 편익’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통일에 대한 인식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심층분석에서는 통합역량 중 남북통합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 사회의 남북통합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이다. 국가기관 신뢰도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경제적 계층, 그리고 지지정당, 지역에 따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심층분석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에 개인적 심리요인과 사회와 관련된 심리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적 심리적 요인 중 삶의 만족도, 사회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 중에서는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믿음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두 변수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믿음이 삶의 만족도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네 번째 심층분석에서는 북한의 핵위협 관련 안보의식과 기타 북한의 위협 관련 일반적인 안보의식을 구분하여 북한에 대한 태도,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위기인식은 북한에 대해 지니는 구체적인 태도보다는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북한에 대해 적대와 경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보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반면, 북한을 지원과 협력의 파트너로 여기는 사람은 안보 상황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남북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보다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는 남북통합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먼저 남북통합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통일한반도 국가의 시민으로서 남한과 북한 주민이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결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통일에 대한 단선적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다층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남북통합과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역시 남북통합, 그리고 남북통일이 정치와 경제의 영역을 넘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남북통합과 통일을 당위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남북통합과 관련한 국민들의 양가적(ambivalent) 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통일에 대해 정서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편익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경계의 대상인 동시에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들이 가진 심리적 틀(psychological mental frame)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통일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분단 이후 남북관계를 포함한 통일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과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를 꼽았다. 심층분석에서도 우리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해 가진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여섯째, 경제적 편익의 관점에서만 남북통합과 통일을 논의하기보다는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의 균형 속에서 남북통합과 통일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 이번 조사 결과는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이 제로섬 게임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불안한 안보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불안함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서 국민들은 통일보다는 분단 고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안보에 대한 강조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덟 번째, 이러한 종합적 대책은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불감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정책의 개발 및 조정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아홉 번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어: 남북통합, 심리적 통합, 통일, 북한, 대북정책, 핵위협

2016 Survey of Inter-Korea Integration

Park, Juhwa et 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public attitudes toward South-North integration.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moral and psychological integration. Whereas structural integr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al institutions can be enforced by law at a certain point in time, moral and psychological integration is an ongoing process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that require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tolerance of the community. Since structural integration in terms of social and institutional system is ultimately concluded by moral and psychological integration in terms of individual community members, the assessment of the level of moral and psychological inter-Korean integration is essential to build public support on the future directions of integration.

Despite the importance of inter-Korean integration, social and academic consensus on its definition has been elusive. Rather than providing a conceptual definition, this study deems inter-Korean integration as ‘a process of achieving unity amidst diversity.’ Based on the direction, we operationalize inter-Korean integration as ‘Integration will,’ ‘Integration capacity,’ and ‘Attitude toward the other party of integration.’ In addition to measure the three variables, we investigate three variables which influence inter-Korean integration, ‘Attitude toward policies on North Korea,’ ‘Attitude toward current security landscape’ and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 in-depth analysis was also conducted on the typology of unification attitude, level of trust toward state

agencies,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relationship between the awareness on security and nuclear threat.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inter-Korea integration. First, social consensus is required for future directions for inter-Korean integration. Second, this study attempts to overcome an excessively simplistic unification attitude. Third, policy efforts are required to approach the issue of inter-Korean integration and unification from a realistic point of view rather than their mere justifiability. Fourth,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ambivalent public attitudes toward inter-Korean integration. Fifth, the level of trust toward the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ies should be enhanced. Sixth, the issue of inter-Korean integration and unification should b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not only economic benefits but also fair distribution of economic growth. Seventh, a comprehensive plan encompassing both security and unification policies is required. Eighth, such comprehensive plan should maintain a balance between security and unification policies while mandating policy formulation and coordination to avoid too sensitive/insensitive situations. Ninth, comprehensive support measure for North Korean defectors is required.

Keywords: Inter-Korean integration, psychological integration, unification, North Korea, policies on North Korea, nuclear threat

I. 서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표는 남북통합, 특히 남북한 주민 간 인식·문화·심리적 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경험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정치·경제·복지 등 제도통합의 효력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로 강제할 수 있는 반면 인식·문화·심리적 통합은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는 과정이며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용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제도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심리적 통합으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통일의 개념은 통합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의 남북통합 역량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남북통합의 방향, 통일 개념 확대, 그리고 남북통합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기존의 통일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는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남북통합에 초점을 둔 의식조사는 없었다. 또한 제도통합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남북한 구성원들의 인식·문화·심리적 통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기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남북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남북통합의식조사의 연속 선상에서 남북통합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고 국민들의 의식에 대한 다층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 남북통합의 개념

남북통합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남북통합’에 대한

개념적 정의(conceptual definition)를 내리는 것이다. 남북통합의 수준과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ized definition), 남북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개발과 평가는 남북통합의 개념적 정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북통합에 대한 개념적 정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통합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은미와 송영훈¹⁾은 남북통합을 “남북한 주민이 의사소통적 상호 이해를 통해 사회의 공통가치에 대한 주민의 동의 또는 합의를 성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최순중²⁾에 따르면 남북통합은 “(남북)구성원 전체가 단일한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구성원들의 일체감이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확보가 되어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다. 박종철³⁾은 도이취(Karl Deutsch)와 구영록의 통합에 대한 논의⁴⁾를 바탕으로 남북통합을 “공통으로 수락되는 행위규범의 인정과 확대, 평화적 공동체의식의 존재, 체제 내에 머물겠다는 의식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⁵⁾으로 정의하였다. 박종철은 최근 남북통합을 “공동체 내부의 행위자들의 협력적인 소통과 상호의존적 신뢰관계의 갈등해소 과정”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남북통합,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인 남북의 사회·심리·문화적 통합이

1) 정은미·송영훈, “북한주민의 통일외식과 남한사회의 수용성,” 『통일문제연구』, 제24권 1호 (2012), p. 222.

2) 최순중, “통일한반도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통합의 의미: 독일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문화예술연구』, 제15권 (2014), pp. 286~287.

3)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 23.

4) Karl 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구영록, 『인간과 전쟁: 국제정치 이론의 체계』 (서울: 법문사, 1994) 참고.

5) 박종철은 행위자들이 통일성을 추구하지만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라고 제안하였다. 박종철,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p. 24.

무엇인지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제도적 통합과 가치의 통합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⁶⁾ 또한 선행연구들이 일반적으로 통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통일과 남북통합이 혼용⁷⁾되었다는 점 역시 남북통합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다양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민족주의, 다문화주의, 통일 이후 예상되는 갈등의 양상, 남북한의 명백한 경제적 격차 등 다양한 담론을 바탕으로 남북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점도 남북통합에 대한 일치된 정의가 도출되지 않은 이유이다.⁸⁾

다양한 담론에 근거한 남북통합 논의는 남북통합의 이론적, 정책적 근거가 되는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social cohesion, social bonds, 그리고 social inclusion 등)에 대한 일치된 정의가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다.⁹⁾ 사회통합은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갈통(Johan Galtung)¹⁰⁾은 사회통합을 “둘 이상의 서로 다른 행위자가 새로운 행위자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록우드(Lockwood, 1999)는 사회통합을 “공동체의 수준에서 친족이나 지역의 자발적 조직과 같은 강한 일차적 네트워크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 도이치¹¹⁾는 “어떤 영역 내의 국민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평화적 변화의 믿을 수 있는

6) 예를 들어 정치제도 통합은 정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으로 완성된다. 박종철 외,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41~42.

7)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pp. 22~25.; 최순중, “통일 한반도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통합의 의미: 독일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pp. 286~297.

8) 박종철 외, 『남북한 통합연구 분석(II): 경제, 사회·문화』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 pp. 107~135.

9) 이희길·신지성, 『사회지표 개편 기초연구1』 (서울: 통계개발원, 2010), p. 11.

10) Johan Galtung “A structural theory of integr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 no. 4 (1968), pp. 377~378.

11) Karl 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p. 5.

I
II
III
IV
V

기대가 확약되는 매우 강하고 광범위한 공동사회의식과 제도 및 실제의 달성,” 위너(Myron Weiner)¹²⁾는 “사회문화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집단들이 하나의 구성체 내에서 공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상위체계에 대해 심리적 불일치를 경험하는 특정 사회집단과 역사적 정치집단 등이 그 상위체계와 연계되는 것,” 구영록¹³⁾은 “어떤 공동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들이 공동자원을 투입시켜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노대명¹⁴⁾은 “사회통합을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의 소속감과 정체감이 있으며 상호 신뢰감과 협력 의지가 행동으로 발현되는 상태” 등 학자에 따라 사회통합이 무엇인지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뒤르켐(Durkheim)의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와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¹⁵⁾ 파슨스의 ‘개인적 통합(individual integration)’과 ‘구조적 통합(structural integration),¹⁶⁾ 크레켈(Reinhard Kreckel)¹⁷⁾의 체제 통합(system integration)과 가치통합(moral integration), 오페(Claus Offe)의 정치통합, 경제통합, 문화통합¹⁸⁾ 등

¹²⁾ Myron Weiner *et al.*, “Problems of Integration and Modernization Breakdown,” in *Politic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eds. Jason Leonard Finkle and Richard W. Gabl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6), pp. 551~591.

¹³⁾ 구영록, 『인간과 전쟁: 국제정치이론의 체계』 (서울: 법문사, 1994), pp. 318~320.

¹⁴⁾ 노대명 외, 『한국 사회 통합지표 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p. 36.

¹⁵⁾ Emile Durkheim,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56), pp. 129~130.

¹⁶⁾ 파슨스의 통합 이론은 다음을 참고하라. 탈콧트 파슨스 저, 윤원근 옮김, 『현대사회의 체계들』 (서울: 새물결, 1999).

¹⁷⁾ Reinhard Kreckel, “Social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German Unification,” in *Surviving the Twentieth Century: Social Philosophy from the Frankfurt School to the Columbia Faculty Seminars*, ed. J. T. Marcu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9), p. 90.

¹⁸⁾ Claus Offe, *Der Tunnel am Ende des Lichts: Erkundungen der politischen Transformation in ostern* (Campus Verlag: Auflage, 1994), pp. 230~276.

사회통합은 분석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 통합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남북통합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치된 정의를 불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회통합의 이상적 상태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집단, 또는 집단의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가 사회통합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논란¹⁹⁾ 외에 모든 공동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적 사회통합의 상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노대명²⁰⁾은 정치적 아젠다 또는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통합의 목표가 달라지며, 사회통합의 선행요인과 후행요인의 구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개념적 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남북통합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남한과 북한이 추구해야 할 사회통합의 상태는 어떠해야 하는가? 본 연구의 주목표인 통일한반도 국가의 구성원 간 사회심리적 통합의 차원에서 본다면 통일한반도 국가 국민들의 규범적 심리사회적 상태는 무엇인가?

다인종/다문화를 용광로에 넣어 주류 미국 문화에 동화시키는 미국식 동화모형(혼종성(hybridity)모형), 다문화주의에 바탕을 둔 캐나다식 통합모형, 홍콩의 특수성을 인정한 중국식 모형²¹⁾ 등 국가의 역사·사회·경제·정치적 배경에 따라 통합의 목표와 방식은 달라지며 이에 대한 가치판단은 불가능하다. 결국 남북통합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 될

¹⁹⁾ 박종철 외,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p. 60.

²⁰⁾ 노대명 외, 『한국사회 통합지표 연구』, pp. 29~32.

²¹⁾ 분단 경험 국가가 추구한 통합방식에 대해서는 박종철 외,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참고; 혼종성과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와 남북통합의 방향에 관한 논의는 박영자, “다문화시대 한반도 통일·통합의 가치 및 정책방향,” 『국제관계연구』, 제17권 1호 (2012), pp. 299~333를 참고하라.

I
II
III
IV
V

수밖에 없다. 사회통합 및 남북통합에 대한 선행연구, 그리고 남북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렇다면 남북통합을 정의할 수 없는 것인가? 송영훈²²⁾은 남북통합 개념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통합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동질성의 회복보다는 다양성의 확대, 갈등관리, 그리고 행위자들의 유기적 연결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구체화함에 있어 개념의 최소화 원칙,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사회통합을 이해하는 방식에 가깝도록 기술하는 일상적 화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통합과 갈등관리의 차원에서 남북통합 문제를 접근한 박종철의 제안은 주목할 만하다. 박종철은 사회통합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unity in diversity)²³⁾’을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개념을 남북통합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다. 먼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은 일체성(동질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다름의 인정과 확대, 갈등 관리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하나의 질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각각 다양하면서도 전체로서 질서 있는 상태로 통일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때 이 요소들의 성질이나 결합관계를 보면 조화·견제·균형·역동 등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²⁴⁾

또한 통합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건’이라기보

²²⁾ 박종철 외,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 147~151.

²³⁾ 유사한 개념으로 다양성 속의 하나됨(united in diversity)이 있다.

²⁴⁾ 박종철 외,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pp. 147~151.

다는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독일의 정치적·법적 통일이 이루어진지 25년이 지났다. 독일 국민의 2/3 이상은 통일의 결과에 만족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독 출신 주민과 서독 출신 주민의 심리적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²⁵⁾ 다시 말해 동서독의 ‘통일’은 이루어졌지만 동서독의 ‘통합’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이다. 남북한의 접촉과 교류가 극히 제한적인 한반도의 상황은 통합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 단기적으로는 남북한의 상호의존성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 주민들의 의존성을 확대하여 다양함에 대한 존중 속에서 합의(통일성)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동체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과제는 남북통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남북통합의 개념적 정의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통합의 방향은 ‘다양성’과 ‘통일성’의 균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통합과 사회통합에 대한 선행연구의 개념적 정의 역시 다양성과 통일성의 차원으로 수렴된다. 통합의 영역과 분석의 수준, 그리고 다양성과 통합대상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의 우선순위에 차이를 보일 뿐이다. 남북통합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 문화, 집단 차원과 개인 차원 등 다양성과 통일성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구분하고 남북한의 현실을 반영할 때 가능하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달려있다. 이는 후속 연구에 맡기고자 한다.

나. 남북통합의 측정

우리 사회의 ‘남북통합’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남북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구체적, 현실적 문제들을 구분하고 분석하며 정책적

²⁵⁾ “동·서독인 80% ‘통일 대체로 만족’...그러나 마음의 벽은 여전” 『영남일보』, 2015.10.8.,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51008.010320837210001>>.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하는 정책입안자가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는 남북통합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측정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될 것이다. 남북통합의 조직적 정의는 사회통합의 개념적 정의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전술한 대로 사회통합의 개념은 모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련의 학자들은 정책입안과 실행의 차원에서는 사회통합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통합대상의 필요성을 정책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쟈센(Jenson)²⁶⁾은 구성원들이 공통 가치와 정체감의 수준, 경제적 차원의 관용 수준, 정치적 참여의 수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관용 수준, 정치·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을 통합의 5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Putnam은 사회통합의 요소로 신뢰,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 등 사회적 조직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였다.²⁷⁾ Chan과 그의 동료들은 사회통합의 주관적 요소로 신뢰, 동료를 도울 의지, 소속감을 꼽았으며, 객관적 요소로 사회적 참여, 자원 봉사와 기부, 정치 참여 등을 사회통합의 지표로 제안하였으며,²⁸⁾ 보베(Beauvais)와 쟈센²⁹⁾은 쟈센의 1998년 연구를 확장하면서 5가지 통합의 차원을 제안하였다. 먼저, 구성원들이 집단의 목표, 가치, 도덕적 원리, 행동규칙을 공유하는 수준으로서의 사회통합, 집단 내에 갈등 수준으로서의 사회통합, 경제적, 사회적,

²⁶⁾ Jane Jenson, "Mapping Social Cohesion: The State of Canadian Research,"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 (CPRN) Study*, no. F03 (1998)를 참고하라.

²⁷⁾ Robert D. Putnam, Robert Leonardi, and Raffaella Y. Nanetti,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 167.

²⁸⁾ Joseph Chan, Ho-Pong To, and Elaine Chan, "Reconsidering social cohesion: Developing a definition and analytical framework for empirical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75, no. 2 (2006), pp. 273~302.

²⁹⁾ Caroline Beauvais and Jane Jenson, "Social Cohesion: Updating the State of the Research," *CPRN Discussion Paper*, no. F22 (2002).

환경적 삶의 격차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대 수준에서의 사회통합,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자본 수준에서의 사회통합, 마지막으로 소속감과 정체성 수준에서의 사회통합이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정해식은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구성원 개인과 사회 제도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기관에 대한 신뢰, 단체 활동 정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일반적 신뢰 수준을 통해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하였다.³⁰⁾ 노대명과 그의 동료들은 신뢰도, 국가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 자원 봉사 및 기부, 투표율 등을 사회통합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³¹⁾ 강신옥과 그의 동료들은 정치적 관심과 사회 참여, 신뢰, 부패인식, 관용, 생활만족도를 사용하였다.³²⁾ 정영호와 고숙자는 사회 내 갈등 요인을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정부의 의사 결정에서의 비효율성과 같은 정치적 갈등요인과, 소득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갈등요인, 그리고 문화다양성과 같은 사회적 갈등요인을 구분하였다.³³⁾ 박준과 그의 동료들은 소득 불균형을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간주하였으며, 갈등 관리 역량으로 민주주의 성숙도와 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을 꼽았다.³⁴⁾

사회통합을 측정의 수준으로 환원하여 분석하는 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집단은 국가들이었다. 사회통합에 관심을 보인 국가들은 사회통합의 개념적 정의보다는 합의된 사회통합의 방향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수준 측정에 초점을 두었다. EU 국가들의 사회통합 측정³⁵⁾은

30) 정해식, “사회통합의 결정 요인: 통합상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제221호 (2015), pp. 28~31.

31) 노대명 외, 『한국사회 통합지표 연구』, pp. 36~39.

32) 강신옥 외,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p. 11.

33) 정영호·고숙자,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포럼』, 제221호 (2015), pp. 44~55.

34) 박준 외,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CEO Information』, 제710호 (2009), pp. 1~20.

크게 ① 사회적 격차 및 사회적 배제의 감소, ② 사회적 자본의 강화로 요약된다. 각각의 차원의 측정은 지역 간 경제 격차와 같은 객관적 지표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와 같은 인식적 지표들을 포괄해서 이루어진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³⁶⁾는 사회통합을 “장기적으로 구성원들의 안녕(well-being)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으로 정의하면서 4가지 측정영역을 제시하였다. 네 가지 측정 영역은 첫째, 자원에 대한 공정한 접근 가능성, 둘째, 다양성에 기반을 둔 인간의 존엄, 셋째, 개인과 집단의 자율성,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책임감 있는 참여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평의회는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와 측정 수준에서 주목할 부분은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 즉 안녕감을 사회통합의 주요 구성 요소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시민의 권리와 삶에 대한 만족감을 사회통합의 주요 요소로 포함시킨 것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강조한 기존 연구와 차별적인 부분이다. OECD는 사회통합의 요소로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이동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포용은 불평등, 빈곤, 양극화에 대한 사회의 배제 역량을 의미하며,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사회적 신뢰와 참여, 사회적 이동은 사회 내에서 지위를 이동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³⁷⁾

캐나다³⁸⁾의 경우 사회통합을 국민의 신뢰와 상호성에 기반을 두어 국가

³⁵⁾ Regina Berger-Schmitt, “Social Cohesion as an Aspect of the Quality of Society: Concept and Measurement,” *Eu Reporting Working Paper*, no. 14 (ZUMA, 2000) 참고.

³⁶⁾ Consejo de Europa,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Methodological guide* (Belgium: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5), p. 57.

³⁷⁾ OECD, *Social Cohesion in Shifting World* (Paris: OECD, 2011), p. 54.

³⁸⁾ Canadian Government, Final Report On Social Cohesion (June 1999), <<http://www.parl.gc.ca/Content/SEN/Committee/361/soci/rep/repfinaljun99-e.htm>>. (검색일: 2016.10.1.).

의 공유된 가치, 도전과 기회의 평등이 제공되는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호주는 동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타문화에 대한 관용을 강조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개인과 가족의 안녕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일체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 사회적 안전망 창출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측정하고 있다.³⁹⁾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통합 측정의 문제도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개념적 정의의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의 측정은 다양한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여론을 조사하고 이를 다양성과 통일성, 또는 구성원의 사회적 안녕감으로 개념화한 후, 공동체의 통합목표와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통합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회통합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통합이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주관적인 지표임을 의미한다. 공동체의 합의에 따라 사회통합의 목표, 통합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사회통합의 다양한 요소 측정 결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남북통합의 구성요소에 대한 국민들의 객관적 인식을 제공한다. 남북통합은 결국 우리 사회와 국민의 역량에 달려있으며,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남북통합에 대한 인식 연구는 향후 우리 사회가 남북통합에 대한 구체적 방향, '다양성 속의 통일성'의

³⁹⁾ 국가별 사회통합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희길·신지성, 『사회지표 개편 기초연구1』을 참고하라.

I
II
III
IV
V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남북통합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남북의 공존, 남한으로의 동화, 남북의 분리 등 다양한 통합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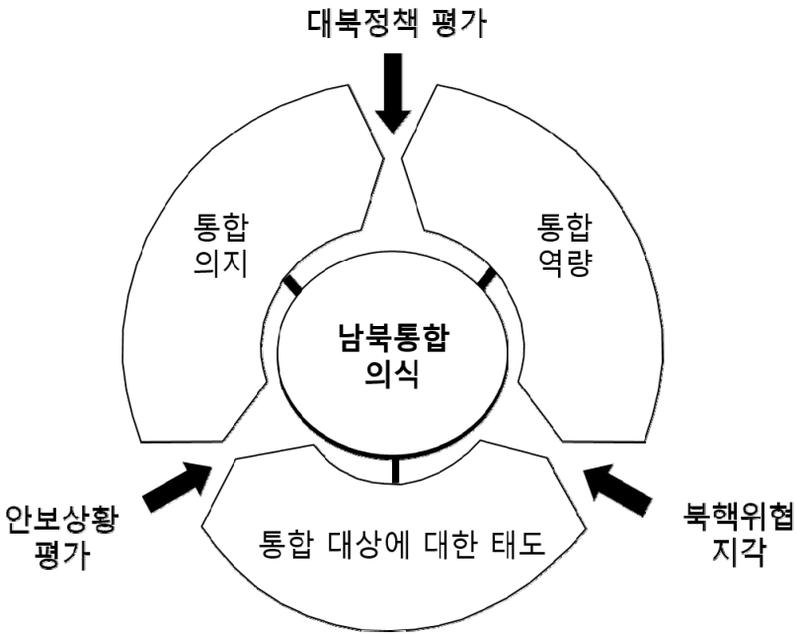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여론은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국제정세, 남북관계, 남한과 북한의 내부 상황, 그리고 최근의 핵실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가변적이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인식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 분단이 고착된 지 7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남북통일과 남북통합에 대한 노력은 더 이상 ‘현상 유지’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현상 변경’을 위한 노력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남북통합 인식의 변화, 특히 세대별 인식 변화를 추적·분석함으로써 국민인식의 변화에 상응하는 정책의 밑거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남북통합에 대한 장애요인과 촉진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통일·통합을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통일·통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조사 내용

본 연구는 여섯 개 영역으로 구조화하였다. 먼저 남북통합의식을 통합의지, 통합역량,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의 3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남북통합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북한 핵위협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였다 (그림 I-1).

그림 1-1 남북통합의식에 대한 개념도



남북통합의식 측정의 첫 번째 영역인 통합의지는 다시 통일에 대한 태도와 통일국가에 대한 비전으로 구분하였다. 통일에 대한 태도는 남북통합의 동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핵 문제, 민족담론의 약화 등 현재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분단 상황에서 남북통합은 우리 사회의 잠재적 문제이지만 통일 이후 남북통합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남북통합의 촉발점인 통일에 대한 회의적 인식은 남북통합의 역동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통일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방향성과 비전에 대한 공유가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통일, 그리고 통일국가의 비전에 대한 여론의 다양성과 통일성 수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 I
- II
- III
- IV
- V

먼저 통일에 대한 태도는 통일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통일의 필요성), 분단 고착에 대한 견해, 통일과 관련된 정서, 통일과 관련된 인지적 믿음(통일의 헌법적 가치, 통일의 이유, 통일의 시기와 방식, 통일을 위한 우호적 여건,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예측), 그리고 통일과 관련한 행동의도(통일관련 세금)를 측정하였다. 통일국가에 대한 비전에서는 통일국가의 방향성과 목표, 통일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 탈물질적 가치에 대한 견해, 통일 후 통합의 장애물 등을 측정하였다.

남북통합의식 측정의 두 번째 영역은 우리 사회의 통합역량이다. 남북통합은 미래 진행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며, 남북통합은 현재 우리 사회의 통합역량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남북통합이 남한과 북한 주민의 심리·문화·사회적 통합에 초점이 있지만 통일로 발생할 갈등은 남북한 주민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통일로 인한 갈등은 세대, 계층, 지역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통일로 인한 갈등의 해소는 우리 사회의 통합역량에 달려 있다. 통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남북통합은 현재 우리 사회의 통합역량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사회의 통합역량 측정은 OECD의 제안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사회적 이동'의 세부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만족도, 공동체에 대한 신뢰, 사회적 참여를 통해 개념화하였다.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전반적 인식과 영역별 인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세부영역 주제는 민주주의 발전,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경제성장, 사회보장, 과학기술의 발전, 스포츠, 예술과 문화, 군사력, 역사, 공정한 사회적 대우 등 10개로 구성되었다. 애국심은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민족 정체성은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측정하였으며 각각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5개 문항, 경제적 만족도를 측정하는 1개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공동체에 대한 신뢰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대표적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를 통해 사회적 거버넌스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계량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별로는 군대, 시민단체,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정당, 국회, 대기업, 노동조합, 종교단체, 언론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는 5개 문항(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으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마지막 개념인 사회적 참여는 정당 등 정치 단체, 시민 단체, 노조, 경영자 단체, 종교 단체, 봉사 단체, 친목 단체, 교양교육 단체, 기타 단체 등 9개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정도, 그리고 기부활동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리 사회 통합역량의 두 번째 영역인 사회적 포용에서는 한국 사회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를 조사하였다.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과 갈등 해결 역량을 파악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통합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통일한반도 국가에 대해 국민들이 예상하고 있는 갈등요인들을 파악한다면 남북통합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 설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 사회의 전반적 갈등 정도를 질문하고 그 원인을 생각 및 가치관의 차이, 개인 이익 추구, 정부의 대처 부족, 정보 부족과 오해,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장기적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분야별 우리 사회의 갈등은 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 등 5개 분야에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 해결 역량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평가, 권위주의 의식의 정도, 다양한 인종, 종교,

I
II
III
IV
V

문화의 공존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이 국가적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하였다.

우리 사회통합역량의 세 번째 영역은 사회적 이동이다. 사회적 이동에서는 국민들의 우리 사회의 구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가 지속될 것인지(사회구조의 안정성),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가 정당한 것인지(사회구조의 합법성), 사회구조의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지(사회구조의 삼투성)에 대해 7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남북통합의식 측정의 세 번째 영역은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이다. 먼저 북한에 대한 태도는 북한에 대한 관심, 북한 정보 획득 경로와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지원, 협력대상 그리고 경제 혹은 적대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추상성이 높은 북한의 이미지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추상성을 낮추어 구체적인 북한에 대한 태도 역시 측정하였다(예: 북한은 적화 통일을 원하고 있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등). 그리고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이와 별개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북한 주민과 직접적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남북통합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첫 번째 영역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인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성을 포함한 11개 영역에 대해 정부의 대처 능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경제 교류협력의 지속여부, 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의 도입 여부, 제재 지속에 대한 견해, 금강산 및 개성공단 문제 등 11개 구체적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남북통합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두 번째 영역인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현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전반적 평가, 전쟁에 대한 우려, 국내·국외적 안보위협 요소, 그리고 향후 외교 정책, 특히 미국 및 중국과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남북통합의 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마지막 영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평가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지, 북한의 핵위협이 걱정스러운지, 북한의 핵위협이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핵전쟁 시 생존 가능성과 생존을 원하는지 등 13개 문항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외 인구학적 특성은 개인적 변수, 정치 및 정책 관련 태도 변수, 경제적 변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적 변수는 결혼 여부, 학력, 종교, 신앙 활동 수준 등이다. 정치적 변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인식, 정당 선호도, 국회의원 투표 여부, 정치적 성향 등 다양한 형태로 측정되었다. 경제적 변수는 월평균 가구소득, 소득 수준에 대한 자기평가, 직업, 계층에 대한 자기평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인구학적 특성은 설문항목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수집된 것으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코딩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3. 조사의 기본설계

이 설문조사는 2016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할당되는 표본의 수가 통계적 분석에 유의미한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충청남도에 포함시켰다. 표본의 수는 1,000명이며 2016년 5월 안전행정부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되었다.

I
II
III
IV
V

현장실사는 포인트맥에 의뢰하여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조사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을 이용하였다. 현장실사에 앞서 포인트맥에서 조사원 교육을 이틀 동안 진행하였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는 현장 면접원에 의한 검증, 지역 감독원에 의한 검증, 본사 감독원에 의한 검증, 전산검증 등 총 4단계로 이루어졌다. 각 단계마다 검증의 필요성이 있는 문항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응답자들 중 3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제 조사 참가 여부와 면접 내용을 검증하였다. 원자료는 편집, 코딩, 입력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 21.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전산자료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전산자료의 공개는 통일연구원의 심의절차를 통해 공개될 것이다.

조사 결과의 분석은 문항별 기초통계분석과 심층분석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기초통계분석은 주요 문항별 조사내용을 성, 연령, 지역, 결혼, 학력, 국정운영평가, 월평균 소득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차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심층분석은 ‘통일유형과 통합의식: 현상과 결정요인’, ‘한국 사회 내 갈등과 국가 신뢰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요인’, ‘북한·통일문제 인식과 안보의식’ 등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결론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서론과 심층분석의 ‘통일유형과 통합의식: 현상과 결정요인,’ 그리고 결론은 박주화가 집필하였으며 기초통계분석은 이우태와 강병철이 집필하였다. 심층분석의 ‘한국 사회 내 갈등과 국가 신뢰도’는 조원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요인’은 박준호, ‘북한·통일문제 인식과 안보의식’은 송영훈이 집필하였다. 본 과제

를 수행함에 있어 문소희 객원연구원과 김현민 연구인턴의 연구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불평 없이 과제를 지원해준 두 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부록에는 문항별 집계표와 주요 인구학적 변수의 교차표를 제공하였다. 사례수와 변수 항목별 응답자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4점 척도 혹은 5점 척도 변수는 종합열에 긍정과 부정 혹은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통합한 응답자의 비율도 기록하였다. 4점 척도 문항의 4점 평균은 각 척도별 점수의 평균을 의미하고, 이 경우 100점 환산평균은 가장 부정적인 응답 0점, 부정적 응답 33.3점, 긍정적인 응답 66.6점, 가장 긍정적인 응답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평균점수이다. 5점 척도 문항의 5점 평균은 각 척도별 점수의 평균을 의미하고, 100점 환산평균은 가장 부정적인 응답 0점, 부정적인 응답 25점, 보통 50점, 긍정적인 응답 75점, 가장 긍정적인 응답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평균점수이다. 즉 100점 환산평균은 각 척도별 가중치를 부여한 값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질문에 따라 응답자 비율 혹은 평균점수, 환산평균점수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차년도 부록은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www.kinu.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I

II

III

IV

V

II. 한국 사회의 통합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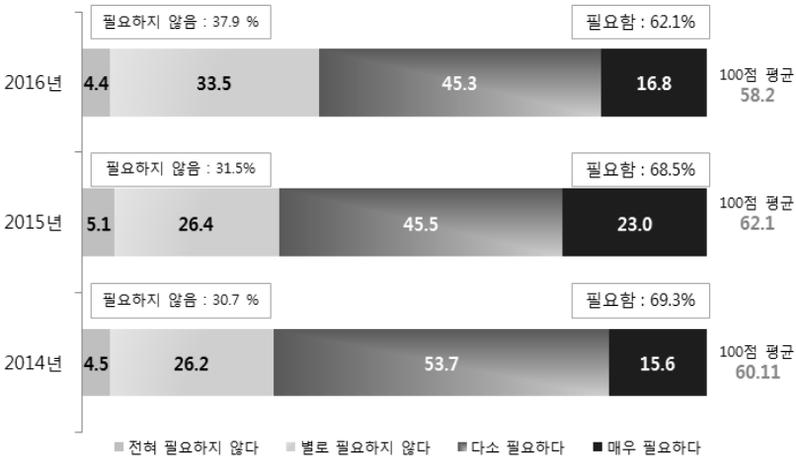
1. 통합의지

가. 통일 의지

(1) 통일의 도덕적 의무감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62.1%(매우: 16.8% + 약간: 45.3%)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37.9%(전혀: 4.4% + 별로: 33.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필요하다’의 응답은 2015년 대비 6.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4년 조사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 >> 통일의 도덕적 의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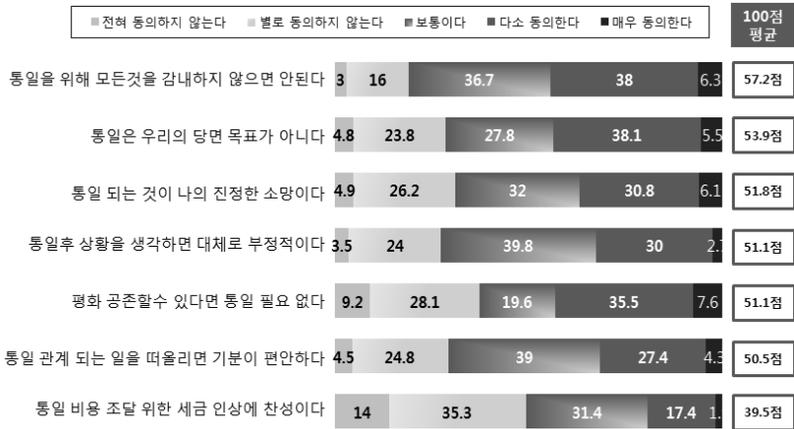
응답자의 모든 계층에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지만 통일의 필요성 정도에 있어서는 편차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60.9점)이 여성(55.6점)에 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41.6%)의 경우 작년 대비 1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가 느끼는 통일의 필요성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권역별로는 강원(87.1%, 76.3점)의 응답자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서울(61.3%, 59.5점), 인천/경기(63.9%, 60.8점), 대전/충청(61.5%, 56.4점), 광주/호남(61.4%, 57.8점)지역은 응답자의 60%대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대구/경북(58.4%, 52.1점), 부산/울산/경남(59.0%, 53.6점), 제주(50.0%, 52.8점)지역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이념성향이 보수(68.7%, 62.7점)성향인 응답자가 중도(55.6%, 54.1점) 또는 진보(65.1%, 59.8점)성향의 응답자보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7가지 문항들에 대해 응답자의 동의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는 항목별로 대부분 50~60점 사이의 보통 수준으로 응답되었다. ‘생전에 통일을 직접 체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가 57.2점으로 가장 높으며, ‘나는 통일 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에 찬성한다’가 39.5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통일 후 상황을 생각하면 대체로 부정적이다’가 51.1점, ‘통일과 관계되는 일을 떠올리면 기분이 편안하다’가 50.5점으로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 통일에 대한 태도



2016년에 조사한 통일태도와 관련된 7개의 문항 중 통일에 대한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에 대한 동의율에서 연령별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선 통일에 대해 긍정적 표현인 ‘생전에 통일을 직접 체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좌우지간 통일에 관계되는 일을 떠올리면 나의 기분은 편안하다’의 경우 50~60대 동의율이 20대와 30대의 동의율보다 10~20% 정도 높았고 부정적 표현인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 ‘이 시점에서 통일은 우리의 당면목표가 아니다’, ‘미래의 통일 후 상황을 생각해 보면 대체로 부정적이다’의 경우는 20대와 30대를 포함하는 젊은 세대의 동의율이 50~60대의 동의율보다 높았으며, 특히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에 대해 20대의 54.5%, 30대의 48.1%가 동의함으로써 젊은 세대는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는 통일 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에 찬성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 연령층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동의한다는 비율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높았고, 지역 크기, 권역, 학력, 월평균 소득, 정치이념성향, 국정운영찬반여부에 상관없이 응답자 전 계층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높게 조사되었다.

(3) 통일의 헌법적 가치

대한민국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8.5%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 > 통일에 관한 헌법 인지여부



■ 알고 있었다 ■ 모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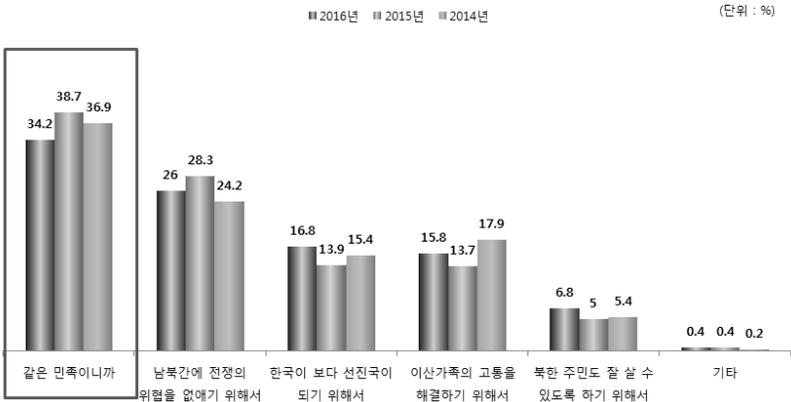
통일정책과 관련된 헌법 내용에 대해 응답자의 모든 계층에서 70% 이상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다만 강원지역의 경우 35.5%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서울(14.6%), 대전/충청(13.5%), 광주/호남(12.9%)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또한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12.8%), 고졸(15.8%), 대졸 이상(23.1%) 그리고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11.2%), 200~400만원 미만(15.9%), 400만원 이상(22.7%)으로 조사되어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통일정책 관련 헌법 내용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통일의 이유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답변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북 간에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26.0%)’,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16.8%)’,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15.8%)’,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6.8%)’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민족 동질성을 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연령별로 60세 이상(37.0%),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48.7%), 정치적으로는 보수(39.6%)인 응답자에서 동질성 회복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다. 반면 40대(30.4%), 서울(24.6%), 진보(31.6%)인 응답자에게서는 동질성에 대한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동질성 회복을 작년 조사에서는 서울 지역이 가장 높았고 20대가 가장 낮은 응답을 한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 지역과 40대 응답자가 가장 낮은 선택을 한 특징이 있다.

통일의 이유를 민족 동질성 회복,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라는 당위적

그림 II-4 > 통일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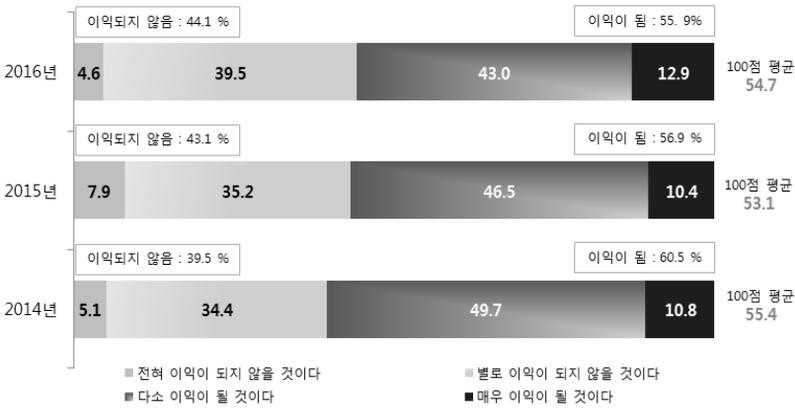


차원의 이유와 남북 간 전쟁위협 제거, 그리고 한국의 선진국 진입이라는 도구적 차원의 이유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당위적 차원에 기반을 둔 이유(50.0%)가 도구적 차원에 기반을 둔 이유(42.8%)보다 높았지만 당위적 이유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2014년 54.8%, 2015년 52.4%, 2016년 50.0%) 도구적 이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14년 39.6%, 2015년 42.2%, 2016년 42.8%). 2015년 조사에서는 세대가 올라갈수록 당위적 이유에 대한 선호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당위적 이유에 대해 40대(45.4%)가 가장 낮은 선호를 보였고 40대와 50대(50.6%)의 선호가 30대(50.8%)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모두 당위적 이유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으나 대도시의 경우 당위적 이유(46.8%)와 도구적 이유(44.2%)의 선호가 비슷한 반면 중소도시(당위적 이유 50.3%, 도구적 이유 43.5%)와 읍/면(당위적 이유 67.2%, 도구적 이유 30.2%)의 경우는 두 이유에 대한 선호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진보와 중도는 두 이유의 비율이 비슷하지만 정치적 보수의 경우는 당위적 이유가 도구적 이유의 선택비율보다 10% 이상 높았다.

(5) 통일의 편익

통일이 국가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55.9%(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12.9% +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43.0%)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44.1%(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6% +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9.5%)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통일이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2015년(56.9%) 대비 1.0%, 2014년(60.5%) 대비 4.6% 하락하였다.

그림 II-5 통일외 국가에 대한 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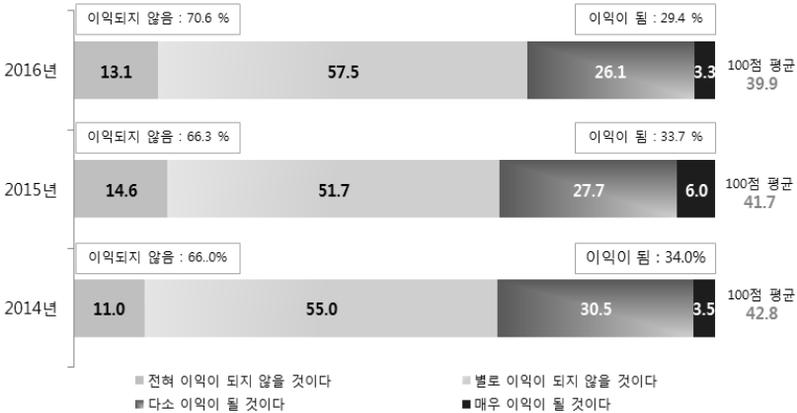
조사 결과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본 통일의 유용성에 대해 성별, 세대별, 권역별, 정치이념별 편차가 관찰되었다. 남성(58.4%, 56.4점)이 여성(53.5%, 53.1점)보다 통일이 국가에 주는 이익을 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고 20대(52.2%, 48.7점)가 통일 유용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60대(59.6%, 57.2점)가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세대가 올라갈수록 통일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반응이었으나 40대(58.5%)가 50대(56.6%)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반응을 보인 특징이 있다. 권역별로는 강원 지역 응답자 중 74.2%(66.7점)가 통일이 국가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대구/경북 지역은 40.6%(45.5점)만이 통일이 국가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진보(56.9%, 54.6점)와 중도(53.0%, 53.0점) 성향의 응답자보다 보수(59.3%, 57.5점) 성향의 응답자가 통일이 국가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29.4%(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3.3% + 다소 이익이 될

- I
- II
- III
- IV
- V

것이다: 26.1%)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70.6%(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13.1% +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57.5%)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2015년(66.3%) 대비 4.3%, 2014년(66.0%) 대비 4.6% 상승하였다. 결국 집합적인 관점에서는 통일이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지만 통일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하였다.

그림 II-6 > 통일의 개인에 대한 편익



개인 이익의 관점에서 본 통일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본 유용성에 비해 성별, 세대별, 권역별, 정치이념별 편차가 크지 않았다. 다만 여성(75.5%, 37.5점)이 남성(65.5%, 42.3점)에 비해 통일이 개인에게 주는 이익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의 8.9%(28.1점)만이 통일이 개인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부정적이었다. 정치적으로 중도(26.1%, 37.2점)성향의 응답자가 진보(32.9%, 41.8점) 및 보수

(30.5%, 41.8점)성향의 응답자보다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83.5%(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30.9% +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52.6%)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16.5%(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1% +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13.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전 계층에서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7 > 통일의 북한 주민에 대한 편익



다만 권역별, 지역 크기별로 응답의 편차가 존재했는데 대전/충청의 경우 92.1%의 응답자가 통일은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7.9%만이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으나 광주/호남의 경우 55.8%만이 통일은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답하고 44.2%의 응답자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그리고 지역 크기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95.0%, 75.5점)의 응답자가 대도시(82.9%, 68.4점) 및 읍/면(90.5%, 77.7점)의 응답자에 비해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 주는 이익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긍정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통일의 시기와 방식

통일시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6.5%가 ‘속도 조절

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굳이 통일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7.0%, '가능한 빨리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이 16.5%로 나타났다.

그림 II-8 > 통일의 시기



조사 결과 응답자 전 계층에서 통일은 '속도 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 50대(70.2%), 권역별로 대구/경북(87.1%)의 응답자가 통일은 '속도 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통일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4%가 '협상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선호했으며 '돌발 상황에 의한 급진적 통일'은 25.1%로 나타났다.

그림 II-9 > 통일의 방식



응답자 전 계층에서 '통일은 협상에 의한 점진적 통일' 방식이 적합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76.3%)가 협상에 의한 점진적 통일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고 20대의 경우 '돌발상황에 의한 급진적 통일'을 선호하는 응답이 28.1%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진적 통일방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권역별로는

제주(91.7%)가 점진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86.9%)과 강원(80.6%)이 그 뒤를 이었다. 모든 지역에서 점진적 통일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기는 했지만 급진적 통일방식에 대해서는 대전/충청(37.5%), 부산/울산/경남(36.5%), 대구/경북(29.7%) 순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정치적 이념성향별로는 진보(77.0%)성향의 응답자가 보수(73.8%)나 중도(73.4%)성향의 응답자에 비해 점진적 통일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통일을 위한 국내외적 조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21.9%)’, ‘정부와 시민단체 간 협력 강화(16.2%)’, ‘통일교육 확대(9.3%)’, ‘언론의 민족 화합지향적 보도(4.4%)’가 그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연령층은 20대가 55.6%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30대(48.1%), 40대(48.3%), 50대(48.0%)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60대 이상의 응답자는 42.6%로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또한 40대를 제외한 전(全) 세대의 응답자가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가 ‘정부와 시민단체 간 협력강화’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40대의 경우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있어서 ‘정부와 시민단체 간 협력강화’가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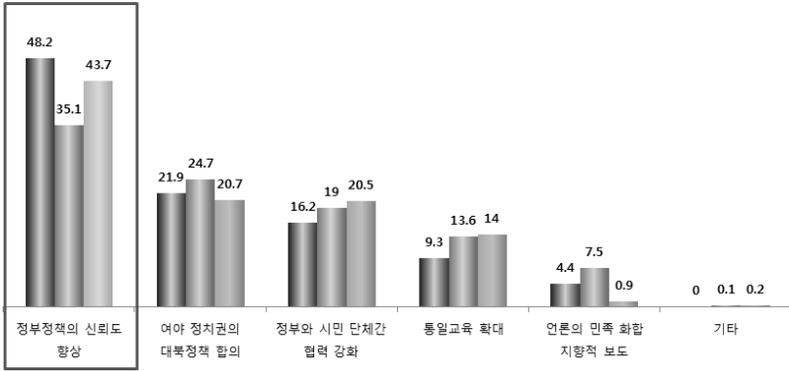
권역별로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의 중요성에 대해 대구/경북 응답자 중 73.3%가 지지하였으나 대전/충청은 27.9%만이 지지하였다. 대전/충청의 경우 정부정책 신뢰도 향상(27.9%), 여야 정치권의 대북

I
II
III
IV
V

그림 II-10 통일을 위한 국내적 조건

■ 2016년 ■ 2015년 ■ 2014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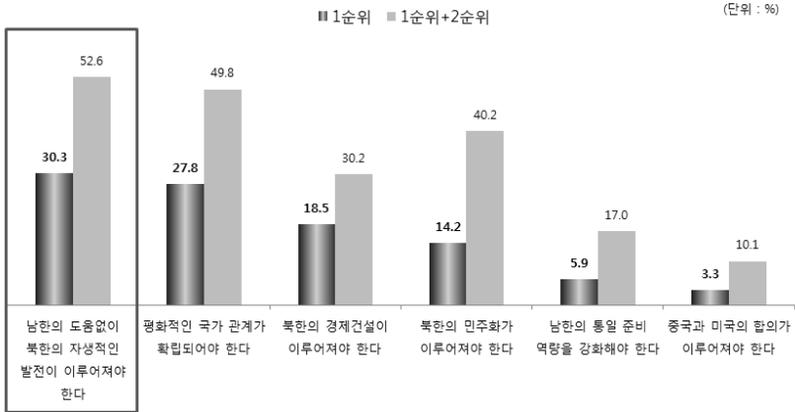
정책 합의(25.0%), 정부와 시민단체 간 협력강화(24.0%) 항목이 모두 고른 지지를 받아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을 나타냈다.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 응답은 2014년, 2015년과 마찬가지로 1순위로 나타났고 2015 조사 대비 13.1% 상승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 신뢰도가 떨어졌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 항목에 대한 응답이 다른 항목의 응답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국민들도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이다.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자가 1순위로 꼽은 것은 ‘남한의 도움 없이 북한의 자생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가 30.3%로 가장 높으며, ‘평화적인 국가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27.8%)’, ‘북한의 경제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18.5%)’,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14.2%)’, ‘남한의 통일 준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5.9%)’, ‘중국과 미국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3.3%)’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꼽은 항목을 보면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

다'가 26.0%로 '남한의 도움 없이 북한의 자생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22.3%)와 '평화적인 국가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22.0%)'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1순위 응답과 2순위 응답을 모두 고려하였을 경우 국민들은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남한의 도움 없이 북한의 자생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적인 국가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북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1 > 통일을 위해 필요한 환경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별로 선호하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서울, 인천/경기, 강원 응답자의 경우는 북한의 자생적 발전보다는 평화적인 국가 관계가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대전/충청, 광주/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북한의 자생적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리적으로 북한과 근접한 지역의 주민일수록 충청이남 지역의 주민들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남북한

- I
- II
- III
- IV
- V

간 평화적 관계가 통일에 있어서 제일 우선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남성의 경우 북한의 자생적 발전(29.2%)과 평화적인 국가 간의 관계(29.2%)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같았으나 여성의 경우는 북한의 자생적 발전에 대한 응답이 더 높았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험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 10명 중 6명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2014년 조사 이후 통일의 필요성 공감대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인식은 국민들 사이에 긍정적, 부정적 인식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연령별로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존재하였다. 50대와 60대의 경우 통일의 긍정적 이미지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으나 20대와 30대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통일을 반드시 이를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또한 통일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국민들의 80% 이상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의 중요성 및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통일의 이유로서 민족동질성 회복 같은 당위적 이유를 선택하는 비율이 여전히 전쟁위험 제거와 같은 도구적 이유를 선택한 비율보다 높았지만 해마다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시 크기가 작아질수록, 보수성향의 응답자일수록 당위적 이유를 더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당위적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국민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4년, 201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통일이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더 우세하였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국가 차원, 개인 차원 모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서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통일이 북한 주민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 통일이 되면 ‘나’의 손실이 ‘북한 주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인식이 결국에는 남북통합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비율이 66.5%에 달하고 굳이 통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17.0%로 조사되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현재 통일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70% 이상은 ‘협상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충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만 6:4 비율이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7:3 이상의 비율로 점진적 통일 방식을 선호하였다. 이는 국민들 사이에 통일 방식에 대해서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민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과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를 꼽았다.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 응답은 2015 조사 대비 13.1% 상승한 점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국민들도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이다.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남한의 도움 없이 북한의 자생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적인 국가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순으로 선택되었으나 북한과 근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평화적 국가 관계를 북한의 자생적 발전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리적 차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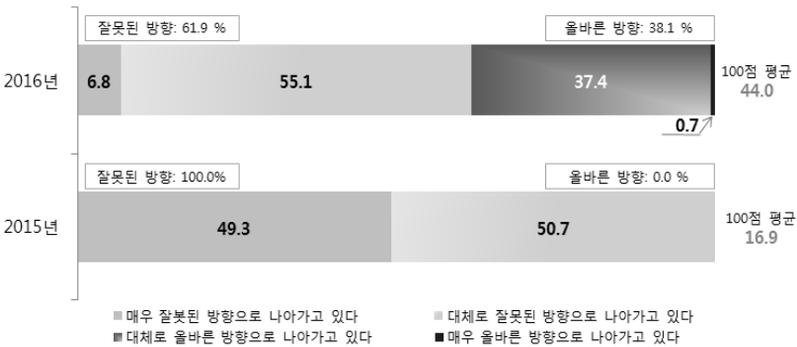
I
II
III
IV
V

나. 통일국가에 대한 비전

(1) 국가의 방향성

한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38.1%(매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0.7% +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37.4%)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응답은 61.9%(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6.8% + 다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55.1%)로 조사되었다. 2015년 조사에서는 올바른 방향(50.7%)과 잘못된 방향(49.3%)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잘못된 방향에 대한 응답 비율이 훨씬 높아졌음이 관찰되었다.

그림 II-12 한국 발전 방향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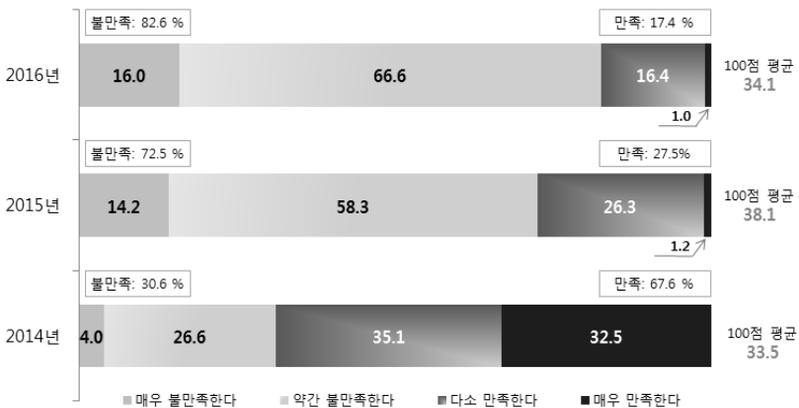
이번 조사 결과 60대만 ‘올바른 방향’과 ‘잘못된 방향’의 응답 비율이 비슷하였고 60대를 제외한 전(全) 연령대에서 ‘잘못된 방향’의 응답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권역별로는 제주의 경우만 ‘올바른 방향’이 58.3%, ‘잘못된 방향’이 41.7%를 기록하였을 뿐 모든

지역에서 '잘못된 방향'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잘못된 방향'(76.3%)의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가 긍정적인 응답자에 비해 2배가량 한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념성향이 보수인 응답자가 정치적으로 진보와 중도인 응답자보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컸다.

(2) 경제상황에 대한 전반적 평가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82.6%(매우 불만족한다: 16.0% + 다소 불만족한다: 66.6%)로 '만족한다' 17.4%(매우 만족한다: 1.0% + 다소 만족한다: 16.4%)는 응답보다 약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00점 환산 평균으로 34.1점을 기록해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13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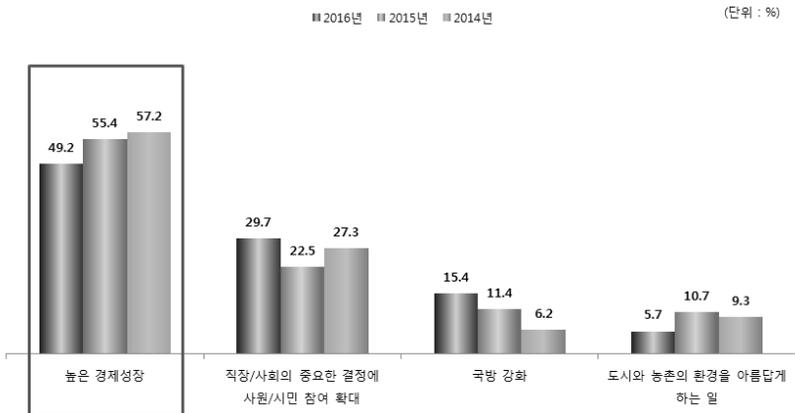
조사 결과 20대부터 50대까지는 10%대의 만족도를 기록한 반면 60대만이 23.5%의 만족도를 보여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족도는 소도시(읍/면)에서 가장 높았고 권역별로는 광주/호남, 강원, 서울 지역에서 높게 관찰되었고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가 긍정적인 응답자보다 경제상황 만족도가 낮았으며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정치이념별로는 진보성향의 응답자가 보수나 중도성향의 응답자에 비해 불만족도 응답비율이 높았다.

(3) 향후 10년 한국 사회의 중요한 목표- 그룹1

향후 10년간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발전과 안정’, ‘거버넌스 및 사회적 가치’, 그리고 ‘물질적 가치와 탈물질적 가치’ 부문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응답자는 각 분야별 4개의 목표 중 1순위와 2순위를 선택하였다.

먼저 ‘발전과 안정’ 부문에서 한국 사회가 향후 10년간 지향해야 할

그림 II-14 ▶ 발전과 안정 부문에서의 목표



목표로 응답자의 49.2%가 ‘높은 경제성장 유지’를 꼽았으며 ‘직장, 사회의 중요한 결정에 사원/시민 참여확대’(29.7%), ‘국방 강화’(15.4%), ‘도시와 농촌의 환경을 아름답게 하는 일’(5.7%)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면 2015년 조사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 유지’, ‘개인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 ‘환경개선’, ‘국방 강화’ 순이었으나 2016년 조사에서는 ‘높은 경제성장 유지’(74.6%), ‘개인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56.0%), ‘국방 강화’(47.5%), ‘환경개선’(21.9%)를 기록하여 여전히 경제성장과 민주적 질서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국방 강화에 대한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각 수준에서 ‘높은 경제성장 유지’를 한국 사회의 향후 10년간 목표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소도시(읍/면)와 대전/충청 지역에서는 ‘개인의 참여와 발언권 확대’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이 ‘높은 경제성장 유지’를 꼽는 비율보다 높았다. 2015년 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의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직장, 사회의 중요한 결정에 사원/시민 참여확대’를 ‘경제성장’에 비해 중요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6년 조사에서는 20대와 30대를 포함 전 연령층에서 ‘높은 경제성장 유지’를 향후 10년간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 1순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국민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2015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높은 경제성장 유지’에 대한 응답률이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 정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고 ‘국방 강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조사에서는 방위력 증강에 대한 의견이 환경개선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을 0.7%p 정도 앞섰지만 2016년 조사에서는 9.7%p 차이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방위력 증강에 대해서는 30대와 60대, 그리고 읍면 거주자, 대구/경북 그리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자들이 타 연령,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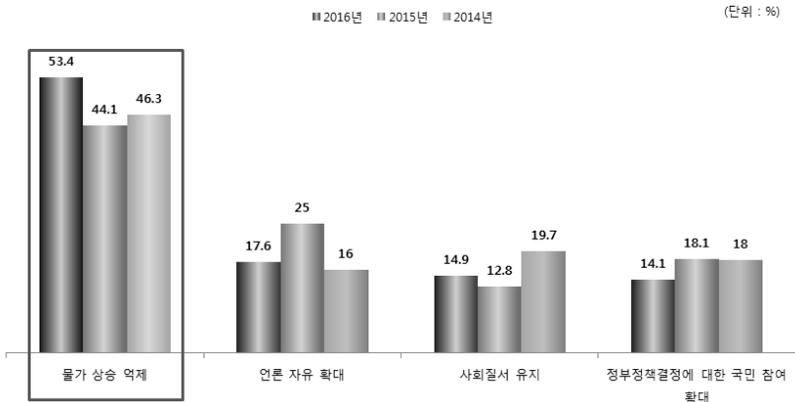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중도 또는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에 비해 ‘국방 강화’를 한국 사회의 중요한 목표로 응답하였다.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 속에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간 긴장 고조 등이 국민들로 하여금 안보 및 국방력 강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4) 향후 10년 한국 사회의 중요한 목표-그룹2

한국 사회가 향후 10년간 지향해야 할 거버넌스 및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목표에 대해서는 53.4%의 응답자가 ‘물가 상승 억제’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서 ‘언론자유 확대’(17.6%), ‘사회질서 유지’(14.9%),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14.1%) 순으로 조사되었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해 보면, ‘물가 상승 억제’(76.0%), ‘사회질서 유지’(51.8%), ‘정부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40.5%), ‘언론자유 확대’(31.7%) 순이었다.

그림 II-15 >> 거버넌스 및 사회적 가치 부문에서의 목표



한국 사회가 향후 10년간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모든 응답자 계층에서 ‘물가 상승 억제’를 꼽은 점은 2014년, 2015년의 조사 결과와 동일했으나 2015년 대비 ‘물가 상승 억제’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9.3% 증가한 반면, ‘언론 자유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7.4% 하락한 점은 현재 한국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가 상승 억제’를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50% 이상이 물가 상승 억제를 선택하였지만 특히 20대의 응답률(56.2%)이 가장 높은 점을 볼 때 청년세대가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과 압박감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권역별로는 서울(63.3%), 주관적 가계상황별로 약화(59.4%)에서 높게 나타났다.

(5) 향후 10년 한국 사회의 중요한 목표-그룹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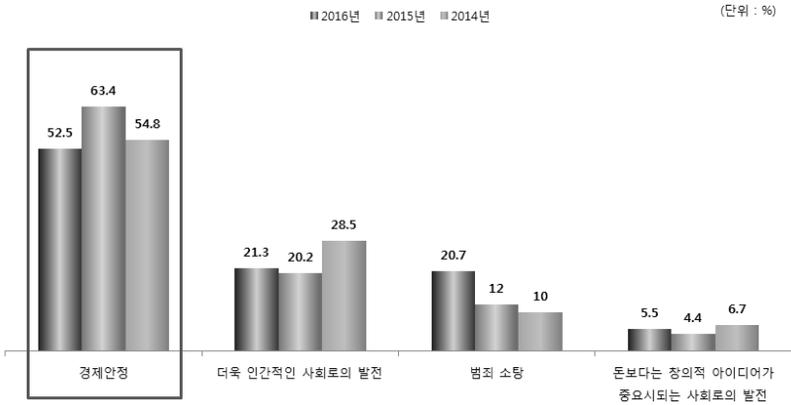
향후 10년간 한국 사회의 중요한 목표 중 세 번째 영역인 ‘물질적 가치와 탈물질적 가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경제안정’(52.5%)을 1순위로 선택하였고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21.3%), ‘범죄소탕’(20.7%), ‘돈보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사회’(5.5%)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선호도 형태를 보였다. ‘경제안정’이 75.1%로 가장 높았고,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53.9%)’, ‘범죄 소탕(48.8%)’, ‘돈보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시되는 사회(22.2%)’ 순이었다.

모든 계층에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10년간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로 ‘경제안정’을 꼽았으며, 지역 크기별로 중수도시(56.9%), 권역별로 강원(74.2%), 학력별로 중졸 이하(59.5%)에서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조사와 비교할 때 전반적 선호도의 변화는 없었으나 2015년에

I
II
III
IV
V

그림 II-16 물질적/탈물질적 가치 부문에서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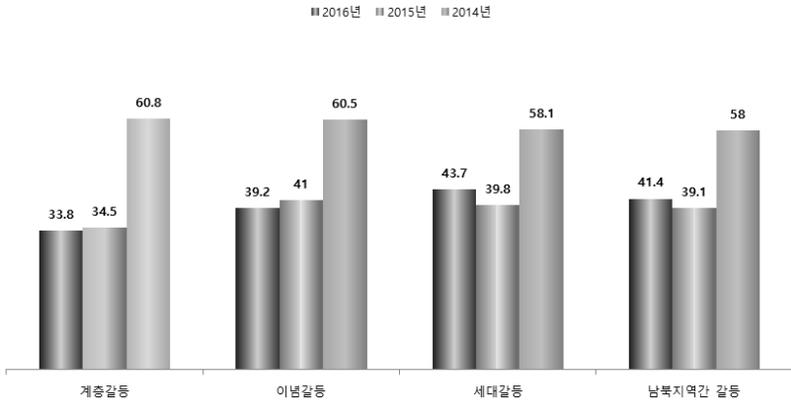


비해 ‘경제안정’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10.9%p 하락한 반면 ‘범죄 소탕’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8.7%p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들 사이에 경제적 불안감이 여전히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지만, 최근 물자마 범죄, 여성대상 범죄,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졌고 이에 보다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6) 통일 이후 사회갈등 예측

통일 이후 부문별 갈등 양상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통일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국민들은 통일한국에서의 사회적 갈등 수준에 대해 남북 지역 간 갈등(42.0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세대갈등(41.9점), 이념갈등(39.5점), 그리고 계층갈등(39.2점) 순으로 갈등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II-17 > 통일 이후 부문별 갈등 양상 예측



2016년 조사 결과는 2014년과 2015년 조사와는 국민들의 응답 방향이 정반대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모든 갈등에 대해서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 전망이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부정적 전망보다 월등히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나 2016년의 경우에는 전 갈등 부문에서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 전망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북 지역 간 갈등’의 경우 권역별로 대전/충청 지역에서만 갈등의 정도가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을 뿐, 전 지역,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 이념성향 별 응답자 특성과 상관없이 ‘남북 지역 간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2015년의 경우 ‘남북 지역 간 갈등’에 대해 8.5%만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2016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6.1%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답하였고 갈등의 정도가 나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68.2%에서 2016년 22.3%로 급감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 이러한 응답 패턴은 모든 갈등 부문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全) 갈등 부문에서 갈등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 I
- II
- III
- IV
- V

것이라는 응답은 2015년에 비해 최소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평화와 화합과 같은 긍정적 측면보다는 경쟁과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통일 후 사회통합의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게 하는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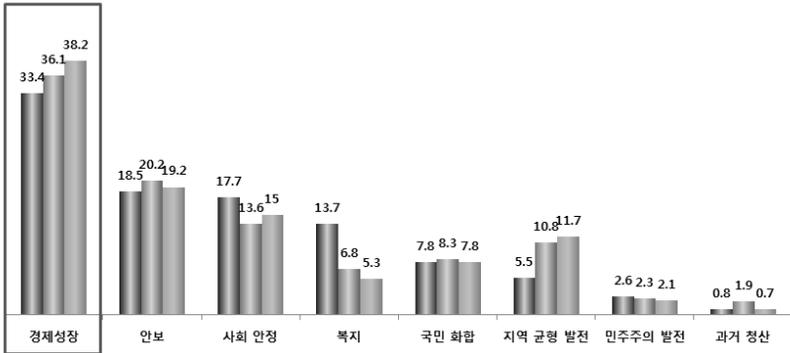
(7) 통일한국의 우선 목표

통일한국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목표들 중 1순위는 ‘경제성장’이 33.4%로 가장 높았고, ‘안보’(18.5%), ‘사회 안정’(17.7%), ‘복지’(13.7%)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친 결과를 보면 ‘경제성장’(54.5%), ‘사회안정’(39.1%), ‘안보’(38.6%), ‘복지’(28.0%) 순이었다.

그림 II-18 통일한국의 목표

■ 2016년 ■ 2015년 ■ 2014년

(단위 : %)



‘경제성장’의 경우 2014년, 2015년과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목표 1순위로 선택되었으나 응답비율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복지’의 경우 응답률이 2015년 대비 6.9%p

높아졌다.

응답자가 1순위로 선택한 항목들을 비교해 보면,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그룹에서 ‘경제성장’을 통일한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연령별로는 60대,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구/경북, 월평균 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경제성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대졸 이상이고, 소득이 높고 진보성향인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안정’을 통일한국의 목표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경제성장’을 통일 후에도 가장 중요시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안정’과 ‘복지’ 부문이 상승한 점 또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8) 통일 시 국가와 국민들이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 1

통일 시 국가와 국민들이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 중 1순위는 ‘공정함’이 44.1%로 가장 높았고, ‘상호 돌봄’(33.0%), ‘권위존중’(14.6%), ‘충성심’(7.7%)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는 ‘공정함’(75.7%), ‘상호돌봄’(58.8%), ‘권위존중’(42.8%), ‘충성심’(19.7%) 순으로 조사되어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다.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수그룹에서 ‘공정함’이라는 응답이 1순위로 선택 되었으며, ‘공정함’을 통일한반도 국가와 국민들이 추구해야 할 1순위 가치로 응답한 비율은 연령별로 30대(46.5%), 권역별로 제주(58.3%)와 광주/호남(53.5%),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49.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공정함’을 통일 시 국가와 국민들이 추구해야 할 1순위 가치로 선택하였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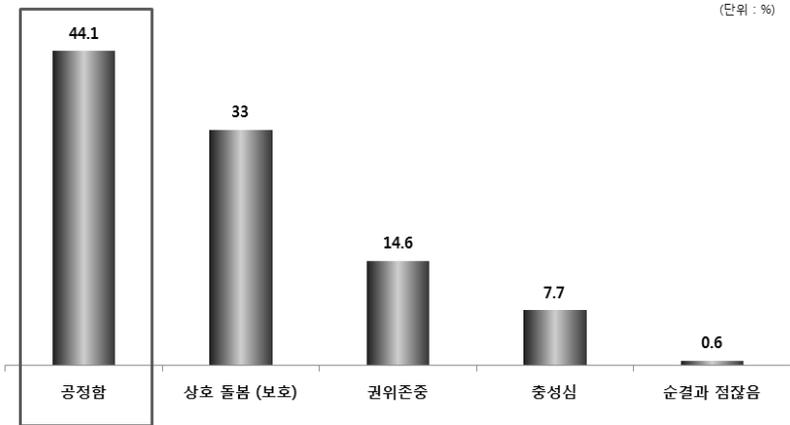
II

III

IV

V

그림 II-19 통일 시 국가와 국민들이 추구할 가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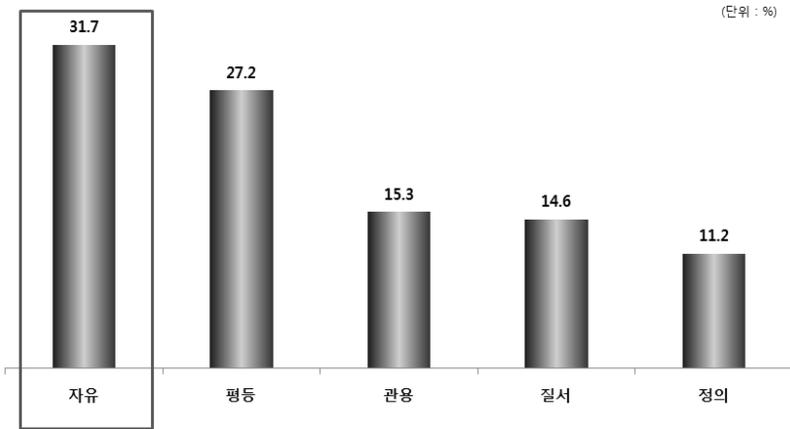


(9) 통일 시 국가와 국민들이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 2

통일 시 국가와 국민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중 '자유'가 31.7%로 가장 높았고 '평등'(27.2%), '관용'(15.3%), '질서'(14.6%) 순으로 조사되었다.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는 1순위 조사와는 다른 가치 선호도를 보였는데 '평등'이 56.2%로서 가장 높은 가치로 꼽혔고 이어서 '자유'(49.0%), '정의'(32.4%), '질서'(31.9%), '관용'(30.4%)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통일 이후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자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별로 40대, 권역별로 서울, 대구/경북, 제주, 주관적 가계 상황이 악화된 층에서는 '자유'보다 '평등'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자유'를 1순위 가치로 응답한 비율은 학력별로 고졸(33.6%), 국정운영평가별로 긍정(37.0%)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20 통일 시 국가와 국민들이 추구할 가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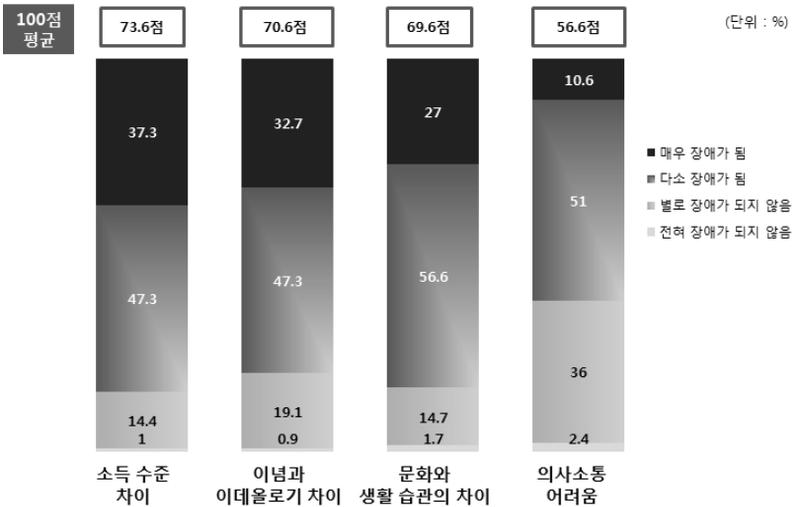
(10) 통일 이후 통합 장애 요인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에 대해 '소득 수준의 차이'가 7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차이'(70.6점),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69.6점), '의사소통의 어려움'(56.6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조사에서는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차이'라는 응답이 1순위로 평가되고 '소득 수준의 차이'의 경우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에 이어 3순위 응답률을 기록했으나 2016년의 경우는 '소득 수준의 차이'가 1순위로 평가되어 현재 한국 국민들은 경제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통일대박론'에 이은 통일편익 연구에 대한 결과가 국민에게 홍보되지 않아 국민의 인식 속에는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일비용 문제를 부담스러워 하거나 통일 이후 남북한 간 경제적 수준 격차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I
II
III
IV
V

그림 II-21 통일 이후 통합 장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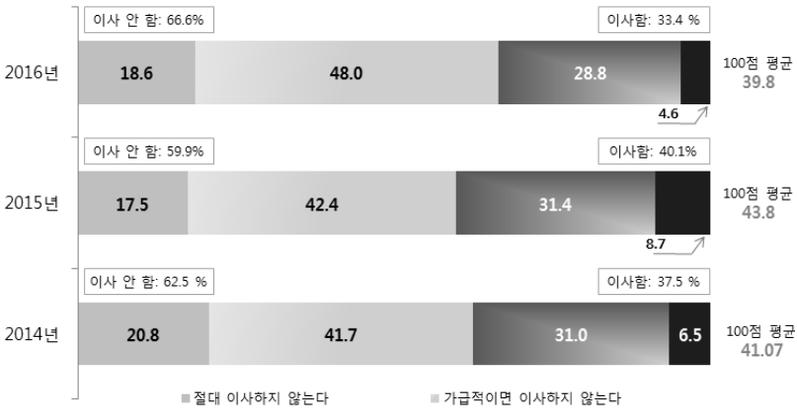
2015년과 비교할 때 ‘소득 수준의 차이’는 100점 평균 환산으로 7.6점 증가하였으며,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4.8점, ‘문화와 생활습관의 차이’는 2.0점 감소하였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10.8점 증가하였다.

(11)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이주 의향

통일 후 직장 또는 결혼 등의 이유로 북한 지역으로 이주해야 될 경우 ‘이사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3.4%(기꺼이 이사한다: 4.6% + 불가필한 경우 이사한다: 28.8%)로 ‘이사하지 않는다’ 66.6%(절대 이사하지 않는다: 18.6% + 가급적이면 이사하지 않는다: 48.0%)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사한다’는 응답은 2015년(40.1%) 대비 6.7% 감소하였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치안 확보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1/3가량이 북한 이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결코 적은 응답률이라 할 수 없다. 다만 통일

그림 II-22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이주 의향



시대를 이끌고 갈 20대의 경우 전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은 70.2%가 '북한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하여 젊은 세대에게 북한 지역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의 2/3 정도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60대와 제주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 전 지역에서 한국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며 진보나 중도성향의 국민들이 한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82.6%가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어 경제요인이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국민은 향후 10년간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로 '발전과 안정' 영역에서는 '높은 경제성장 유지', '거버넌스 및 사회적 가치'

- I
- II
- III
- IV
- V

영역에서는 ‘물가 상승 억제’, ‘물질적 가치와 탈물질적 가치’에 대해서는 ‘경제안정’을 선택하였다. 이 결과는 현재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경제 관련 이슈임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201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결과 ‘좀 더 인간적인 사회로의 발전’과 ‘직장/사회의 중요한 결정에 사원/시민 참여확대’가 중요하게 인식된 것은 경제 우선주의에 기초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인간적인 삶 또는 함께하는 사회와 같은 따뜻한 이미지의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바람이 큼을 의미한다.

2014년, 2015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국방 강화’에 대한 응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제 분야를 제외한 항목에서 ‘범죄소탕’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방 강화’에 대한 관심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간 긴장 고조 등이 국민들로 하여금 안보 및 국방력 강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범죄소탕’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최근 문지마 범죄, 여성대상 범죄,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졌고 이에 보다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불안정한 치안 및 사회질서로 인해 삶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통일한국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목표들 중 1순위로 ‘경제 성장’을 꼽았으며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소로 ‘소득 수준의 차이’를 1순위로 선택하여 통일 이후 경제문제가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국민들이 향후 10년간 목표로 경제문제를 선택하고 통일한 국에서도 경제문제를 선택했다는 점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족도

가 그만큼 크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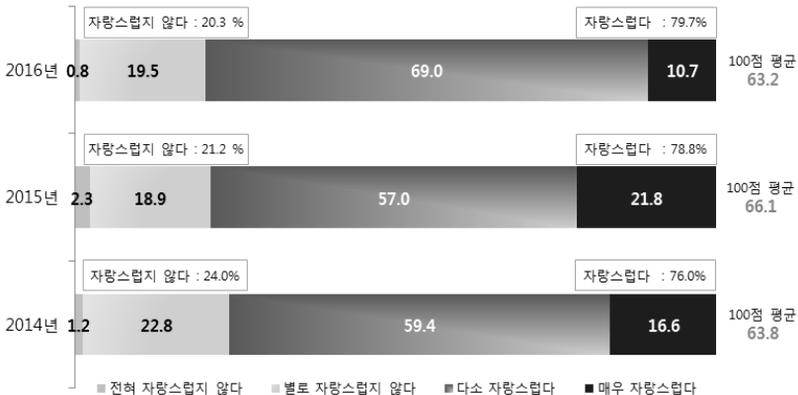
2. 통합역량

가. 사회적 자본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조사하기 위해 ‘귀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자랑스럽다’고 답한 응답자가 79.7%(매우 자랑스럽다: 10.7% + 다소 자랑스럽다: 69.0%)로 ‘자랑스럽지 않다’는 20.3%(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0.8% +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19.5%)보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78.8%) 대비 0.8% 소폭 상승하였고 2014년(76%) 대비 3.7% 상승하였다.

그림 II-23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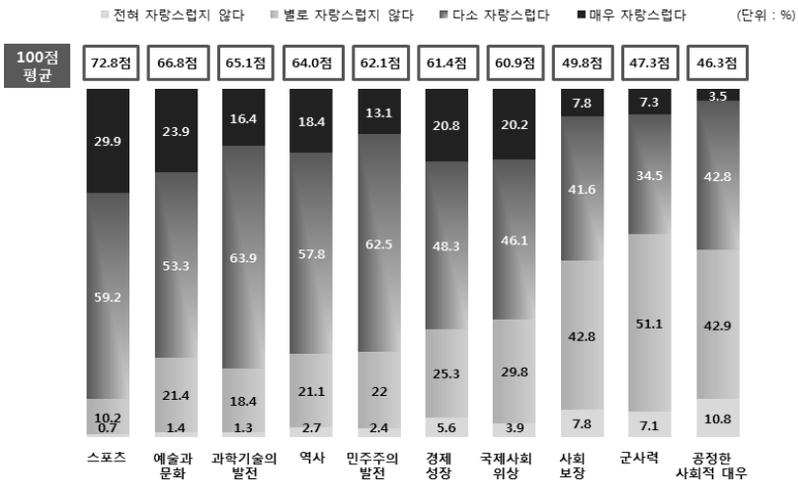
성별로는 여성이 느끼는 자긍심(81.5%, 63.4점)이 남성이 느끼는 자긍심(77.9%, 62.9점)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90.0%, 69.6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대(73.0%, 59.9점)의 경우 30대(71.1%, 58.8점)보다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는 정도가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권역별로는 대전/충청(93.3%, 67.3점), 강원(87.1%, 72.0점), 대구/경북(83.2%, 66.7점)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중졸 이하(86.5%, 69.4점), 국정운영평가별로 긍정(91.7%, 68.8점), 월평균 소득별로 200만원 미만(87.6%, 69.3점), 이념성향별로 보수(85.5%, 66.3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영역별 자부심

국민으로서의 종합적 자긍심 조사에 이어 10개의 구체적 영역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구체적 영역에 대한 자긍심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의 유형과 계층별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결과 ‘스포츠’ 영역은 72.8점으로 국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으며 ‘예술과 문화(66.6점)’, ‘과학기술의 발전(65.1점)’, ‘역사(64.0점)’, ‘민주주의 발전(62.1점)’, ‘경제성장(61.4점)’, ‘국제사회 위상(60.9점)’ 순으로 자랑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사회보장(49.8점)’, ‘군사력(47.3점)’, ‘공정한 사회적 대우(46.3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긍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2014년과 2015년 조사와 대비하였을 때, ‘민주주의 발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군사력’ 영역의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이 영역들을 제외한 ‘스포츠’, ‘예술과 문화’, ‘과학기술의 발전’, ‘역사’, ‘경제성장’, ‘사회보장’, ‘공정한 사회적 대우’ 등의 영역은 점수가 하락하였다.

조사 결과 영역별 국민의 자긍심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세대별로 ‘스포츠’, ‘예술과 문화’, ‘과학기술의 발전’ 및 ‘역사’와 같은 비정치 영역에서는 자긍심 정도의 편차가 크지 않으나 ‘민주주의 발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경제성장’, ‘사회보장’과 같은 정치/경제 영역에서는 20대와 30대의 자긍심이 50대와 60대의 자긍심보다 낮았으며 4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의 자긍심을 보였다. 그리고 이번 조사의 특징은 2015년 조사와는 달리 ‘공정한 사회적 대우’ 영역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자긍심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20대(자랑스럽다 38.2%, 41.6점)와 60대 이상(자랑스럽다 57.0%, 53.3점)이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공정한 사회적 대우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아울러 2015년 조사에 비해 ‘사회보장’과 ‘공정한 사회적 대우’와 같은 분배와 균형 영역의 점수가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사회적 논쟁의 핵심이슈인 복지와 청년실업률 문제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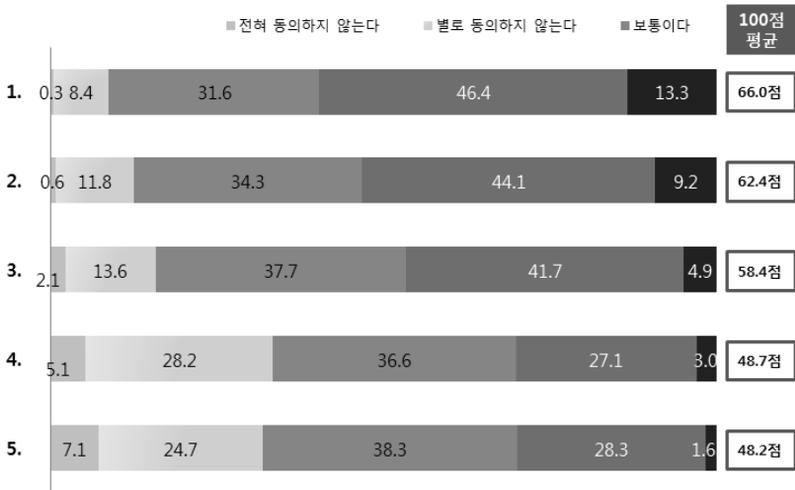
그림 II-24 국가에 대한 영역별 자긍심



(3) 애국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애국심과 관련된 항목 평가에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걸 보면 기분이 좋다’(59.7% 동의, 66.0점)가 가장 높으며,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은 정체성(나는 누구인가)에 중요한 부분이다(53.3% 동의, 62.4점)’, ‘나는 정부의 결정에 때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나의 헌신은 언제나 강하다(46.6% 동의, 58.4점)’, ‘나에게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30.1% 동의, 48.7점)’, ‘나는 어린이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과 같은 강한 애국심을 강요하는 행위를 보는 것이 불편하다(동의 29.9%, 48.2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5 애국심 평가



1. 나는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다
2.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은 정체성(나는 누구인가)에 중요한 부분이다
3. 나는 정부의 결정에 때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나의 헌신은 언제나 강하다
4. 나에게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5. 나는 어린이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과 같은 강한 애국심을 강요하는 행위를 보는 것이 불편하다

동의율이 가장 높은 항목인 ‘나는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다’는 연령별로 60세 이상(동의 71.3%, 71.8점), 권역별로 강원(동의 77.4%, 79.8점), 대전/충청(동의 75%, 70.4점), 대구/경북(동의 73.3%, 73.8점)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국정운영평가별로 긍정(동의 74.0%, 72.5점) 인식층이 부정(동의 54.6%, 63.7점) 인식층보다 더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그리고 이념성향별로는 보수(동의 68.7%, 69.7점), 중도(동의 57.5%, 65.1점), 진보(동의 54.6%, 63.9점) 순으로 나타났다.

동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인 ‘나는 어린이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과 같은 강한 애국심을 강요하는 행위를 보는 것이 불편하다’는 학력이 높을수록 동의율이 낮았고, 이념성향별로는 진보(동의 34.2%, 50.2점), 중도(동의 29.7%, 48.2점), 보수(동의 25.5%, 45.9점) 순으로 애국심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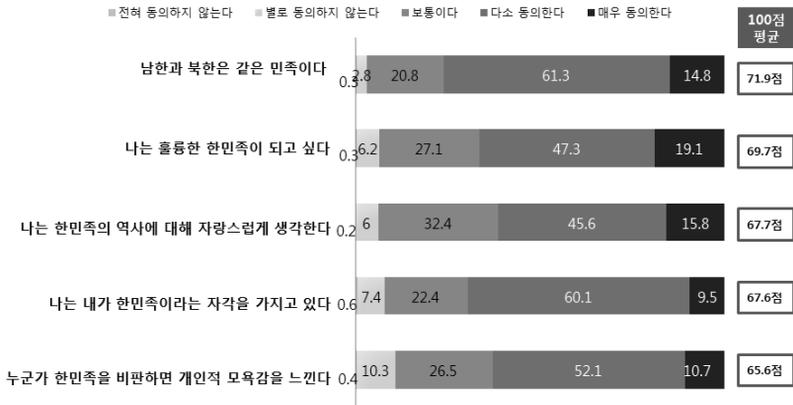
(4) 민족 정체감

한민족에 대한 인식 평가에서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다’가 71.9 점으로 가장 높으며, ‘나는 훌륭한 한민족이 되고 싶다’(69.7점), ‘나는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67.7점), ‘나는 내가 한민족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다’(67.6점), ‘누군가 한민족을 비판하면 개인적 모멸감을 느낀다’(65.6점) 순으로 나타났다.

동의율이 가장 높은 항목인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다’는 남성(73.1점)이 여성보다(70.7점)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권역별로는 강원(79점)과 인천/경기(74.5점)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율을 보이는 특징을 보였다.

I
II
III
IV
V

그림 II-26 한민족에 대한 인식 평가



(5) 삶의 만족도

본인 삶에 대한 태도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가 56.4점으로 평가되어 가장 높았고,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54.5점),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53.4점),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52.1점),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47.4점) 순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인 항목에서 평가가 50점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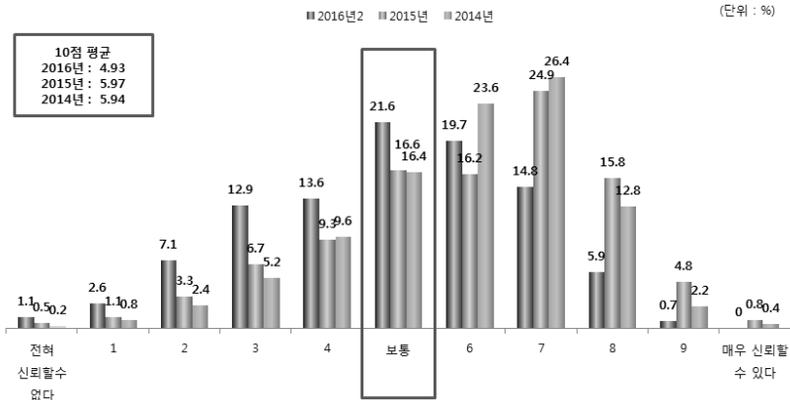
동의율이 가장 높은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라는 항목을 살펴보면 60세 이상(60.9점)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50점대의 점수를 보여 사회의 모든 연령층이 자신의 인생이 이상적인 모습과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역 크기별로는 읍/면(63.4점), 중소도시(56.9점), 대도시(54.8점) 거주 응

답자 순으로 이상적인 인생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서울, 경기/인천)에 거주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이상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의 응답자(55.1점)가 200만원 미만(59.9점) 또는 400만원 이상(57.2점) 응답자보다 이상적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을 하여 경제적 중산층이 다른 계층보다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우리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는 11점 척도(0점: 전혀 신뢰할 수 없다, 10점: 매우 신뢰할 수 있다) 기준으로 4.93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4년(5.94점), 2015년(5.97점)에 비해 각각 1.01점과 1.04점 하락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21.6%가 '5점'에 응답하였고 '6점' 이상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41.1%에 불과했다. 2015년 조사에서는 '7점'에 응답한 응답자가 24.9%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6점' 이상

그림 II-27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으로 응답한 응답자도 62.5%였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 간 우리 사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급격하게 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사회에 대해 여성(5.00점)이 남성(4.86점)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20대(4.62점)와 30대(4.56점)의 신뢰도는 60대(5.37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념성향별로는 보수(5.25점)성향의 응답자가 중도(4.83점)나 진보(4.78점)성향의 응답자보다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해서 높은 신뢰감을 보이고 있고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계층(5.96점)이 부정적 인식을 하는 계층(4.56점)보다 우리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바라보고 있었다.

(7) 기관별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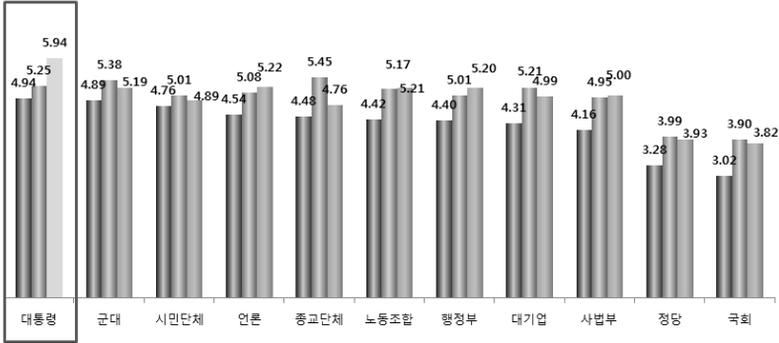
기관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점대의 신뢰도를 기록하여 2015년 조사 대비 전반적인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기관별 신뢰도는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4.9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군대’(4.89점), ‘시민단체’(4.76점), ‘언론’(4.54점), ‘종교단체’(4.48점)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정당’(3.28점)과 ‘국회’(3.02점)는 3점대의 점수를 기록하며 11개 기관 중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전반적인 기관 신뢰도를 살펴보았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신뢰도가 높았으며 60대의 신뢰도가 20대와 30대의 신뢰도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학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보수의 신뢰도가 중도나 진보의 신뢰도보다 높았다.

2015년 대비 11개 기관 모두 작년 조사에 비해 신뢰도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하락 폭을 살펴보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0.31점 하락) 하락 폭이 시민단체(0.25점 하락) 다음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림 II-28 기관별 신뢰도

■ 2016년 ■ 2015년 ■ 2014년

(10점 평균 : 점)



종교단체(0.97점 하락), 대기업(0.9점 하락), 그리고 국회(0.88점 하락) 순으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의 갑질 논란과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 대인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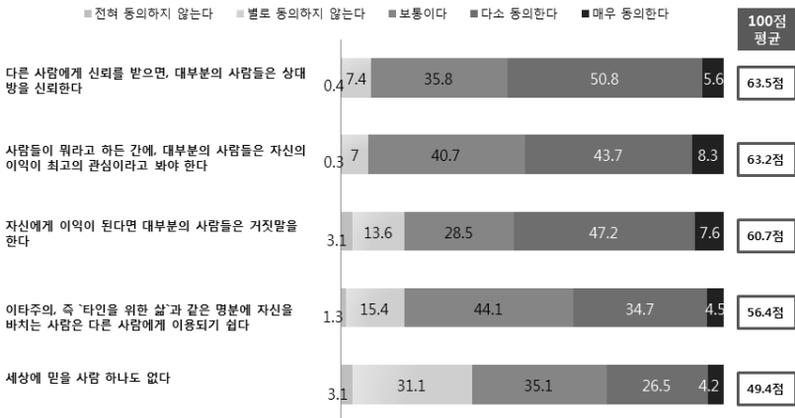
신뢰와 관련된 인식 평가에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신뢰한다’가 63.5점으로 가장 높으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최고의 관심이라고 봐야 한다’(63.2점),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 말을 한다’(60.7점), ‘이타주의, 즉 ‘타인을 위한 삶’과 같은 명분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기 쉽다’(56.4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49.4점) 순으로 평가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신뢰한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권역별로 제주(72.9점), 대구/경북(70.0점), 인천

I
II
III
IV
V

/경기(65.9점)에서, 이념성향별로 보수(66.5점)가 중도(62.6점)나 진보(61.8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최고의 관심이라고 봐야 한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대도시(64.1점)가 중소도시(62.5점)와 읍/면(61.8점)보다 높았고, 대구/경북(72.8점)에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동의 비율이 높았다. ‘이타주의, 즉 ‘타인을 위한 삶’과 같은 명분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기 쉽다’에 동의하는 응답은 20대에서 가장 높았고 학력이 낮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높고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의 응답자가 진보나 중도성향의 응답자보다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에 대해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동의율이 높았다.

그림 II-29 대인 신뢰도



(9)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015년 대비 0.8% 상승한 79.7%를 기록하였고 2014년 조사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역별 자긍심 정도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스포츠, 예술과 문화, 과학기술의 발전, 역사 등에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회보장과 공정한 사회적 대우 분야에서는 낮은 자긍심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정한 사회적 대우 영역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자긍심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세대별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보장과 공정한 사회적 대우 영역이 최하위권에 위치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논쟁이 일고 있는 복지 이슈와 청년실업 문제와 같은 분배와 균형 문제가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임을 반증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정체성 및 애국심과 관련된 항목 평가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층,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지역, 그리고 보수 성향의 응답자 층에서 '국가'라는 개념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고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은 '국가'에 대한 개념을 인위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임에 동의하였고 자신이 '한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비율 또한 높게 조사되었다. 남북한이 한민족이고 자신이 한민족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인식은 향후 남북통합의 과정에서 긍정적 요인을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현재 자신의 인생은 이상적인 모습과 다르다고 응답하였고 수도권 거주, 고학력, 경제적 중산층에서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족도가 높음을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는 4.93점(11점 척도기준: 0~10점)으로 조사되었고, 2014년(5.94점), 2015년(5.97점)에 대비 각각 1.01점과 1.04점 하락하였다. 각 기관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4.9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당(3.28점)과 국회(3.02점)에 대한 신뢰도가 2014, 201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았다. 2015년 조사와 비교할 때, 전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모두 하락하였으나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졌고, 대기업과 국회에 대한 신뢰도 하락 폭이 컸다. 이는 모든 경제영역을 독점하려는 대기업의 행태와 정쟁(政爭)을 일삼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나. 사회적 포용

(1) 사회단체 활동과 기부활동

주요 단체별 소속 현황은 ‘친목단체’, ‘기타 모임이나 단체’, ‘종교단체’ 순으로 소속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단체의 소속은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친목단체’의 경우 ‘소속되어 가끔 활동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43.8%), 연령별로 50~59세(47.5%), 권역별로 대전/충청(46.2%), 주관적 가계성향별로 상승(46.8%)에서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그림 II-30 사회단체 활동과 기부활동

■ 소속된 적이 없음 ■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은 하지 않음 ■ 소속되어서 가끔 활동함 ■ 소속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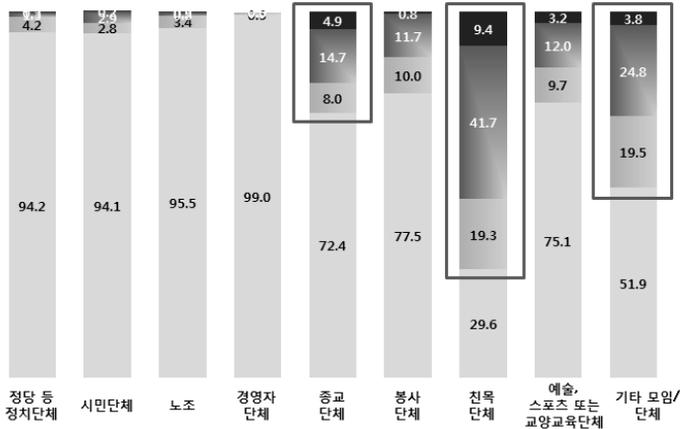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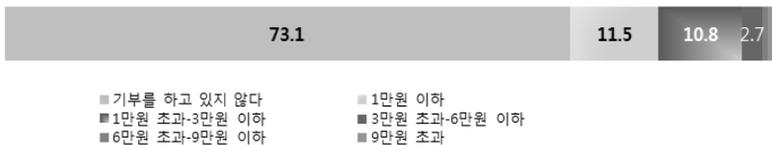


그림 II-31 주요기관에 대한 기부



종교적 기부와 현금 등을 제외한 주요기관에 대한 기부는 전체 응답자 중 26.9%가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부액은 '1만원 이하'가 11.5%로 가장 많았고 '1만원 초과~3만원 이하'가 10.8%를 기록하였다.

모든 계층에서 50% 이상이 '기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20대의 경우 82.6%가 '기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지역 크기가 클수록,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주관적 가계

I
II
III
IV
V

성향이 악화일 경우 기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2) 한국 사회 갈등의 심각성

한국 국민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의 81.7%가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 16.8% + 다소 심각하다: 45.3%)고 응답하였고 18.3%만이 '심각하지 않다'(전혀 심각하지 않다: 0.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18.3%)고 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모든 계층에서 60% 이상이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권역별로 서울(93.0%, 68.5점), 인천/경기(85.1%, 64.6점), 부산/울산/경남(78.8%, 62.8점)을 기록해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정치이념별로도 보수, 중도, 진보 모두 갈등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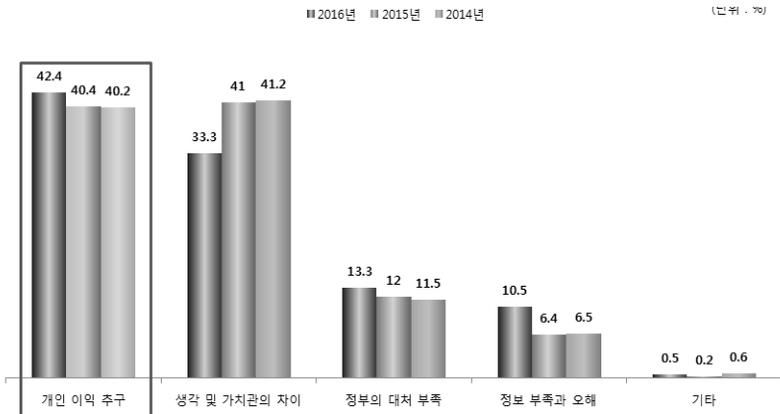
그림 II-32 한국 사회 갈등의 심각성



(3) 한국 사회 갈등의 원인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 발생의 주요 원인은 ‘개인 이익 추구’가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각 및 가치관의 차이’(30.3%), ‘정부의 대처 부족’(13.3%), ‘정보 부족과 오해’(10.5%)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년도 조사와 비교해보면, 2014년 조사와 2015년 조사에서는 ‘생각 및 가치관의 차이’가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 이익 추구’가 1순위 원인으로 응답되었다. ‘개인 이익 추구’를 사회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선택한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대(51.1%), 권역별로는 광주/호남(50.5%),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48.0%), 월평균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47.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조사에서는 개인적 이익 추구 경향이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원인이라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번 조사의 경우는 20대(51.1%)와 50대(49.0%)가 30대(31.6%), 40대(36.7%), 60대 이상(43.9%)보다 응답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세대 간 인식 차이보다는

그림 II-33 한국 사회 갈등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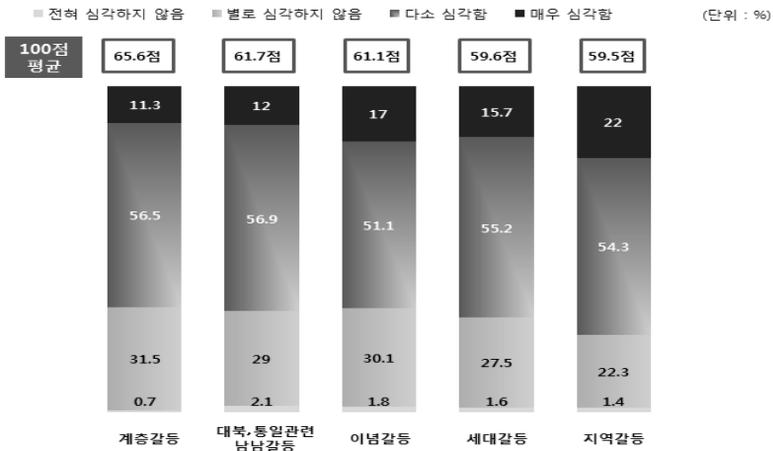
연령별 인식 차이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사회갈등 발생 원인으로 '개인 이익 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대전/충청의 경우 '생각 및 가치관의 차이'를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정부의 대처 부족'을 사회갈등의 주요원인으로 바라보는 응답은 지역 크기가 작을수록 높았으며 제주(33.3%), 강원(25.8%), 부산/울산/경남(20.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4) 한국 사회의 분야별 갈등 정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항목별 사회갈등 심각 수준에 대해 '계층갈등'이 6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북·통일관련 남남갈등'(61.7점), '이념갈등'(61.1점), '세대갈등'(59.6점), '지역갈등'(59.5점) 순으로 조사 되어 2014년, 2015년 대비 2016년에도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34 한국 사회의 분야별 갈등 정도



2015년 조사에서는 사회갈등 심각수준에 대해 연령별, 지역별로 ‘계층갈등’과 ‘남남갈등’ 간에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2016년의 경우 전 연령층과 모든 지역에서 ‘계층갈등’이 ‘남남갈등’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계층갈등’을 비롯한 ‘남남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등 전(全) 갈등 항목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중소도시나 소도시(읍/면)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해 갈등의 정도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갈등’이 가장 심각하다는 응답은 대도시(68.5점)가 중소도시(64.7점)나 읍/면(54.4점)보다 높았으며 서울(71.7점) 및 인천/경기(67.3점) 지역의 응답자들이 느끼는 ‘계층갈등’의 심각성이 다른 지역의 응답자들이 느끼는 ‘계층갈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일수록 ‘계층갈등’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과 관련해서는 30대(63.3점)와 서울(65.8점) 및 인천/경기(66.9점)지역의 응답자가 다른 연령층이나 지역에 비해 남남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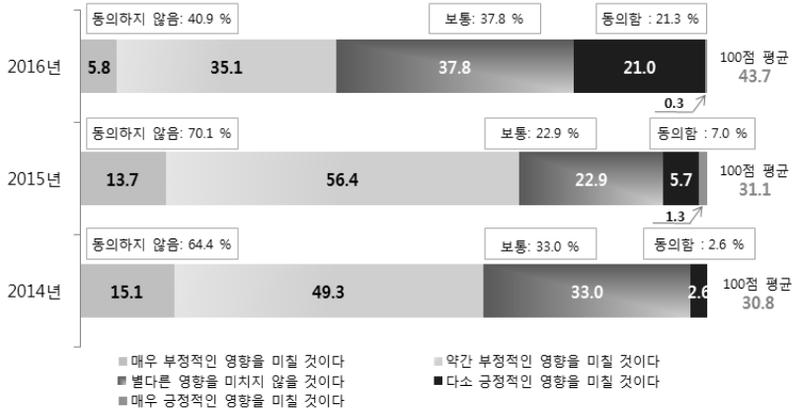
2015년과 비교할 때 ‘세대갈등’, ‘남남갈등’, ‘지역갈등’의 경우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계층갈등’과 ‘이념갈등’에 대한 우려 응답은 각각 증가하였고 ‘이념갈등’이 2.1% 증가하여 가장 많은 증가 폭을 보였다.

(5) 한국 사회 갈등의 장기적 영향력

현재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사회갈등이 사회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21.3%(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0.3% +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0%)로 ‘부정적인 영향’(40.9%)(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8% +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5.1%)보다 2배가량 낮게 나타났다.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은 37.8%로 집계되었다.

그림 II-35 한국 사회 갈등의 장기적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15년(7.0%)에 비해 3배, 2014년(2.6%)에 비해서는 약 8배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은 2015년(70.1%)에 비해 약 30%p가량 줄었다. 물론 2016년 조사에서도 한국 사회의 갈등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의 2배 정도로 높지만 2014년, 2015년 조사에 비해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의견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갈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에 변화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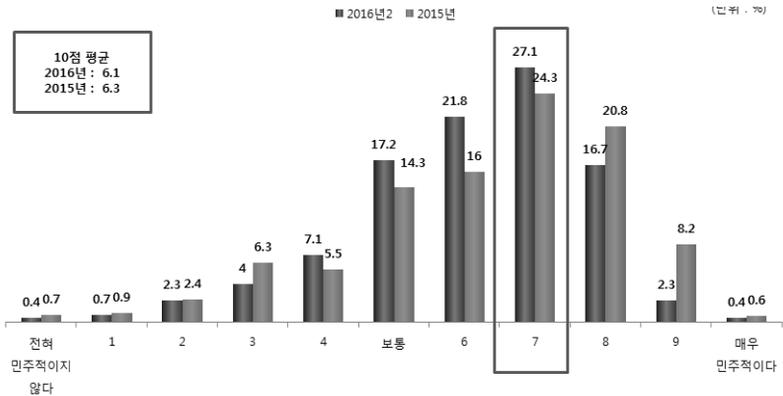
100점 환산 평균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 60세 이상이 47.7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보았고 20대가 40.2점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권역별로는 대전/충청(55.5점), 광주/호남(50.0점), 부산/울산/

경남(50.0점), 학력별로 중졸 이하(48.5점)가 고졸(44.0점)과 대졸 이상(41.8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 한국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평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사회 수준에 대해 11점 척도(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0점, 매우 민주적이다: 10점)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7점'이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점 환산 평균은 6.11점으로 2015년(6.30) 대비 0.19점 감소하였다.

그림 II-36 한국 사회의 민주성 평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한국의 민주적 사회 수준은 7점 정도라고 평가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지역 크기별 읍/면, 권역별 대전/충청과 광주/호남지역에서는 6점 수준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10점 환산 평균 기준으로 연령별로는 60세 이상(6.50점), 국정운영평가별로 긍정(6.54점), 주관적 가계 상황별로 상승(6.49점)에서 민주적 사회 수준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7) 시민성

개인의 이익을 증시하는 사적 시민성(주장 1~주장 4), 공공의 선을 위한 개인의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공화적 시민성(주장 5~주장 8)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동의여부를 5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매우 동의한다: 5점) 기준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주장1: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주장2: 다수의 정서에 반하더라도 소수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주장3: 사회는 일반 대중보다 소수의 지도자가 다스릴 때 잘 되는 법이다.

주장4: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에 소수의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장5: 공공의 이익이라면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주장6: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넘어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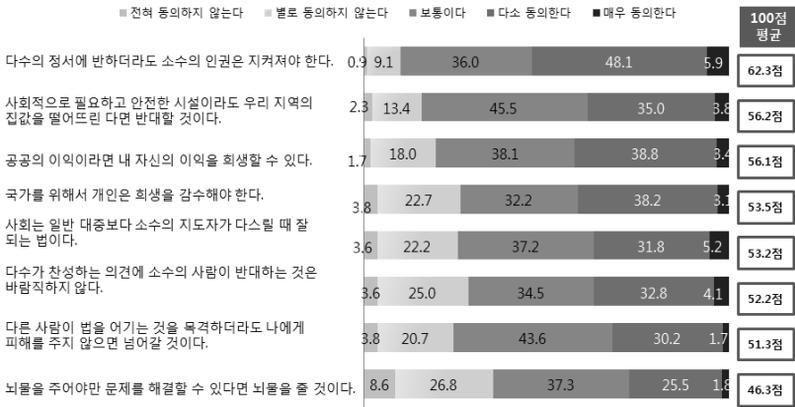
주장7: 뇌물을 주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뇌물을 줄 것이다.

주장8: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안전한 시설이라도 지역 집값을 떨어뜨린다면 반대할 것이다.

각 주장별 공감도로는 ‘다수의 정서에 반하더라도 소수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에 공감하는 정도가 62.3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안전한 시설이라도 지역 집값을 떨어뜨린다면 반대할 것이다’ (56.2점), ‘공공의 이익이라면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56.1 점),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53.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정서에 반하더라도 소수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 읍/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력이

그림 II-37 사적/공적 시민성 평가



낮을수록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는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저학력, 저소득계층에서 소수자의 인권 중요성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8가지 주장 중 서로 모순된 주장이 공감도 순위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공감도 2위는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안전한 시설이라도 지역 집값을 떨어뜨린다면 반대할 것이다’로서 사적이익을 위해서라면 공공이익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인 반면 공감도 순위 3위 주장인 ‘공공의 이익이라면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공공이익을 위해 사적이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의미로서 상호 모순된 주장이 거의 같은 수준(56.2점 대 56.1점)의 공감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식이 국민들 간에 존재하지만 이익의 개념을 구체화시켜 손익의 계산이 이루어질 경우 남비현상이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은 무시되고 개인의 이익추구가 우선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사회 정의와 관련된 주장들인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을

I
II
III
IV
V

목격하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넘어갈 것이다'와 '뇌물을 주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뇌물을 줄 것이다'에 대한 공감도는 100점 환산 평균으로 각각 51.3점과 46.3점을 기록하여 다른 주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8) 권위주의

권위주의와 관련된 7개의 주장들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하였다.

주장1: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와 싸워서 끝장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주장2: 정부 권력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주장3: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너무 심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주장4: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권'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

주장5: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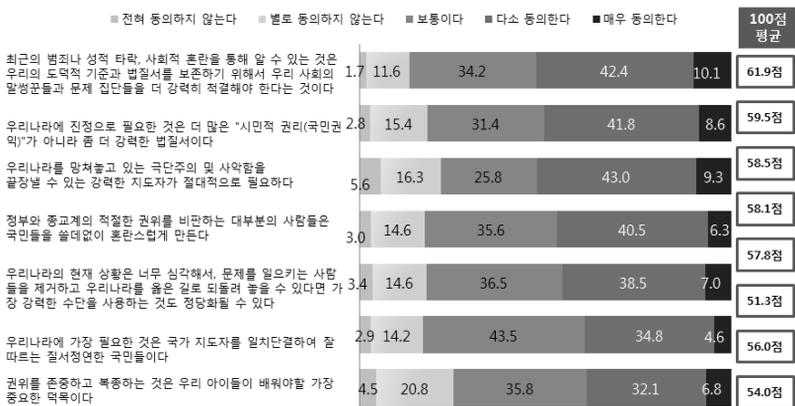
주장6: 최근의 범죄, 성적 타락 및 사회적 혼란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말썽꾼들과 문제집단들을 더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

주장7: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의 지휘에 잘 따르는 질서정연한 국민들이다.

각 주장별 공감도는 '최근의 범죄나 성적 타락, 사회적 혼란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말썽꾼들과 문제 집단들을 더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에 공감하는 정도가 61.9점으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민적 권리(국민권익)'가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59.5점),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 및 사악함을 끝장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58.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범죄나 성적 타락, 사회적 혼란을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말썽꾼들과 문제 집단들을 더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5년 대비 1.9점 하락하기는 했으나 2014년, 2015년과 마찬가지로 1순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조사에서는 공감도 순위가 4순위였던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권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가 2016년 조사에서는 2순위의 공감대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사회 내 강력 범죄 증가와 성적 타락 문제 등으로 인한 가치관의 훼손이 사회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공통의 가치관과 법질서를 확립해야

그림 II-38 권위주의에 대한 공감도



한다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201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너무 심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제거하고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와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경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응답은 7가지 질문 중 가장 낮은 51.3점과 54.0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질서 회복을 통한 사회 안정망 확충을 선호하는 반면, 문제 해결을 위해 폭력적 수단이나 권위적 수단 등 억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9)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

한국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44.5%(매우 지지한다: 3.3% + 다소 찬성한다: 41.2%)로 '반대한다'는 19.5%(매우 반대한다: 3.8% + 다소 반대한다: 15.7%)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라는 응답은 36.0%를 기록하였다.

그림 II-39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한국 사회에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광주/호남 지역에서는

중립이 45.5%로 지지한다는 의견 27.7%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57.8점)이 여성(54.8점)에 비해, 연령별로는 20대(59.3점)와 50대(58.3점)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다양한 인종 공존에 대해 찬성하였다. 또한 지역 크기로는 도시 크기가 클수록, 소득기준으로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가계 상황이 상승할수록, 그리고 주관적 소득 수준이 평균보다 높아질수록 타 인종과 공존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거주환경에 따라서 젊은 연령층이나 대도시 거주자, 그리고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많고 그만큼 같은 사회에서 공존하는 것에 익숙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 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38.9%(매우 지지한다: 2.6% + 다소 지지한다: 36.3%)로 ‘반대’ 20.6%(매우 반대한다: 2.8% + 다소 반대한다: 17.8%)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라는 의견은 40.5%로 조사되었다.

그림 II-40 다양한 종교의 공존에 대한 의견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한 나라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것에 지지한다는 응답이 30% 이상으로 반대보다 높으나, 지역 크기별로 읍/면, 권역별로 광주/호남 지역의 경우 반대한다는 입장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 크기가 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정치적 이념성향이 진보성향일수록 우리 사회 내 다양한

- I
- II
- III
- IV
- V

종교의 공존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국 사회 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55.3%(매우 지지한다: 6.1% + 다소 지지한다: 49.2%)로 '반대' 11.1%(매우 반대한다: 1.2% + 다소 반대한다: 9.9%)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라는 의견은 33.6%를 기록했다.

모든 계층에서 한 나라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 20대(65.4점) 지역 크기별로 대도시(64.6점)에서 높게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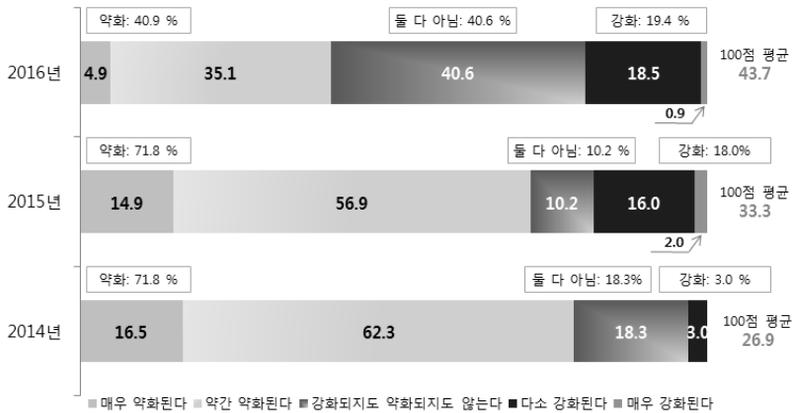
그림 II-41 다양한 문화 공존에 대한 의견



여러 민족 출신 귀화자가 증가한다면 국가의 결속이 '강화된다'는 응답이 19.4%(매우 강화된다: 0.9% + 다소 강화된다: 18.5%)로 '약화된다'는 40.0%(매우 약화된다: 4.9% + 다소 약화된다: 35.1%)보다 낮게 나타났다. '약화된다'는 응답은 40.0%로 2015년(71.8%) 대비 31.8%p 하락한 반면 '강화되지도 약화되지도 않는다'의 응답이 2015년 10.2%에서 2016년 40.6%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2014년, 201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결속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45.3점)가 가장 높고 30대(42.5점)가 가장 낮았다. 지역 크기

그림 II-42 귀화자 증가가 국가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



별로는 읍/면(46.5점), 권역별로 제주(52.6점), 국정운영평가별로 긍정(44.6점)에서 결속력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2015년도 조사 대비 '국가 결속력 약화'에 대한 인식이 30%p 이상 줄고 '둘 다 아님' 입장이 4배가량 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들 간에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수용과 공존의식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만큼, 타 민족 수용 시 국가결속력에 대한 판단을 과거의 대다수의 의견이 부정적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많은 수의 응답자가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현재 국민들의 80% 이상이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갈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에 대해서는 '계층갈등'과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2015년 조사의 경우 '계층갈등'과 '남남갈등'에 대해 연령별, 지역별 차이가 있었지만 2016년 조사에서는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 수준에서 '계층갈등'이 '남남갈등'보다

I
II
III
IV
V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내 경제력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서 응답자들은 경제적 이익갈등이 고조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개인 이익 추구’와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를 꼽았다. 현재의 사회 갈등이 결국에는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높긴 하지만 2014년, 2015년 조사에 비해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의견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회갈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고, 현재의 사회적 갈등이 국민들이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 국민들은 공익(公益)과 사익(私益) 관계에 대해 이중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안전한 시설이라도 지역 집값을 떨어뜨린다면 반대할 것이다’는 주장과 ‘공공의 이익이라면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비슷한 수준의 동의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의식이 국민들 간에 존재하지만 이익의 개념을 구체화시켜 손익의 계산이 이루어질 경우 님비현상이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은 무시되고 개인의 이익추구가 우선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갈등의 주요원인으로 ‘개인 이익 추구’라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법질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억압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책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민주의식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지한다’는 의견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대체로 높았으며, 타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인다면 국가결속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0.9%로 2015년과 비교해 보면 30%p 이상 감소하였고

‘둘 다 아님’ 입장은 4배가량 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에게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수용과 공존의식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만큼, 타 민족 수용 시 국가결속력에 대한 판단을 과거의 대다수의 의견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많은 수의 응답자가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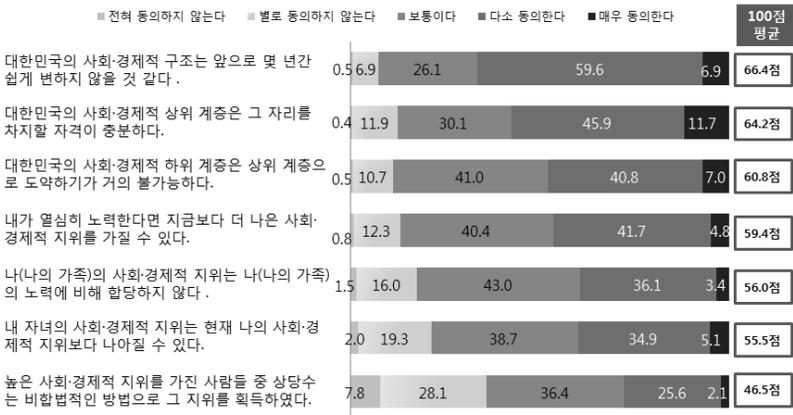
다. 사회적 이동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평가를 위한 7가지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5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매우 동의한다: 5점) 기준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 주장1: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앞으로 몇 년간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 주장2: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상위 계층은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하다.
- 주장3: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으로 도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 주장4: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 주장5: 나(나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나(나의 가족)의 노력에 비해 합당하지 않다.
- 주장6: 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현재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나아질 수 있다
- 주장7: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지위를 획득하였다.



그림 II-43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평가에서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앞으로 몇 년간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항목이 66.4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으로 도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64.2점),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지위를 획득하였다’(60.8점), ‘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현재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나아질 수 있다’(59.4점) 순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55.5점)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상위 계층은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하다’(46.5점)는 7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대를 기록하였다.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앞으로 몇 년간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에 대해서는 전(全) 연령대에서 고르게 동의하였으며 특히 동의 비율에서 20대(69.1%)와 30대(69.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해 젊은 세대가 느끼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절망감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학벌, 월평균 소득, 정치이념과도 상관없이 전 응답자 특성에서 고르게 동의비율이 높았다.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으로 도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에 대해 동의하는 응답도 20대(66.7점)와 30대(66.8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65.9점)와 서울(68.5점) 지역 거주 응답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 대도시 거주 응답자와 서울 지역 응답자의 동의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 국민은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 구조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의 구조는 정의롭지 못하게 형성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층 변화가 자신의 생애에서는 발생하기 힘들고 자신의 후대에서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수의 국민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는 절망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계층 간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평가에서 한국 국민은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 구조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안정성) 지금의 구조는 정의롭지 못하게 형성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합법성). 또한 많은 수의 국민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신의 노력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비삼투성)는 절망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 내 계층 간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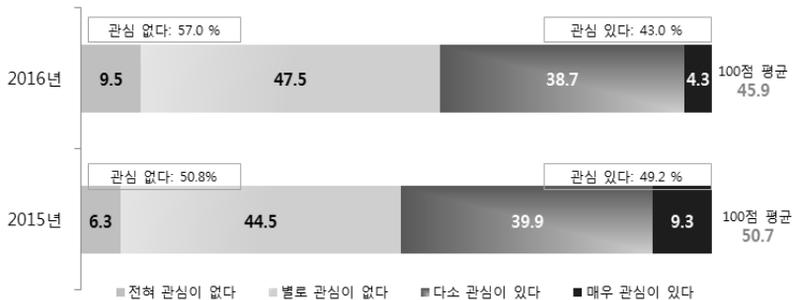
3.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

가. 북한에 대한 태도

(1) 북한에 대한 관심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에 앞서 먼저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43.0%(매우 관심이 있다: 4.3% + 다소 관심이 있다: 38.7%)가 북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57.0%(전혀 관심이 없다: 9.5% + 별로 관심이 없다: 47.5%)였다.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북한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2%p 증가하였다(2015년 50.8%).

그림 II-44 ▶ 북한에 대한 관심도



성별에 따른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남성(48.3%, 48.6점)이 여성(37.9%, 43.3점)에 비해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51.3%, 50.9점)이 가장 높았으며 20대(31.5%, 39.0점)가 가장 낮았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관심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 크기 별로는 중소도시(48.1점)가 가장 높았다. 권역별로는 강원(71.0%, 58.1점), 대전/충청(52.9%, 50.6점) 순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부산/울산/경남(23.7%, 37.0점)이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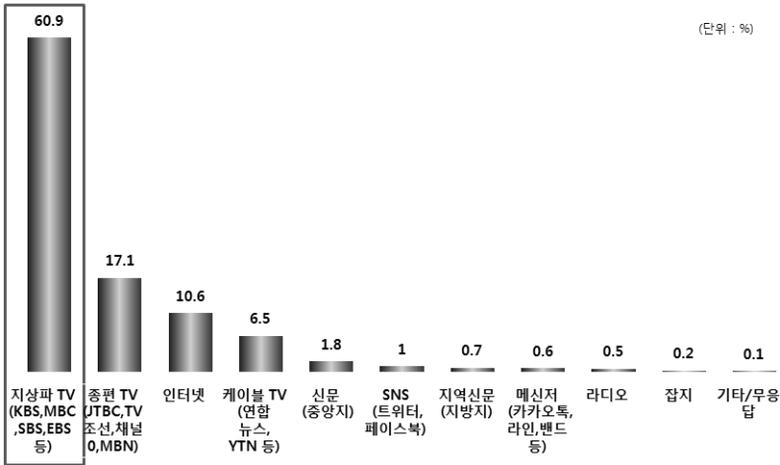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45.9%, 49.3점)와 고졸(44.0%, 46.3점), 대졸 이상(41%, 44.4점) 간 관심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크지 않았다. 국정운영평가별로는 긍정(50.9%, 49.4점)이 부정(40.1%, 44.7점)보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이념 성향에서는 보수(49.5%, 50.1점)가 진보(44.1%, 45.6점)나 중도(38.0%, 43.5점)보다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평균 소득별로 200만원 미만(56.2%, 53.6점) 응답자들이 200~400만원(41.6%, 45.1점)이나 400만원 이상(41.8%, 45.2점) 응답자들보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2) 북한 정보 획득 경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모든 계층에서 ‘지상파 TV(KBS, MBC, SBS, EBS, 지역민방)’라는 응답이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종편 TV(JTBC, TV조선, 채널A, MBN)’(17.1%), ‘인터넷(포털, 블로그)’(10.6%), ‘케이블 TV(연합뉴스, YTN 등)’(6.5%) 등 순이다.

‘지상파 TV’라는 응답은 60세 이상(73.0%), 읍/면(77.6%), 광주/호남(76.2%), 중졸 이하(72.3%),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70.8%)에서 높았다. 반면 ‘종편 TV’에 대한 의존도는 50대(22.2%), 국정운영평가 긍정(21.9%)에서,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는 20대(22.5%), 대졸 이상(15.9%), 국정운영평가 부정(12.2%)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5 ▶ 북한 정보 획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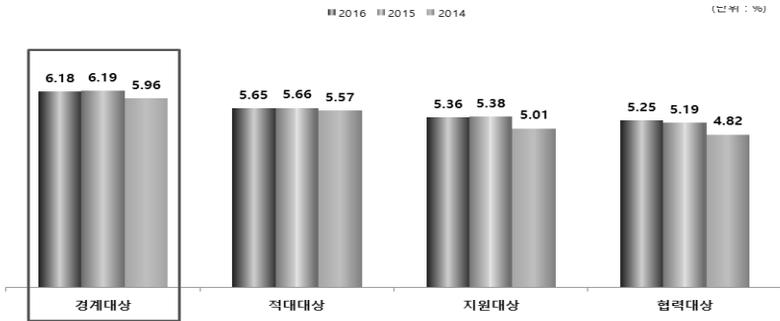
2015년과 비교해보면 ‘지상파 TV’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답한 비율은 10.1% 줄어들었다. 반면 ‘중편 TV’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답한 비율은 9.9% 증가해 북한 정보 획득 경로가 지상파 TV에서 중편 TV로 바뀐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통합대상으로서의 북한 이미지

북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여기에 답변 항목은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적대대상’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서 11점 척도(0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점: 매우 동의한다)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조사 설계는 2015년 조사 방식을 유지한 것으로, 단순히 대상 이미지 중 1순위/2순위를 선택하게 하는 조사 설계와 달리 북한에 대한 다차원적 이미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에 ‘경계대상’이라는 답변이 6.1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적대대상’(5.65점), ‘지원대상’(5.36점), ‘협력대상’(5.25점)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에서도 ‘경계대상’이라는 답변은 1순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2015년 조사보다 ‘경계대상’이라는 답변의 점수가 다소 높아졌다.

그림 II-46 > 북한에 대한 인식



답변 항목으로 제시된 4개 이미지는 모두 중간점수(5점)보다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국민이 북한을 경계대상 및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지원대상이자 협력대상으로도 인식하는 등 상반된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구분해보면 성별에 따른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협력대상’ 항목에서 20대가 4.85점으로 전 세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 항목에서 40대는 5.43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인 20대가 북한을 협력대상 대신 경계대상 및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결과는 흥미로운 부분이다.

권역별로 대전/충청, 강원에서는 ‘지원대상’, ‘협력대상’의 점수가

- I
- II
- III
- IV
- V

‘경제대상’, ‘적대대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외 학력, 국정운영평가, 월평균 소득, 이념성향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유의미한 점수 편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2015년과 비교할 때는 전 항목의 점수가 소폭 상승했고 순위 변화는 없었다. 점수 상승 폭은 ‘협력대상’ 항목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지원대상’ 항목이었다.

(4)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서의 북한

다음으로는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먼저 ‘현재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11.7%(매우 그렇다: 0.0% + 다소 그렇다: 11.7%)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8.6%(전혀 그렇지 않다: 23.9% + 별로 그렇지 않다: 44.7%)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19.7%였다. 이 문항은 올해 조사에 새로 추가한 것이다.

그림 II-47 김정은 정권과 대화 타협 가능성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가능성에 대해 모든 계층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학력별로는 점수 편차가 크지 않았다. 권역별로는 100점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부산/울산/경남이 4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20.8점으로 가장

낮았다. 국정운영평가별로는 긍정(30.8점)이 부정(29.4점)보다 높았다.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는 평균 이상(38.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48 ▶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추구 필요성 인식



이러 위 질문과 관계없이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여기에 ‘그렇다’는 응답은 26.3%(매우 그렇다: 3.5% + 다소 그렇다: 22.8%)로 조사되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8.7%(전혀 그렇지 않다: 8.1% + 별로 그렇지 않다: 30.6%)였다. 보통은 35.0%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볼 때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과 타협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권역별로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주관적 소득 수준 평균 이상에서는 타협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8.6점), 지역 크기별로는 대도시(46.5점), 권역별로는 광주/호남(52.0점)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 및 타협에 관한 위 두 문항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상대라고 인식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추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일부 계층에서 발견할 수 있다. 60세 이상의 경우 대화 가능성을 긍정한 응답은 12.2%로 나타났지만,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긍정한 응답은 32.2%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도 광주/호남에서 대화 가능성을 긍정한 응답은 15.8%로 나타났지만,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5.6%가 긍정 응답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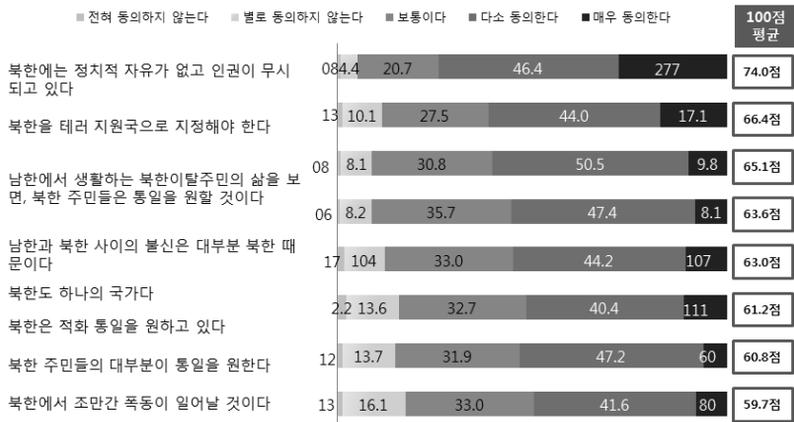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5) 북한에 대한 구체적 태도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를 조사하였다. 응답자에게 북한의 특성을 설명하는 문장 8개를 제시하고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8개 항목 중 100점 환산 점수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북한에는 정치적 자유가 없고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74.0점)였다. 이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66.4점), ‘남한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보면,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원할 것이다’(65.1점),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불신은 대부분 북한 때문이다’(63.6점),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63.0점)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 점이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I-49 >> 북한에 대한 항목별 인식



‘북한에는 정치적 자유가 없고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는 대도시가 74.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읍/면이 69.7점으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강원(83.9점)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65.2점)에서 가장 낮았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는 대도시(67.9점)가 가장 높았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72.8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는 41.7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북한에서 조만간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는 읍/면(55.9점), 권역별로는 광주/호남(43.6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는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57.0%로 절반을 넘었다. 2015년 조사에서는 ‘관심이 있다’(49.2%)와 ‘관심이 없다’(50.8%)는 응답이 거의 반반이었지만 1년 사이 ‘관심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6.2%p 증가한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관심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추후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젊은 층의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조사연도를 거듭할수록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관심도는 점점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세대들의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무관심은 남북통일의 동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며,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젊은 세대들이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삶, 남북통일, 통일 후 한반도의 미래 등에 꾸준하고 다양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는 201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상파 TV(KBS, MBC, SBS, EBS, 지역민방)’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전년 조사에 비해 ‘지상파 TV’라는 응답 비율은 10.1%p 줄어들고 대신 ‘종편 TV(JTBC, TV조선, 채널A, MBN)’라는 응답 비율은 9.9%p가 늘었다. 종편 TV는 경쟁적으로 뉴스 프로그램에서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전면에 나선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같은 방송 편성 추세가 이어지는 한 북한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는 ‘지상파 TV’에서 ‘종편 TV’로 조금 더 이동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종편 TV가 다루는 북한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이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확장시키고 남북통합에 과연 긍정적인지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정보 획득에 ‘종편 TV’의 영향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역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다중적이라는 경향은 2015년 조사에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올해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이후 남북관계가 완전한 경색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201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북한을 경계대상 및 적대대상이자 동시에 지원대상 또는 협력대상으로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정부가 북한을 경계대상 및 적대대상, 아니면 지원대상 및 협력대상이란 동전의 한쪽 면만 보고 정책을 수립해 장기간 적용할 경우 국민들의 다중적인 인식과의 이질감이 커질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인 20대가 북한을 협력대상보다는 경계대상 및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인식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통일의 주역이 되어야 하는 젊은 세대의 북한에 대한 이 같은 인식 변화는 남북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계층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과는 대화와 타협 가능성이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추구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럼에도 두 조사 문항을 비교해보면 일부 계층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 및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추구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 같은 경향은 연령별로 60세 이상, 권역별로 광주/호남 등에서 발견되는데, 이들 계층은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의 당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 조사에서는 ‘북한에는 정치적 자유가 없고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북한의 제한된 자유와 인권이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데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정책 수립과 적용의 동력을 얻기에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설명하는 문장 7개를 제시하고 동의 또는 반대 정도를 5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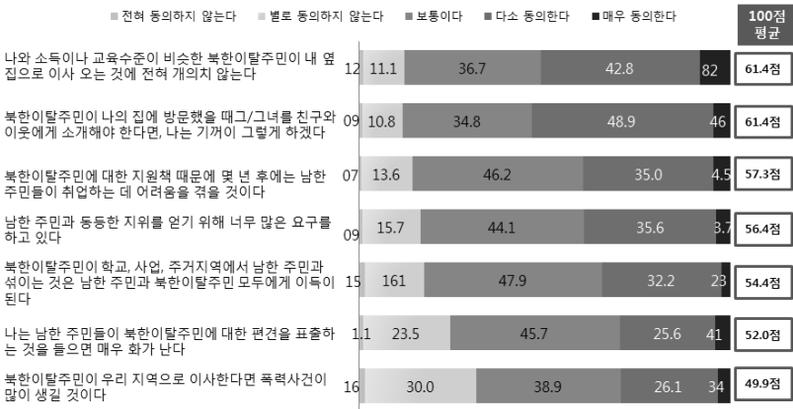
II

III

IV

V

그림 II-50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100점 환산 점수로 7개 항목 중에 ‘나와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비슷한 북한이탈주민이 내 옆집으로 이사 오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와 ‘북한이탈주민이 나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그녀를 친구와 이웃에게 소개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가 동일하게 61.4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책 때문에 몇 년 후에는 남한 주민들이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57.3점), ‘남한 주민과 동등한 지위를 얻기 위해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56.4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7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으로 이사한다면 폭력사건이 많이 생길 것이다’(49.9점) 항목이었다.

‘나와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비슷한 북한이탈주민이 내 옆집으로 이사 오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 대도시(62.9점)에서 가장 높았다. 권역별로는 강원(72.6점)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호남(56.4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운영 평가별로는 긍정이 64.9점으로 부정(60.2점)보다 높았다. 주관적 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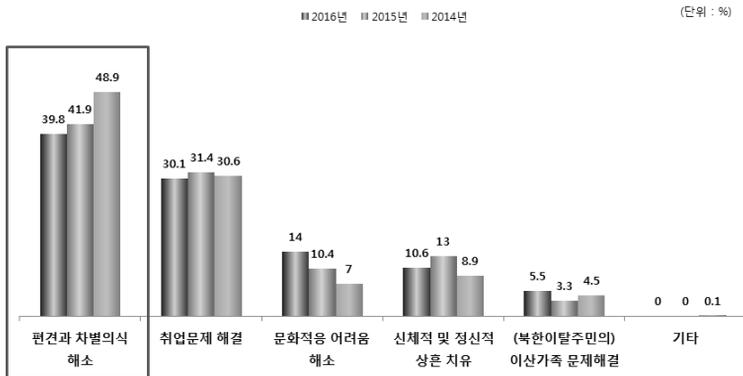
상황별로는 상승(68.6점), 비슷(62.2점), 악화(59.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자신의 가계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일수록 자신과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비슷한 북한이탈주민이 옆집으로 이사 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적다고 응답한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나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그녀를 친구와 이웃에게 소개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는 읍/면(63.2점)에서 가장 높았다. 권역별로는 강원(72.6점)이 가장 높고 제주(56.3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으로 이사한다면 폭력사건이 많이 생길 것이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50대(46.5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48.8점), 주관적 가계성향별로는 비슷(48.9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장애 요인을 언급한 5개 항목을 제시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1순위/2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림 II-51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1순위는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가 39.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취업문제 해결’(30.1%), ‘문화적응 어려움 해소’(14.0%), ‘신체 및 정신적 상흔 치료’(10.6%), ‘이산가족 문제해결’(5.5%) 순이었다.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라는 응답은 201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1순위로 나타났으나 비율은 2.1%p 하락하였다.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라는 응답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연령별로 50대,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 주관적 가계상황 상승, 주관적 소득 수준 평균 이상인 계층에서는 ‘취업문제 해결’이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를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은 지역 크기별로 대도시(43.5%), 권역별로는 강원(54.8%),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는 평균 이하(45.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나와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비슷한 북한이탈주민이 내 옆집으로 이사 오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응답과 ‘북한이탈주민이 나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그녀를 친구와 이웃에게 소개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응답이 모두 높게 나왔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상당수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볼 때 ‘탈북’이라는 출신 특성만으로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질성의 수준을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거주정책뿐 아니라 추후 통일 이후 남북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북한이탈
주민 지원정책에도 이런 인식을 꾸준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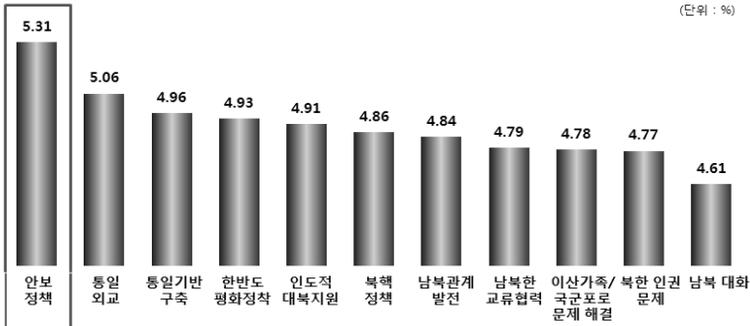
Ⅲ. 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대북정책

가. 정책 현안 대처 능력

그림 Ⅲ-1 박근혜 정부의 정책 현안 대처능력



현 정부의 전반적인 대북문제 대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대북정책에 관한 11개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해 11점 척도(0점: 매우 잘못 대처하고 있음, 10점: 매우 잘 대처하고 있음)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정부의 대북문제 대처능력에서 ‘안보정책’이 5.3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통일 외교’(5.06점), ‘통일기반 구축’(4.96점), ‘한반도 평화정착’(4.93점)의 순이었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남북대화’(4.61점)로 나타났다.

11개 항목 중 중간점수(5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안보정책’과 ‘통일 외교’이며, 나머지 9개 항목은 모두 중간점수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안보정책 및 통일 외교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남북 교류 및 협력이 전면 중단되면서 ‘남북대화’ 정책



역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안보정책’은 대부분 계층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별로는 남성(5.38점)이 여성(5.24점)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86점으로 가장 높았고, 20대가 4.76점으로 가장 낮았다. 50대는 5.52점, 40대는 5.23점, 30대는 5.02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문제 대처능력 중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6.26점)이 가장 높고 광주/호남(3.31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5.57점), 국정운영평가별로는 긍정(6.48점)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통일 외교’ 항목에서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외교 정책에 대해 60세 이상은 5.6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반면, 20대는 4.5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50대는 5.15점, 40대는 4.99점, 30대는 4.74점이었다. 권역별로는 대전/충청(6.05점)이 가장 높았고 광주/호남(3.16점)이 가장 낮았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5.36점), 국정운영평가별로는 긍정(6.22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대화’ 항목에서는 지역 크기별로는 대도시(4.84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읍/면(4.17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권역별로는 대전/충청이 5.79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호남이 2.47점으로 가장 낮았다. 국정운영평가별로는 긍정(5.49점)이 부정(4.29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문제 대처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11개 항목 모두에서 권역별 점수 편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권역별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한 곳은 대전/충청, 대구/경북이었다. 대전/충청은 ‘통일 외교’,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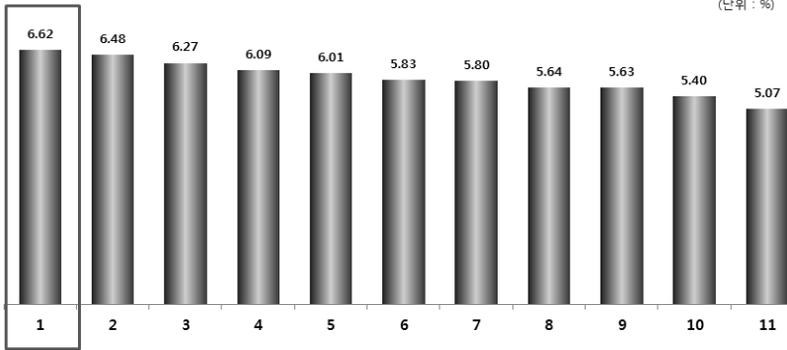
평화정책’, ‘통일기반 구축’, ‘남북한 교류협력’,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해결’, ‘남북대화’, ‘북핵정책’, ‘북한인권 문제’ 등 11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안보정책’, ‘인도적 대북지원’ 등 2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반면 광주/호남은 대북정책과 관련된 11개 항목 모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대전/충청과 대구/경북에서는 우호적인 여론과 지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반면, 광주/호남에서는 구체적인 정책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11개 항목 모두에서 국정운영 평가에 따른 점수 편차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국정운영평가 긍정 계층은 부정 계층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다. 국정운영평가 긍정과 부정 간 점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안보정책’과 ‘통일 외교’였다. 이는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대북정책에도 역시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또한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 구체적 정책 지지도

다음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추진한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문항 11개를 제시한 뒤 이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의 정도를 11점 척도(0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점: 매우 동의한다)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III-2 ▷ 대북정책별 찬반



1.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2.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스포츠나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4.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는 도입되어야 한다
5.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경제 교류를 중지해야 한다
6. 개성공단 폐쇄는 옳은 결정이다
7. 대북 전단 풍선 보내기, 라디오 방송, 확성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8.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9.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10.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11.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

대북정책에 관련한 정책별 찬반은 100점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6.62점)가 가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6.48점), '스포츠나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6.27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는 도입되어야 한다'(6.09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5.07점)였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 대도시(6.77점), 권역별로는 강원(7.74

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항목은 2015년 조사에서도 7.0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다.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 대도시(6.60점), 권역별로 대구/경북과 강원이 7.10점으로 가장 높았다. 국제공조를 통해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2015년 조사에서는 4.67점으로 당시 조사한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중간점수(5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항목이었다. 당시 제시한 문구는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였다.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 또는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지지가 1년 사이 대폭 증가한 것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는 등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5.63점으로 2015년에 비해 점수가 하락하였다. 2015년 조사에서는 6.26점이었다. 이 역시 악화된 남북관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는 지역 크기별로 읍/면(4.58점)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다. 권역별로 대구/경북(2.50점), 국정운영평가별로 긍정(4.48점)에서 가장 낮았다.

다. 향후 정책 방향

이어서 대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북핵 문제 해결 후 남북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추구해야

I

II

III

IV

V

그림 III-3 > 향후 정책 방향



한다’(16.8%), ‘압박과 동시에 남북대화를 추구해야 한다’(16.3%), ‘남북대화보다는 압박을 추구해야 한다’(6.8%) 순이었다.

‘북핵 문제 해결 후 남북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지역 크기별로는 중소도시(63.7%), 권역별로는 대구/경북(78.2%)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대화의 가능성을 제거한 전면적인 압박보다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조건 없는 대화나 압박을 병행한 대화보다는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남북대화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던 ‘선(先) 비핵화, 후(後) 대화’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안보정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보정책’과 ‘통일 외교’ 외에 나머지 대북정책은 모두 중간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 교류 및 협력이 전면 중단되면서 ‘남북대화’ 정책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권역별, 국정운영평가별로 갈리는 경향이 뚜렷했다. 권역별로 대전/충청과 대구/경북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과 지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반면, 광주/호남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광주/호남은 대북정책 관련 11개 항목에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또 국정운영평가별로 긍정 계층이 부정 계층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반적인 국정운영평가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상당 부분 대북정책의 성공/실패에 달려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조사 결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권역별로 유의하게 갈린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지점이기도 하다. 이는 자칫 정부의 대북정책이 사안에 따라서는 ‘남남갈등’으로 변질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대북정책 수립과 적용이 남남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특정 계층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북정책 부분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201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안보 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 이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대폭 늘었다. 북한의 연이은 전략적 도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270호 채택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는 북한과의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2015년에 비해 하락한 데에서도 나타났다.

I
II
III
IV
V

국민들은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 해결 후 남북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데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남북대화의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선(先) 비핵화, 후(後) 대화’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 대북정책도 이 같은 국민적 공감대를 계속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안보의식

가.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조사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보십니까? 불안정적으로 보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안보상황은 ‘불안정적이다’라는 응답이 43.9%(매우 불안정적이다: 4.1% + 약간 불안정적이다: 39.8%)로 ‘안정적이다’라는 응답(23.7%: 매우 안정적이다: 0.4% + 약간 안정적이다: 23.3%)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32.4%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보면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불안정적이다’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주관적 가계상황 상승, 주관적 소득 수준 평균 이상인 경우 ‘안정적이다’라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민국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지역 크기별로 읍면(48.0점),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55.6점), 국정 운영평가별로 긍정(47.2점), 월평균 소득별로 200~400만원 미만(45.5점), 이념성향별로 중도(45.8점),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 평균 이상(53.6점)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4 ▶ 남북한 전쟁 발병 우려도



이어서 안보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남북 간 전쟁 발병 우려도를 조사하였다. ‘남한과 북한이 언젠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걱정한다’는 응답이 39.2%(매우 걱정한다: 2.2% + 다소 걱정한다: 37.0%)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25.6%: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1.5% +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24.1%)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35.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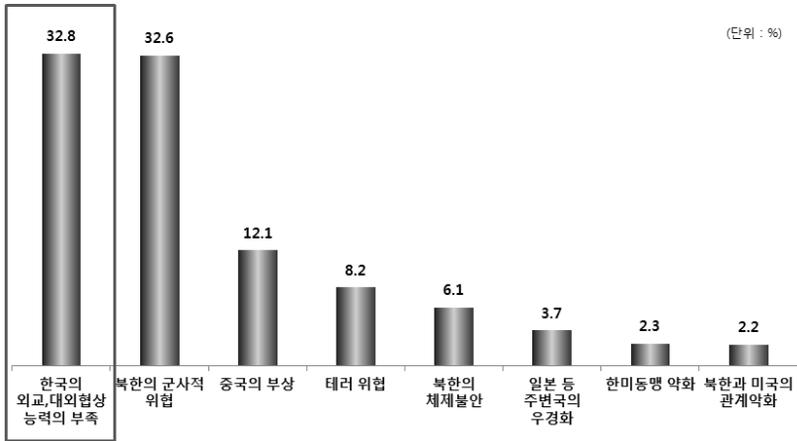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걱정한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100점 환산 점수는 연령별로는 60세 이상(55.8점)에서 가장 높았고 50대(49.9점)에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 강원(67.7점)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51.2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고졸(55.1점)에서 가장 높았다.

나. 안보위협 요소

대한민국 안보상황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이어서 다음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적/국내적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우리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적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국제정치 상황과 관련된 문항 8개를 제시한 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 1순위/2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 I
- II
- III
- IV
- V

그림 III-5 > 안보위협 국제적 요인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적 요소는 ‘한국의 외교, 대외협상 능력의 부족’이 3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32.6%), ‘중국의 부상’(12.1%), ‘테러 위협’(8.2%)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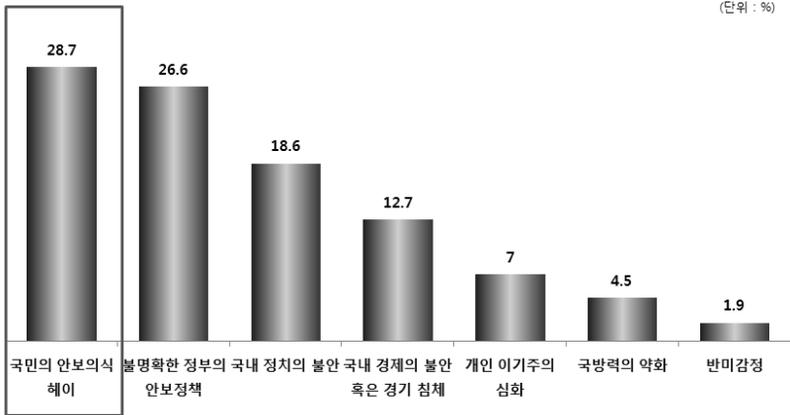
‘한국의 외교, 대외협상 능력의 부족’을 1순위로 응답한 계층은 권역별로 광주/호남(44.6%),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 평균 이상(36.4%)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는 권역별로 대구/경북(47%), 주관적 소득 수준이 평균 이하(42.4%)에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정치적 요소에 대해 국민들이 정부의 외교 능력 부족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가장 주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경북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더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광주/호남에서는 정부의 외교 능력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어서 안보 상황의 국내적 위협 요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국내적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리고 안보 관련 문제점을 설명하는 문항 7개를 제시한 뒤 중요한 순서대로 1순위/2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국내적 요소 1순위는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라는 응답이 2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명확한 정부의 안보정책’(26.6%), ‘국내 정치의 불안’(18.6%), ‘국내 경제의 불안 혹은 경기 침체’(12.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6 안보위협 국내적 요인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를 1순위로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연령별로 60세 이상(37.8%), 권역별로 강원(35.5%), 국정운영평가별로 긍정(35.8%), 이념성향별로 보수(36.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명확한 정부의 안보정책’을 1순위로 응답한 경우는 권역별로 대구/경북(37.6%),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 평균 이상(32.7%)에서 가장 높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보면 국정운영평가 긍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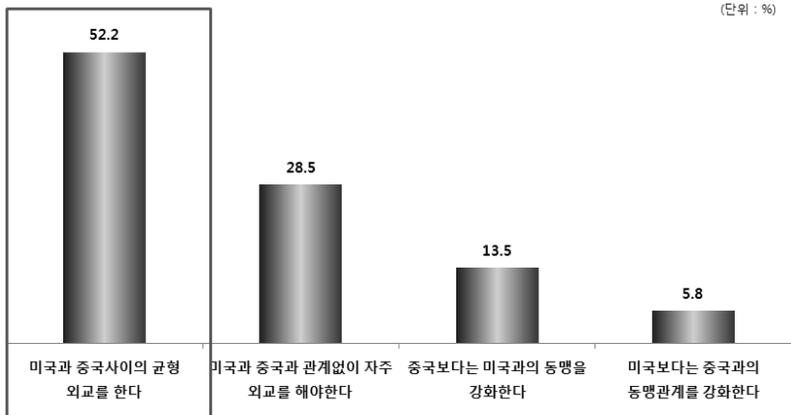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를 더 문제 삼고 있는 반면, 부정은 ‘불명확한 정부의 안보정책’을 문제 삼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역별로 제주에서는 다른 권역과 달리 ‘국내 정치의 불안’(50.0%)이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국내적 요소 1순위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와 특징적이다.

다.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정책 방향

다음으로 G2(미·중)와 관련한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물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를 한다’는 응답이 5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중국과 관계없이 자주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23.5%,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13.5%, ‘미국보다는 중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한다’는 5.8% 순이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를 한다’는 응답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

그림 Ⅲ-7 > 향후 한미·한중 외교 정책



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만 권역별로 대전/충청에서는 ‘미국과 중국과 관계없이 자주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응답이 54.8%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를 한다’는 응답이 그 다음이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를 한다’는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53.5%), 권역별로는 제주(75.0%), 국정운영평가별로는 부정(54.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 각종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 균형 외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넓어졌음을 시사한다.

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이 ‘불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으며 남북한이 언젠가 전쟁을 할 것이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안보상황에 대한 국제적 위협 요인으로는 한국의 외교 능력 부족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장 주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현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가 높은 대구/경북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 크다고 보았고, 반면 국정운영 지지도가 낮은 광주/호남에서는 외교 능력을 문제 삼는 경향이 더 컸다.

안보 상황의 국내적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를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응답은 60세 이상, 강원, 국정운영평가 긍정, 이념 보수 계층에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이들 계층이 안보의식에 대한 더 높은 감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국내적 위협

I
II
III
IV
V

요인 항목에서도 제1원인에 대한 인식은 국정운영평가 성향에 따라 갈렸다. 국정운영평가 긍정 계층은 ‘국민의 안보의식 해이’를 더 문제 삼았고, 국정운영평가 부정 계층은 ‘불명확한 정부의 안보정책’을 문제 삼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 역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과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시사하는 근거가 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안보 불안정의 원인에 대한 인식이 지역이나 국정운영 평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안보 불안정을 해결하는 해법에 대해서도 지역이나 정부 지지도에 따라 의견 차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안보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수립, 적용할 시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들며 상황에 따라서는 ‘남남갈등’을 유발할 우려도 있다. 정부로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꾸준히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과 폭넓게 공유하면서 안보정책 수립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 및 중국과 관련한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미중 사이 균형 외교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를 주요한 외교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균형 외교의 필요성을 널리 공감하고 있다는 것과 정부의 실제 균형외교 정책 수행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균형 외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다는 것은, 정부가 실제 외교 활동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균형을 갖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하락하는 위험 역시 존재한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사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실제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 외교를 펼쳐나가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3. 핵위협 지각

가.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 평가

그림 Ⅲ-8 > 북한의 핵무기 개발



■ 조만간에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 ■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우선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7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라는 의견은 26.5%로 나타났고, '조만간에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2.2%였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대부분 국민들은 북한이 빠른 시일 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는 읍/면(88.2%)에서,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는 평균 이하(77.2%)에서 가장 많았다.

나. 핵위협에 대한 태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려도를 조사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걱정한다'는 응답은 58.5%(매우 걱정한다: 8.5% + 다소 걱정한다: 50.0%)였다. 반면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9%(전혀 걱정하지

I

II

III

IV

V

않는다: 1.5% +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16.4%)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3.6%였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걱정한다’는 응답이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강원(73.4점)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호남(56.9점)에서 가장 낮았다. 주관적 가계상황별로는 상승(70.2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의 많은 수가 북한의 핵위협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I-9 >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관심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려도에 이어 관심도를 조사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관심[이야기, 기사나 책읽기, TV 시청하기 등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생각한다’는 응답이 45.6%(매우 생각한다: 3.4% + 다소 생각한다: 42.2%)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18.5%: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1.3% +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17.2%)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35.9%였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계층에서 ‘다소 또는 매우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점수 편차는 권역별 변수 외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100점 환산 기준으로 권역별로는 강원(69.4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고, 서울(54.6점)에서 가장 낮았다.

그림 Ⅲ-10 >> 북한의 핵위협이 삶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북한의 핵위협은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4%(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2% +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0.2%)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31.8%: 매우 영향을 미친다: 2.0% + 다소 영향을 미친다: 29.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35.8%였다.

북한의 핵위협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령별로는 40대가 51.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20대는 45.2점으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 강원(56.5점), 학력별로 고졸(52.1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11 >>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언론 기관의 관심도



이어 ‘언론 기관들이 북한의 핵위협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여기에 ‘적절하게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이 5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하게/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 (33.7%), ‘과하게/지나치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13.3%) 순이었다.

‘적절하게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제주(66.7%)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적절하다고 본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광주/호남과 대구/경북에서는 ‘적절하게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보다 ‘과하게/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 언론 기관이 북한의 핵위협 관련 뉴스를 다루는 중요도나 빈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과하게/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또 전체 조사 결과에서도 언론 기관의 북한 핵위협에 대한 관심이 과하다/지나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적지 않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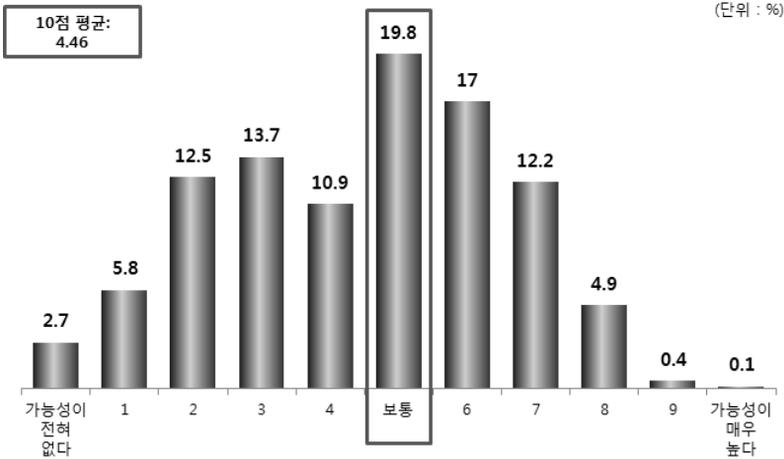
다. 핵전쟁에 대한 태도

다음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10년 내 북한과의 핵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11점 척도(0점: 가능성이 전혀 없다, 10점: 가능성이 매우 높다)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핵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통(5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8%로 가장 높았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핵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10점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4.46점으로, 중간점수(5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는 권역별, 학력별, 주관적 가계상황별로 점수 편차가 유의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61점)에서 핵전쟁 발생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았고 대구/경북(3.85점)에서 가장 낮았다. 학력별로는 고졸(4.68점)이 가장 높고 대졸 이상(4.20점)이 가장 낮았다. 주관적 가계상황별로 상승(5.04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Ⅲ-12 > 핵전쟁 발생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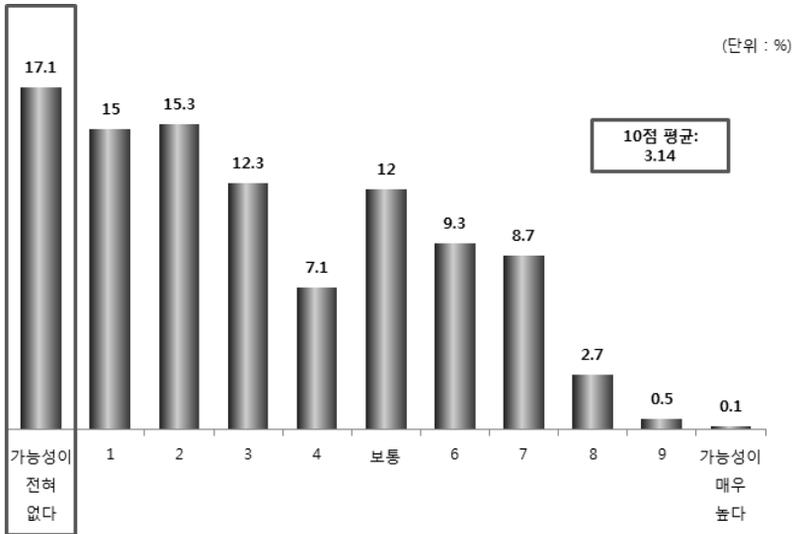
이어서 북한과의 핵전쟁 발생 시 생존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 역시 11점 척도(0점: 가능성이 전혀 없다, 10점: 가능성이 매우 높다)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핵전쟁 발생 시 생존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17.1%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0.1%로 가장 낮았다. 이를 10점 평균으로 환산하면 3.14점으로, 응답자들은 핵전쟁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핵전쟁 시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28점)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2.78점)에서 가장 낮았다.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는 평균 이상(3.51점)에서 가장 높았고 평균 이하(2.48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과의 핵전쟁시 생존 가능성과 별개로 생존 의사를 물었다. ‘북한과의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핵전쟁에서 살아남고 싶습니다?’라는

- I
- II
- III
- IV
- V

그림 Ⅲ-13 ▶ 핵전쟁 시 생존 가능성



질문에 '살고 싶다'는 응답이 43.2%(매우 살고 싶다: 17.3% + 약간 살고 싶다: 25.9%)로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 27.1%(전혀 살고 싶지 않다: 7.7% + 별로 살고 싶지 않다: 19.4%)보다 많았다. '보통이다'는 25.9%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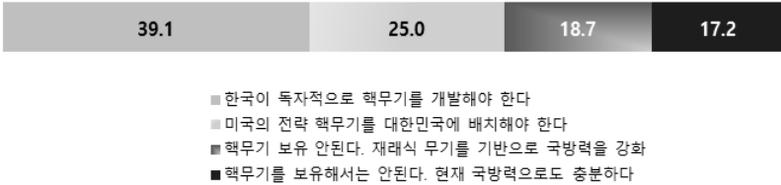
'살고 싶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59.0점), 권역별로 대구/경북(77.0점), 학력별로 고졸(59.4점), 국정운영평가별로 긍정(62.5점), 주관적 가계상황별로 상승(70.7점),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 평균 이상(65.0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많은 국민이 핵전쟁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이 같은 인식과는 별개로 핵전쟁 발생 시 생존에 대한 의지는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핵무기 보유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귀하는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대한민국에 배치해야 한다’(25.0%),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18.7%),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방력으로도 충분하다’(17.2%) 순이었다.

그림 Ⅲ-14 핵무기 보유



참고로 2014년 조사에서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하여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찬성(50.5%)과 반대(49.5%)가 팽팽하게 맞섰다. 2014년 조사에서는 핵무기 자체 개발 또는 미국 핵무기의 배치 등 핵무기 보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올해 조사 결과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과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대한민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응답을 합하면 64.1%가 핵무기 보유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결과를 2014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핵무기 보유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2년 사이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부분 계층

- I
- II
- III
- IV
-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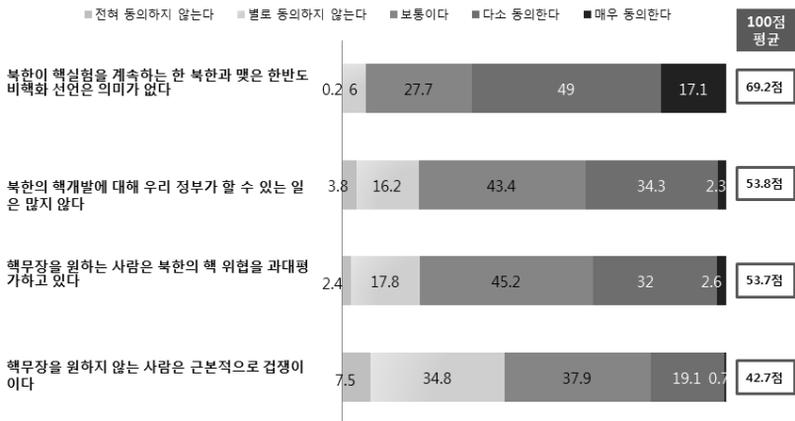
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만 권역별로 광주/호남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방력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31.7%로 가장 높았고, 제주는 ‘미국의 전략 핵무기를 대한민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동의하는 응답은 지역 크기별로는 대도시(41.5%), 권역별로는 강원(51.6%), 국정운영평가별로는 부정(39.6%),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는 평균 이하(46.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 핵무장론에 대한 태도

핵무장론에 대한 문항 4개를 제시하고 여기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Ⅲ-15 핵무기 관련 항목별 동의도



4개 항목 중 100점 점수 환산 기준 시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한 북한과 맺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의미가 없다'가 69.2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53.8점), '핵무장을 원하는 사람은 북한의 핵위협을 과대평가하고 있다'(53.7점),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겁쟁이다'(42.7점) 순이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한 북한과 맺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의미가 없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50대(71.8점)에서 가장 높았고 30대(67.2점)에서 가장 낮았다. 지역 크기별로 중소도시(69.6점), 권역별로 강원(76.6점), 국정운영평가별로 부정(69.4점), 월평균 소득별로 400만원 이상(70.6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겁쟁이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권역별로 제주(27.1점), 학력별로 대졸 이상(40.5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바.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란 점은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려가 모든 계층에서 크게 나타났고 관심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위협이 실제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위협은 실질적이며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이상의 조사 결과를 볼 때 자신의 삶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면서도 이 문제에 꾸준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피로도를 누적시킨다는



점에서 다시 고려할 측면이 있다.

이 같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필요 이상의 우려와 관심은 언론 기관이 핵위협 관련 뉴스를 다루는 방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언론 기관이 북한의 핵위협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적절하게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응답자 10명 중 3명은 ‘과하게/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고 답했고, 광주/호남, 대구/경북 등 일부 권역에서는 ‘과하게/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언론 기관을 통해 획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언론의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일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핵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이를 10점 점수로 환산하면 4.46점으로 중간점수(5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권역별, 학력별, 주관적 가계상황별로 점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우리 국민 대부분 핵전쟁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으나 이와 별개로 생존 의지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핵전쟁 발생 시 살아남고 싶다는 응답은 43.2%였다.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4년에 비해 증가했다. 독자적 핵무기 개발(39.1%)과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25.0%) 응답을 합하면 핵무기 보유에 대한 긍정 답변은 64.1%다. 핵보유 찬반만을 묻은 2014년 조사에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핵무기 보유론에 대한 찬반은 권역별로 점수 편차가 컸다. 2년 사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지지 여론이 확산된 것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미사일을 통한 전략적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치권에서도 북한이 올해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무수단으로 대표되는 중거리 미사일 발사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발사 등을 잇달아 감행하자 핵무기 보유론이 계속 제기되었다.

핵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에서도 비슷한 경향은 나타났다. 4개 항목 중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한 북한과 맺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의미가 없다’는 응답의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대다수 국민의 인식 속에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무력하고 무의미한 것이란 인식이 깔려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 사이에 ‘한반도 비핵화는 무의미하다’는 인식 역시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핵무기 보유론 역시 여론의 지지를 넓히며 계속 등장하게 될 것이다.

I

II

III

IV

V

IV. 심층분석



1. 통일유형과 통합의식: 현상과 결정요인

가. 연구 배경

본 연구는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 중 62%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통일의 필요성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는 잠잠하다. 국민들이 밝힌 통일의 필요성과 실제적 통일 논의의 간극은 통일 연구자들이 국민들의 통일인식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연결된다. 국민들의 통일인식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문항인 ‘귀하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다. 첫째,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귀하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은 설문조사 문항으로서 갖추어야 할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⁴⁰⁾ 둘째, 해당 문항은 통일의 필요성을 측정하기보다는 통일의 도덕적 당위성을 측정하고 있다.⁴¹⁾ 셋째, 통일은 다층적 개념으로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김창남⁴²⁾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주관적 견해 300개를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조건’, ‘통일 준비’, 그리고 ‘통일의 결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에 대한 인식을 ‘통일의 규범성’과 ‘통일의 현실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규범적 통일은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현실적 통일은 분단 고착을 선호하는지 묻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전술한 대로 통일의 필요성은 통일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을

40) 박주화, “통일 필요성 측정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도,” (통일연구원 원내발표, 2015.7.), pp. 13~14.

41) 조진만·한정택,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 비교 분석: 민족적 당위와 현실적 이익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6권 1호 (2014), pp. 157~158.

42) 김창남,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연구,” 『주관성 연구』, 제29호 (2014), p. 130.

측정하는 문항으로 간주된다. 반면 분단 고착에 대한 질문이 통일의 현실적 측면을 묻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첫째, 통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분단은 현재의 상황이다. 상상력을 포함하는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미래 사건, 즉 통일에 대한 응답에 비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분단, 즉 쉽게 정보들을 구성할 수 있는 분단에 대한 질문은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분단 상황이 70년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분단은 '현상의 유지'이며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상의 변경'보다는 '현상의 유지'를 선호한다. 사람들의 현상 유지에 대한 일반적 선호가 분단의 선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북관계에서 '통일'보다는 '분단'이 판단의 준거점(reference point)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분단에 대한 질문은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일의 규범성'과 '통일의 현실성'의 측면에서 남북통합의 3요소를 살펴보고 국민들의 통일인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표 IV-1>은 통일의 당위성(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점 척도)과 통일의 현실성(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 5점 척도)에 대한 응답의 교차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IV-1 통일 필요성과 분단 고착 동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통일의 규범성(통일의 필요성)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다소 필요	매우 필요
통일의 현실성 (분단 고착)	전혀 동의 안함	1	4	28	59
	별로 동의 안함	2	37	170	72
	보통	4	65	111	16
	다소 동의	15	196	128	16
	매우 동의	22	33	16	5

통일에 대한 규범성이 높은 사람은 통일에 대한 현실적 인식도 긍정적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즉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단 고착에 반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은 지지되지 않았다. 통일에 대한 규범성이 높은 응답자들 중 절반가량은 통일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낮았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분단 고착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것이다. 통일이 필요하며 분단에 반대하는 집단과 통일이 필요하지만 분단에도 찬성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통일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집단과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집단의 차이는 무엇인가? 분단 고착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다양한 질문과 가설들을 탐색하기 위해 통일의 필요성을 필요 없음(전혀 필요 없음 + 별로 필요 없음)과 필요함(다소 필요 + 매우 필요)으로 분류하고 분단 고착은 명시적 반대(전혀 동의안함 + 별로 동의안함)와 묵시적 찬성(보통 + 다소 동의 + 매우 동의)으로 분류하여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그림 I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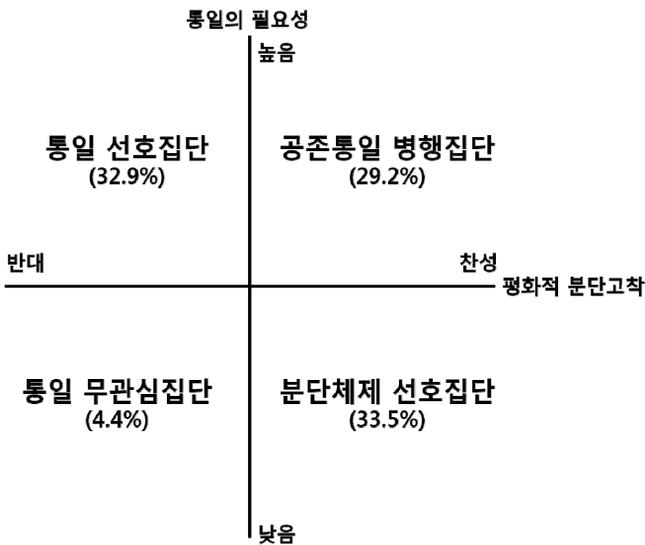
통일이 필요하지 않으며 분단체제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한 응답자는 44명으로 ‘통일 무관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통일이 불필요하며 분단 고착에 대해 묵시적으로 찬성한 응답자는 335명이었다. 이들은 ‘분단체제 선호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통일이 필요하며 분단 고착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응답자는 329명으로 ‘통일 선호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통일이 필요하지만 분단체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은 응답자는 ‘공존통일 병행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292명이 이 유형에 포함되었다.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379명중 88.4%에 해당하는 335명이 분단체제를 선호하는 결과는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남북관계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분단체제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만 분단 고착에도 찬성한 공존

I
II
III
IV
V

통일 병행집단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공존통일 병행집단은 전체 응답자 기준 29.2%였으며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621명 기준으로 47.0%였다. 즉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분단 고착에도 찬성한 것이다.⁴³⁾ 헌법이 규정한 1민족 1국가 통일이라는 전통적 통일 개념 자체가 1민족 2국가 통일로 변화했을 가능성, 또는 1민족 1국가 통일 과정의 중간 과정으로 1민족 2국가 통일을 상정했을 가능성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적어도 통일이 ‘필요하다’ 또는 ‘필요 없다’는 단선적인 질문으로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다양한 인식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림 IV-1 통일인식의 4유형



⁴³⁾ 통일의 필요성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42.5%는 분단 고착에 찬성하였다. 김수암 외,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6) 참고.

본 연구는 4가지 통일인식 유형(이하 통일유형) 중 특히 분단체제 선호집단, 공존통일 병행집단, 그리고 통일 선호집단⁴⁴⁾을 통합의지, 통합역량,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 정부의 대북정책, 안보 및 핵위협에 대한 위험지각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수들 중 세 집단의 유형 구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를 분석하였다.

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통일유형

(1) 성별

성별로 선호하는 통일유형(〈표 IV-2〉)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단일체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35.5%로 가장 높았고 분단체제 선호(30.2%)와 공존통일 병행(29.8%)이 비슷했다. 여성의 경우 분단체제를 선호하는 비율(36.7%)이 가장 높은 가운데 공존통일을 병행해야 한다는 비율(28.6%)과 단일체제를 원하는 비율이 비슷했다(30.4%).

표 IV-2 ▶ 성별 통일유형

(): 비율

	분단체제 선호	공존통일 병행	통일 선호
남성	149(30.2)	147(29.8)	175(35.5)
여성	186(36.7)	145(28.6)	154(30.4)

(2) 연령

연령별 선호하는 통일유형은 〈표 IV-3〉에 제시하였다. 연령대가 낮을

⁴⁴⁾ 통일과 분단 고착에 모두 반대하는 통일 무관심 집단은 양가적(ambivalent)한 집단이기보다는 설문조사에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착오에 따른 응답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토론자의 의견에 감사드린다.

수록 분단체제에 대한 선호, 연령대가 높을수록 통일에 대한 선호가 뚜렷한 가운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공존통일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 20대와 30대의 경우 분단체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대의 경우 55.1%, 30대의 경우 42.2%가 분단체제를 선호하였다. 반면 50대(37.9%)와 60대(42.6%)의 경우 단일체제 통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40대의 경우 분단체제 선호집단(31.4%), 공존통일 병행집단(30.0%), 통일 선호집단(32.9%)이 비슷하였다. 즉 통일이 필요하지만 분단체제 역시 가능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표 IV-3 연령별 통일유형

(): 비율

	분단체제 선호	공존통일 병행	통일 선호
만19-29세	98(55.1)	37(20.8)	37(20.8)
만30-39세	79(42.2)	46(24.6)	51(27.3)
만40-49세	65(31.4)	62(30.0)	68(32.9)
만50-59세	50(25.3)	68(34.3)	75(37.9)
만60세이상	43(18.7)	79(34.3)	98(42.6)

(3) 학력

학력이 높아질수록 분단체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 응답자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지만 분단 고착 역시 가능하다는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비율(37.8%)이 가장 높았고 통일 선호 집단(35.8%)이 그 뒤를 이었다. 고졸 응답자의 경우 통일 선호집단의 비율(36.9%)이 가장 높았고 분단체제 선호집단(31.2%)의 비율이 그 뒤를 이었다. 대졸 이상 응답자의 경우 분단체제를 선호하는 집단의 비율(39.4%)이 가장 높았고 분단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27.0%)과 단일

체제만 가능하다는 비율(28.0%)이 비슷하였다.

표 IV-4 ▶ 학력별 통일유형

(): 비율

	분단체제 선호	공존통일 병행	통일 선호
중졸 이하	34(23.0)	56(37.8)	53(35.8)
고졸	132(31.2)	120(28.4)	156(36.9)
대재이상	169(39.4)	116(27.0)	120(28.0)

(4) 월 소득별 통일유형

소득이 높을수록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비율이 높아지고 단일체제 선호 집단의 비율이 낮아진다.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응답자는 단일체제를 선호하는 비율(44.9%)이 가장 높은 반면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분단체제를 선호하는 비율(38.4%)이 가장 높았다. 월 소득이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경우 세 유형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표 IV-5 ▶ 월 소득별 통일유형

(): 비율

	분단체제 선호	공존통일 병행	통일 선호
200만원 이하	17(19.1)	29(32.6)	40(44.9)
200-400만원	147(31.5)	143(30.7)	157(33.7)
400만원 이상	171(38.4)	120(27.0)	132(29.7)

(5) 이념과 지지정당

본인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경우 단일체제를 선호하는 비율(39.3%)이 가장 높았고, 본인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세 유형에 대한 선호가 비슷하였다(분단체제 선호: 29.9%, 공존통일

I
II
III
IV
V

병행 선호: 32.2%, 통일 선호: 32.9%). 반면 본인을 중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40.9%는 분단체제를 선호하였다.

표 IV-6 이념 및 지지정당별 통일유형

(): 비율

		분단체제 선호	공존통일 병행	통일 선호
이념	보수	72(26.2)	81(29.5)	108(39.3)
	중도	172(40.9)	113(26.8)	121(28.7)
	진보	91(29.9)	98(32.2)	100(32.9)
지지 정당	새누리당	68(24.9)	84(30.8)	108(39.6)
	더불어민주당	51(30.4)	60(35.7)	50(29.8)
	국민의당	38(37.3)	32(31.4)	27(26.5)
	정의당	3(18.8)	3(18.8)	9(56.3)
	지지정당 없음	175(39.8)	113(25.7)	134(30.5)

지지정당별 통일유형을 살펴본 결과 지지정당 없음의 응답이 자신을 중도로 규정한 응답자의 반응과 가장 유사하였다. 지지정당이 없는 응답자의 39.8%는 분단체제를 선호하였으며 30.5%가 단일체제를 선호하였다. 새누리당 지지자의 39.8%는 단일체제를 선호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35.7%는 분단체제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국민의당 지지자의 37.3%는 분단체제를 선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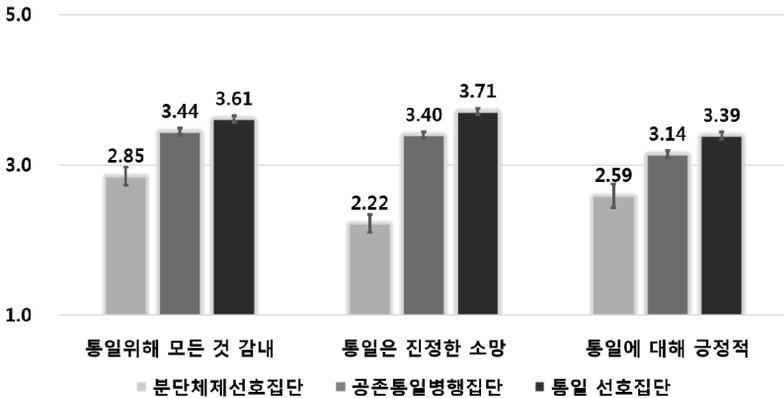
다. 통합의지와 통일유형

(1) 통일과 관련된 긍정적 정서

통일과 관련한 정서는 '생전에 통일을 직접 체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좌우지간 통일에 관계되는 일을 떠올리면 나의 기분은 편안하다’로 구성하였다. 통일유형별 결과를 <그림 IV-2>에 제시하였다.

그림 IV-2 통일과 관련한 긍정적 정서와 통일유형



분단체제 선호집단이 통일에 대해 정서적으로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통일 선호집단이 통일에 대해 정서적으로 가장 긍정적이었다. 한편 공존통일 병행집단은 통일에 대해 분단체제 선호집단보다는 긍정적이었지만 단일체제 가능집단보다는 부정적이었다. 집단 간 평균차이는 모두 유의하였다.⁴⁵⁾

(2) 통일과 관련된 부정적 믿음과 행동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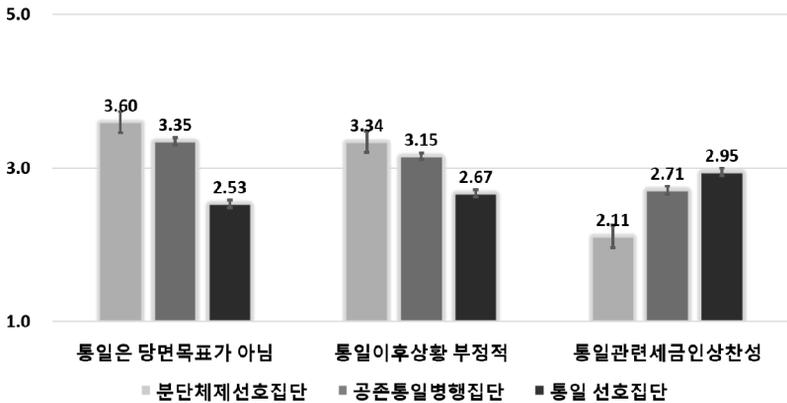
통일과 관련한 믿음은 ‘이 시점에서 통일은 우리의 당면 목표가 아니다’, ‘미래의 통일 후 상황을 생각해보면 대체로 부정적이다’로 구성하였으며

⁴⁵⁾ 통계적 차이검증은 3집단 간 차이에 대해 전반적 F검증을 실시한 후 사후검증으로 Tukey Test를 사용하였다. 검증에 대한 통계치는 분량을 고려하여 생략하였다. 구체적 통계치는 jhpark@kinu.or.kr로 문의하라.

통일과 관련한 행동의도는 ‘나는 통일 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에 찬성한다’로 구성하였다.

통일과 관련한 믿음은 통일과 관련한 정서와 유사하였다. 분단체제 선호집단이 통일과 관련하여 가장 부정적인 인지적 믿음과 행동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 선호집단의 믿음과 행동의도가 가장 긍정적이었었다.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통일에 대한 믿음과 행동의도는 두 집단의 중간 수준이었다.

그림 IV-3 > 통일과 관련한 부정적 믿음과 행동의도와 통일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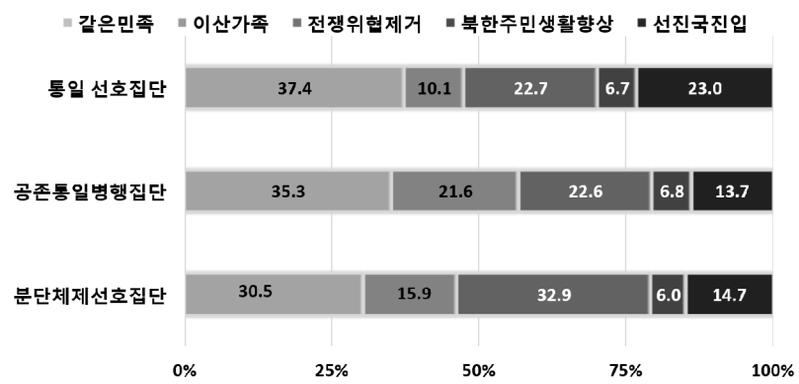
통일과 관련한 정서와 믿음, 그리고 행동의도는 세 집단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통일이 필요 없고 분단체제를 선호하는 집단의 경우 통일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부정적이었다. 둘째,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통일에 대한 정서와 믿음, 그리고 행동의도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일이 필요하며 분단 고착에 반대하는 통일 선호집단은 통일에 대해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행동의도 또한 높았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만

분단 고착이 가능하다는 공존통일 병행집단은 통일에 대해 분단체제 선호집단에 비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통일 선호집단에 비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선적 분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통일인식의 분화를 시사하는 결과이다.

(3) 통일의 이유

통일의 이유로 민족 동질성을 꼽은 비율이 30%를 넘는다는 점에서 세 집단은 공통적이다. 하지만 민족 동질성을 제외한 통일의 이유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통일 선호집단의 경우 선진국 진입(23.0%)이 우세한 반면 분단체제 선호집단과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경우 전쟁위협 제거가 우세한 응답이었다. 특히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경우 통일의 이유로 전쟁위협 제거(32.9%)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22.6%가 전쟁위협 제거를 통일의 이유로 꼽았다. 공존통일 병행집단이 상대적으로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21.6%)를 강조했다라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그림 IV-4 >> 통일의 이유와 통일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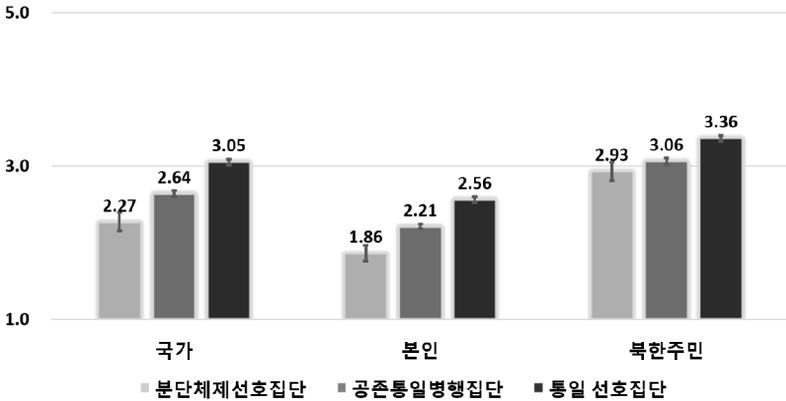


I
II
III
IV
V

(4) 통일편의

통일편의와 관련하여 통일이 국가, 응답자 본인,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응답자는 통일이 북한 주민(3.11)과 국가 차원(2.64)에서는 편익이 있지만 응답자 본인(2.20)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모든 집단에서 관찰되었지만 그 강도는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통일편의의 3차원에서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응답이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통일을 선호하는 집단의 응답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공존통일을 병행해야 한다는 집단의 응답은 두 집단의 중간 수준이었다.

그림 IV-5 통일편의와 통일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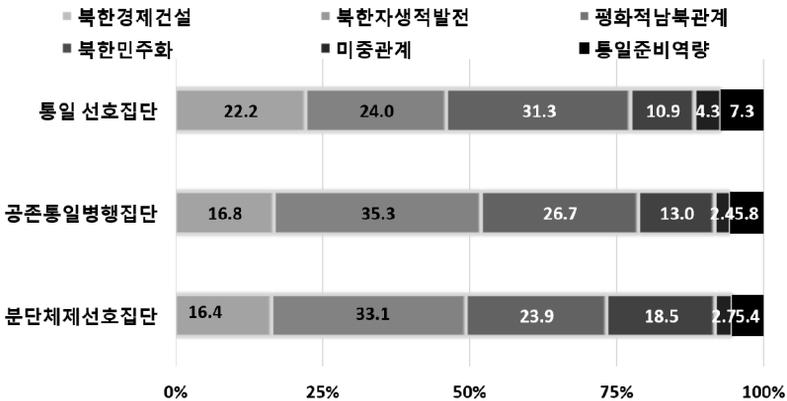
(5)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와 우호적 환경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위해서 정부의 대북정책 신뢰도가 향상되어야 하며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집단 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통일을 위한 우호적 환경에 대해서는 집단 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세 집단 모두 남한의 도움이 없는 북한의 자생적 발전과 평화적 남북 관계를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통일 선호집단의 경우 평화적 남북관계(31.3%)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공존통일 병행 집단과 분단체제 선호 집단의 경우 남한의 도움 없는 자생적 발전(공존통일 병행집단: 35.3%, 분단체제 선호집단: 33.1%)이 우세하였다. 분단체제에 동의하는 집단(공존통일 병행집단 +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경우 남한과 북한이 상호 연계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연계에 대한 거부감은 자칫 북한에 대한 혐오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기관의 관심이 요구된다.

그림 IV-6 통일을 위한 환경과 통일유형



(6) 요약

분단체제 선호집단은 공존통일 병행집단과 통일 선호집단에 비해 거의 모든 면에서 통합의지가 약했다. 분단체제 선호집단은 통일에

- I
- II
- III
- IV
- V

대해 긍정적인 정서가 가장 약한 반면 부정적인 믿음은 가장 강했다. 또한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도 가장 부정적이었다. 통일 선호집단은 분단체제 선호집단과 정반대의 응답을 보였다. 통일의 이유 역시 두 집단은 차이를 보였다. ‘민족 동질성’이 우세하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쟁위협 제거’의 비율이 높았다. 통일을 위한 우호적 환경으로 통일 선호집단은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를 1순위로 꼽았지만 분단체제 선호집단은 남한의 도움 없는 북한의 자생적 발전을 1순위로 꼽은 점 역시 두 집단의 차이점이었다.

주목할 점은 통일이 필요하지만 분단 고착에 반대하지 않은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응답이었다. 공존통일 병행집단은 민족 동질성을 통일의 이유로 강조한 것은 통일 선호집단과 동일하였고, 통일을 위한 우호적 환경으로 북한의 자생적 발전을 꼽은 분단체제 선호집단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통일과 관련한 정서, 믿음, 편익에 대해서 통일 선호집단의 의견과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의견의 중간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두 집단의 통합의지가 다르게 나타난 점은 통일의식의 분화를 시사하며 ‘통일의 필요성’으로 대변되는 단선적 분석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분단 고착에 반대하지 않은 공존통일 병행집단과 분단체제 선호집단이 통일의 우호적 환경으로 한국의 도움 없는 북한의 자생적 발전을 1순위로 꼽은 것은 깊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지원이 없는 북한의 자생적 발전이 가능할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통일에 바람직하지 않다. 분단체제를 반대하지 않는 두 집단의 반응이 북한에 대한 적대심이 아닌 혐오감을 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다 면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 통합역량과 통일유형

(1) 국가에 대한 자부심, 애국심 그리고 민족 정체성

통일유형에 따른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민주주의 발전, 국제사회에서 위상, 경제성장, 사회보장, 과학기술의 발전, 스포츠, 예술과 문화, 군사력, 역사, 공정한 사회적 대우 등 10개 분야에 대한 자부심의 평균을 계산한 후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애국심은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요인 분석⁴⁶⁾ 결과 2개의 하부 요인, 정서적 애국심과 행동적 애국심으로 구분되었다. 정서적 애국심을 구성하는 3개 문항은 ‘나는 정부의 결정에 때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나의 헌신은 언제나 강하다’, ‘나는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은 정체성(나는 누구인가?)에 중요한 부분이다’이다. 행동적 애국심은 ‘나에게 우리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어린이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과 같은 강한 애국심을 강요하는 행위를 보는 것이 불편하다’⁴⁷⁾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민족 정체성은 ‘나는 내가 한민족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훌륭한 한민족이 되고 싶다’, ‘나는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누군가 한민족을 비판하면 개인적 모욕감을 느낀다’의 네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한 후 네 문항의 평균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인지에 대한 문항 역시 추가적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통일유형별 자부심, 애국심, 그리고

46) 요인분석 결과는 분량을 고려하여 기술하지 않았다. 구체적 통계치는 필자에게 문의 바란다.

47) 행동적 애국심을 구성하는 두 문항에 대해서는 역채점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적 애국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민족 정체성은 <표 IV-7>에 제시하였다.

표 IV-7 통일유형별 국가에 대한 자부심, 애국심 그리고 민족 정체성

(): 평균의 표준오차

	분단체제 선호	공존통일 병행	통일 선호
자부심	2.70(.03)	2.82(.02)	2.85(.05)
정서적 애국심	3.27(.03)	3.57(.03)	3.66(.04)
행동적 애국심	2.91(.04)	3.01(.04)	3.27(.05)
민족 정체성	3.51(.03)	3.74(.03)	3.89(.03)
남북은 같은민족	3.66(.04)	3.90(.04)	4.10(.04)

모든 영역에서 통일 선호집단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분단체제 선호 집단의 응답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응답은 두 집단의 중간 수준이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통합의지의 응답 경향과 일치된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의 경우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자부심(2.70)이 가장 낮았으며, 통일 선호집단의 자부심(2.85)이 가장 높았다. 공존통일 병행 집단의 자부심은 2.82였다.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자부심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두 집단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공존통일 병행 집단과 통일 선호집단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정서적 애국심의 경우 분단체제 선호집단(3.27)이 가장 낮았으며 공존 통일 병행집단(3.57)과 통일 선호집단(3.66)의 차이는 없었다. 행동적 애국심 역시 통일 선호집단(3.27)이 가장 높았으며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평균(2.91)과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평균(3.01)은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민족 정체성의 경우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민족 정체성이 3.5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일 선호집단의 민족 정체성이 3.89점으로

가장 높았다.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민족 정체성은 3.74점으로 두 집단의 중간 수준이었다. 집단 간 평균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남북이 같은 민족인지에 대한 응답 역시 민족 정체성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분단체제 선호집단이 공존통일 병행집단보다 남북 민족 동질성에 대한 동의수준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동의수준은 통일 선호집단의 남북 민족 동질성에 대한 동의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2) 삶의 만족도, 신뢰, 그리고 시민성

삶의 만족도로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이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등의 다섯 개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다섯 개 문항은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신뢰도는 크게 전반적 신뢰도, 기관 신뢰도, 그리고 대인 신뢰도의 3개 수준에서 측정하였다. 먼저 전반적 신뢰도는 ‘귀하는 우리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11점 척도상에서 측정하였으며, 기관 신뢰도는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국회, 정당, 대기업, 언론, 시민단체, 군대, 종교단체, 노동조합에 대해 11점 척도상에서 측정이 이루어졌다. 11개 기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요인(기관 신뢰도 1)을 구성하는 기관은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국회, 정당, 군대 등의 정부기관과 대기업이 포함되었고 두 번째 요인(기관 신뢰도 2)을 구성하는 기관은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 종교단체였다.

대인 신뢰도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자신에게 이익이

I

II

III

IV

V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 이타주의, 즉 ‘타인을 위한 삶’과 같은 명분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되기 쉽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최고의 관심이라고 봐야 한다’의 평균으로 구성하였다.

시민성은 사적 시민성과 공화적 시민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개인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적 시민성은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다수의 정서에 반하더라도 소수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사회는 일반 대중보다 소수의 지도자가 다스릴 때 잘 되는 법이다’,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에 소수의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의 네 문항⁴⁸⁾으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다수의 정서에 반하더라도 소수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를 제외한 세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공공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공화적 시민성은 ‘공공의 이익이라면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을 목격 하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넘어갈 것이다’, ‘뇌물을 주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뇌물을 줄 것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안전한 시설이라도 우리 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린다면 반대할 것이다’의 네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공공의 이익이라면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를 제외한 세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각 영역의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IV-8>에 제시하였다.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삶의 만족도, 우리 사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대인 신뢰도는 통일 선호집단과 공존통일 병행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반면 공적 이익에 대한 관심 수준은 낮았다. 이러한

⁴⁸⁾ 네 문항 모두 역채점하였다.

표 IV-8 통일유형별 삶의 만족도, 신뢰도와 시민성

(): 평균의 표준오차

	분단체제 선호	공존통일 병행	통일 선호
민족 정체성	4.03(.06)	4.16(.06)	4.27(.06)
전반적신뢰도	4.68(.10)	5.19(.11)	5.00(.10)
기관 신뢰1	3.91(.10)	4.25(.10)	4.34(.11)
기관 신뢰2	4.34(.09)	4.73(.10)	4.67(.10)
대인신뢰도	2.61(.03)	2.67(.03)	2.85(.03)
사적 시민성	3.00(.03)	2.84(.04)	2.82(.04)
소수인권 보호	3.50(.04)	3.50(.04)	3.48(.05)
공적시민성	2.89(.03)	2.93(.04)	3.06(.04)
공공이익위해 자선이익 희생	3.16(.05)	3.18(.05)	3.37(.05)

점에서 분단체제 선호집단은 가장 낮은 통합역량, 특히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공존통일 병행집단과 통일 선호집단은 영역별로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통합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삶의 만족도(4.03)가 통일 선호집단의 삶의 만족도(4.27)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삶의 만족도는 4.16점으로 다른 두 집단의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전반적 신뢰도의 경우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신뢰도(4.68)가 가장 낮았고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신뢰도(5.19)가 가장 높았다. 통일 선호집단의 전반적 신뢰도(5.00)는 분단체제 선호집단과 통일 선호집단의 중간 수준으로 두 집단의 전반적 신뢰도와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대기업과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기관 신뢰도 1)와 비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기관 신뢰도 2) 역시 분단체제 선호집단이 가장 낮았다.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대기업과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다른 두 집단과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기관신뢰도 2의 경우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신뢰도가



공존통일 병행집단과 통일 선호집단의 평균보다 통계적으로 낮았으며, 공존통일 병행집단과 통일 선호집단의 평균은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대인신뢰도는 척도의 중앙치인 3점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그중에서도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대인신뢰도가 2.6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통일 선호집단의 대인신뢰도는 2.85점으로 가장 높았다.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대인신뢰도는 2.67점으로 다른 두 집단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사적 시민성은 분단체제 선호집단(3.00)이 가장 높았으며,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사적 시민성이 공존통일 병행집단(2.84)과 통일 선호집단(2.82)의 사적 시민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공화적 시민성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분석 결과 통일 선호집단의 평균이 분단체제 선호집단과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평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분단체제 선호집단과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적 시민성과 공화적 시민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분단체제 선호집단, 공존통일 병행집단, 통일 선호집단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적 이익을 저버리는, 심지어 불법을 묵인하거나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통일 선호집단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는 모두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였으며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3) 갈등과 갈등 해결 역량, 그리고 우리 사회구조에 대한 견해

한국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을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측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대북·통일 관련 남북갈등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5개 세부영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5개 영역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개 영역의 갈등 정도를 평균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국민들의 권위주의를 ‘우리나라를 망쳐놓고 있는 극단주의 및 사악함을 끝장낼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와 종교계의 적절한 권위를 비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들을 쓸데없이 혼란스럽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너무 심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우리나라를 옳은 길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민적 권리(국민권익)’가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법질서이다’,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최근의 범죄나 성적 타락, 사회적 혼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과 법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말썽꾼들과 문제 집단들을 더 강력히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를 일치단결하여 잘 따르는 질서정연한 국민들이다’의 평균으로 구성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7개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가 공존하는 것에 대한 지지(3문항), 그리고 귀화자가 늘어날수록 국가의 결속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문항(1문항) 등 4개 문항으로 사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4개 문항의 응답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며, 4개 문항의 평균을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지지로 개념화하였다.

우리 사회의 현 구조가 지속될 것인지(안정성,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앞으로 몇 년간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사회의 계층적 지위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합법성, 대한민국의 사회·

I
II
III
IV
V

경제적 상위 계층은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삼투성,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으로 도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⁴⁹⁾에 대해 질문하였다. 통일유형별 결과는 <표 IV-9>에 제시하였다.

남북통합 역량 중 사회적 포용에 대한 영역인 갈등에 대한 진단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 갈등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영역별 갈등에 대해서는 통일 선호집단의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권위주의에 있어서는 집단별 차이가 없었지만 사회적 관용,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은 통일 선호집단과 공존통일 병행 집단이 가장 높았다. 통일 선호집단은 우리 사회의 구조가 정당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사회구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한 평가에 집단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세부영역의 갈등에 대해 통일 선호집단이 보여준 우려가 가장 높았으며(2.90)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2.79).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였다.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평균(2.83)은 두 집단과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단체제 선호집단, 공존통일 병행집단, 통일 선호집단의 권위주의의 통계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분단체제 선호집단이 보이는 다양성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낮았으며(3.09),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지지(3.21)와 통일 선호집단이 보이는 다양성에 대한 지지(3.22)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공존통일 병행집단과 통일 선호집단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구조의 안정성의 경우 통일 선호집단의 평균(3.76)이 가장 높았으며,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평균(3.54)이 가장 낮았다. 두 집단의 평균

⁴⁹⁾ 합법성과 안정성은 역채점하였다.

표 IV-9 통일유형별 갈등 수준에 대한 평가, 갈등 해결 역량, 그리고 사회구조에 대한 견해

() : 평균의 표준오차

	분단체제 선호	공존통일 병행	통일 선호
전반적 갈등의 심각성	2.88(.03)	2.90(.03)	2.91(.03)
영역별 갈등의 갈등	2.83(.02)	2.79(.03)	2.90(.03)
권위주의	3.27(.03)	3.30(.03)	3.35(.04)
사회적 관용과 다양성	3.09(.03)	3.21(.04)	3.22(.03)
사회구조의 안정성	3.63(.04)	3.54(.04)	3.76(.04)
사회구조의 합법성	2.87(.05)	3.03(.05)	2.68(.06)
사회구조의 삼투성	2.39(.05)	2.54(.05)	2.39(.05)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평균(3.63)은 두 집단의 중간 수준으로 양 집단과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합법성의 경우 통일 선호집단의 평균(2.68)이 가장 낮았으며, 공존통일 병행집단(3.03),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평균(2.87)과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공존통일 병행집단,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삼투성의 경우는 세 집단 간 통계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4) 요약

분단체제 선호집단, 공존통일 병행집단, 통일 선호집단의 통합역량의 경향은 통합의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세 집단 중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통합역량이 가장 낮았으며 통일 선호집단의 통합역량이 가장 높았다.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경우 두 집단의 중간 수준이거나 하위 영역에 따라 분단체제 선호집단 또는 통일 선호집단과 유사한 응답수준을 보였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는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기관에

I

II

III

IV

V

대한 신뢰, 대인 신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수준에서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사회적 자본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민족 정체성과 시민성이었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 정서적·행동적 애국심, 삶의 만족도의 경우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응답은 통일 선호집단의 응답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민족 정체성과 남북한의 민족 동질성에 대해서는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정체성과 동질감이 통일 선호집단의 정체성과 동질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민족의식의 약화가 분단체제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사적 시민성, 공동의 선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공화적 시민성은 세 통일유형의 새로운 차원의 비교를 가능케 한다. 분단체제 선호집단은 사적 시민성이 가장 높은 반면 공화적 시민성은 가장 낮았다. 반면 통일 선호집단은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하며 공동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성이 낮은 집단이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통일편익)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포용 영역에 해당하는 권위주의, 한국 사회의 전반적 갈등수준, 다양성에 대한 관용은 집단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하지만 갈등을 세부영역별로 측정한 결과 통일 선호집단이 보여준 갈등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으며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사회적 이동을 측정한 사회구조의 안정성, 사회적 지위의 합법성, 사회 계층간 삼투성에 대한 응답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통일 선호집단은 우리 사회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공존통일 병행집단은 우리 사회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보았다. 통일 선호집단은 공존통일 병행집단과 분단체제 선호집단에 비해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 획득 과정이 비합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세 집단 모두 부정적이었으며 집단 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마.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와 통일유형

(1) 북한에 대한 태도

북한에 대한 태도는 북한에 대한 관심, 북한에 대한 이미지,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서의 북한,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구체적 태도로 측정하였다. 북한에 대한 관심은 ‘귀하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로 측정하였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북한을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으로 간주하는 정도를 11점 척도에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지원대상’과 ‘협력 대상’이 하나의 요인으로, ‘경계대상’과 ‘적대 대상’이 또 다른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전자를 협력 요인, 후자를 대결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평균으로 각 요인들을 개념화하였다.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은 ‘귀하는 현재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과 ‘귀하는 위 질문과 관계없이 현재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구체적 태도는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통일을 원한다’, ‘북한은 적화 통일을 원하고 있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북한에는 정치적 자유가 없고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북한에서 조만간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불신은 대부분 북한 때문이다’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통일을 원한다’

I

II

III

IV

V

와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문항으로 구분되었다. 5개 문항의 평균을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명명하였다. 통일유형별 북한에 대한 태도는 <표 IV-10>에 제시하였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데 통일 선호집단이 북한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대결적이라기보다는 협력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주목할 부분은 통일 선호집단은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정도는 가장 낮았지만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은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표 IV-10 통일유형별 북한에 대한 태도

(): 평균의 표준오차

	분단체제 선호	공존통일 병행	통일 선호
북한에 대한 관심	2.09(.04)	2.44(.04)	2.63(.04)
북한에 대한 이미지-대결요인	6.17(.10)	5.85(.10)	5.78(.11)
북한에 대한 이미지-협력요인	4.78(.11)	5.47(.10)	5.76(.11)
대화과 타협의 대상	2.10(.05)	2.30(.06)	2.15(.05)
대화과 타협의 추구	2.69(.05)	2.85(.05)	2.94(.06)
북한 주민들도 통일을 원함	3.31(.05)	3.45(.05)	3.52(.05)
북한도 하나의 국가	3.44(.05)	3.43(.05)	3.66(.05)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	2.09(.04)	2.44(.04)	2.63(.04)

통일 선호집단(2.63)이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으며, 공존통일 병행집단(2.44)과 분단체제 선호집단(2.09)순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분단 선호집단(6.17)이 북한을 대결적 대상으로 보는 정도가 공존통일 병행집단(5.85)과 통일 선호 집단(5.78)이 가진 대결적 이미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대결적 이미지와 통일 선호집단의 대결적 이미지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한편 북한에 대한 협력적

이미지는 통일선호 집단(5.76)이 가장 높았으며, 공존통일 병행집단(5.47)과 분단체제 선호집단(4.78)이 그 뒤를 따랐다. 세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북한이 대화와 타협의 대상인지에 대해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평균(2.10)이 가장 낮았으며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평균(2.30)이 가장 높았다.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통일 선호집단의 평균(2.15)은 두 집단의 평균수준으로 양 집단의 평균과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북한과 대화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통일 선호집단의 동의 정도(2.94)가 가장 높았으며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응답이 가장 낮았다(2.69).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공존통일 병행집단은 2.85점의 동의를 보였으며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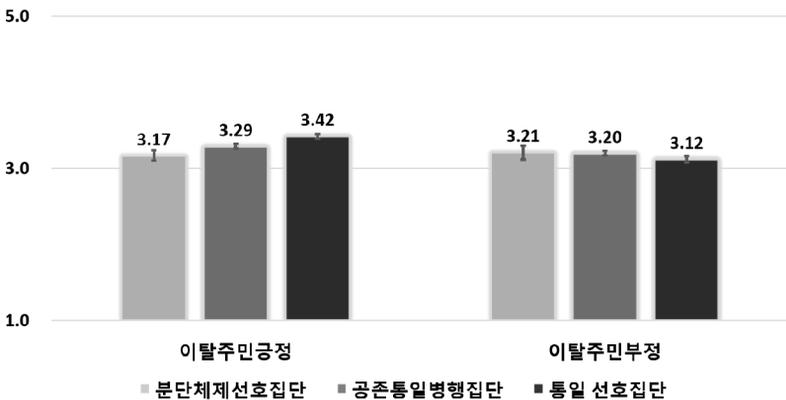
분단체제 선호집단(3.31)은 통일 선호집단(3.52)에 비해 북한 주민들도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두 집단의 평균차이는 유의하였다.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경우 두 집단의 중간 수준이었으며 두 집단과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보는지에 대해서 통일 선호집단의 동의 정도(3.66)가 가장 높았으며 분단체제 선호집단(3.44), 공존통일 병행집단(3.43)의 동의 정도와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세 집단 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7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요소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요소의 2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요소는 '북한이탈주민이 나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그녀를 친구와 이웃

에게 소개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나와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비슷한 북한이탈주민이 내 옆집으로 이사 오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나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표출하는 것을 들으면 매우 화가 난다’, ‘북한이탈주민이 학교, 사업, 주거 지역에서 남한 주민과 섞이는 것은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등 4개 문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요소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으로 이사한다면 폭력사건이 많이 생길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과 동등한 지위를 얻기 위해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책 때문에 몇 년 후에는 남한 주민들이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등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IV-7>에 제시하였다.

그림 IV-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통일유형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 요소에 대한 태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통일 선호집단(3.42)이었다. 통일 선호집단의 긍정적 태도는 분단체제 선호 집단의 긍정적 태도(3.17),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긍정적 태도(3.2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긍정적 태도는 분단체제 선호 집단의 긍정적 태도와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세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3) 요약

세 통일유형 모두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으며 통일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분단체제 선호집단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았으며 통일 선호집단의 관심이 가장 높았다. 공존통일 병행집단은 두 집단의 중간 수준이었다.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서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통일 선호집단의 경우 북한이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이었지만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수준은 가장 높았다.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였다. 북한을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분단체제 선호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통일 선호집단이 가장 낮았다. 반면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통일 선호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분단체제 선호집단이 가장 낮았다. 공존통일 병행집단은 중간 수준이었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전쟁위협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 분단체제 선호집단이라는 것이다. 대결적 양상에 대한 거부감과 교류/협력을 전쟁위협 제거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 요소에 대한 태도는 세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통일 선호집단의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부정적 요소에 대한 태도는 세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바. 통일유형 결정 요인 분석

지금까지 분단체제 선호집단, 공존통일 병행집단, 그리고 통일 선호 집단을 중심으로 통일유형에 따른 남북통합의식을 구성하는 통합의지, 통합역량,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목표는 기존의 단선적 통일인식이 아닌 다층적 통일인식이 실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행 분석은 통일유형 인식이 생기는 차이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왜 국민들은 분단 고착을 찬성하는가? 통일의 필요성과 분단 고착에 대한 견해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입의 요소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통합의지, 통합역량,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 대북정책 평가, 안보상황 평가, 그리고 핵위협에 대한 평가를 독립변수로 통일유형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2회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분단체제 가능집단을 기준 변수로 설정하여 분단체제 선호 집단과 공존통일 병행집단, 그리고 통일 선호집단과 공존통일 병행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단체제 선호집단과 공존통일 병행집단은 분단체제를 선호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통일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분단체제 선호집단과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비교는 통일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통일 선호집단과 공존통일 병행집단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공통적이지만 분단 고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다. 따라서 통일 선호 집단과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비교는 분단체제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통일 선호집단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은 통일 선호집단과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비교에 있다.

먼저 연령, 이념, 월평균 소득(금액), 지각된 가정소득 수준, 1년 전 대비 가정소득 수준, 1년 전 대비 국가경제 수준, 학력, 도시 크기, 지지정당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설정하였다. 통합의지는 통일 관련 정서, 통일 관련 믿음, 통일의 편익, 통일의 이유, 통일 시기, 통일 방식, 통일을 위해 필요한 국민적 합의, 통일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포함하였다. 통합역량은 정서적 애국심, 행동적 애국심, 민족 정체성, 삶의 만족도, 사회전반 신뢰도, 대인신뢰도, 두 유형의 기관신뢰도, 소수자 인권에 대한 태도, 사적 시민성, 공화적 시민성, 국가를 위한 개인 이익의 포기 가능성, 다양성에 대한 태도, 사회구조의 안정성, 사회구조의 합법성, 사회구조의 삼투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에 대한 관심, 교류요인, 대결요인, 북한에 대한 구체적 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요인에 대한 태도, 북한이탈주민의 부정적 요인에 대한 태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은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의 하위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다.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교류협력 정책에 대한 지지, 압박과 제재정책에 대한 지지, 대북 사업 재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였고, 안보정책에 대한 평가는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 전쟁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태도는 핵위협에 대한 걱정, 관심, 삶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핵전쟁 발발 가능성, 생존 가능성과 생존 희망, 그리고 남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편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chi^2(1728) = 1095, p = 1$,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유사 R^2 은 Cox 및 Snell 지수의 경우 0.65, Nagelkerke 지수의 경우 0.73, McFadden 지수의 경우 0.4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독립변수를 기준으로 응답자의 통일유형을 예측하고 예측값과 실제 관측값을 비교한 분류 결과는 <표 IV-11>에 제시하였다. 전체 예측

I
II
III
IV
V

정확률은 74.9%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즉 본 조사연구에 포함된 구성개념들의 조합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유형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각 통일유형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11>에 제시하였다. 모든 독립변수의 통계치를 제시하지 않고 두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의 베타 값만 제시하였다. 유의수준의 기준은 0.10이었다.

표 IV-11 통일유형 예측값과 관측값의 분류 결과

관측값 \ 예측값	분단체제 선호집단	분단체제 가능집단	단일체제 선호집단	정확도
분단체제 선호집단	280	40	13	84.10%
분단체제 가능집단	36	192	64	65.80%
단일체제 선호집단	23	62	238	73.70%
전체 백분율	35.80%	31.00%	33.20%	74.90%

(1) 통일 선호집단 vs. 공존통일 병행집단

통일 선호집단과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비교는 분단 고착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련이 있는 변수를 알 수 있게 한다. 분석 결과 통합의지에서는 통일에 관련된 부정적 믿음과 통일편의, 통합역량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핵전쟁에 대한 우려 역시 분단 고착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변수였다.

먼저 통일에 대한 부정적 믿음, 즉 현 단계에서 통일은 우리의 당면 목표가 아니며 통일 이후의 상황이 부정적이라고 믿을수록 분단 고착에 대한 지지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일이 국가와 본인,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록 분단체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삶의 만족도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분단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반응 역시 분단체제 선택의 주요 요인이었다. 북한과의 핵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할수록 분단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핵전쟁 발발 시 생존하고 싶지 않지만 생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응답자일수록, 원하지 않는 생존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는 응답자일수록 분단체제를 선호하였다.

(2) 공존통일 병행집단 vs. 분단체제 선호집단

공존통일 병행집단과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비교는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된 변수를 도출한다. 통합의지의 측면에서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정서, 전쟁위험 제거로서의 통일 이유, 통일의 조건으로서 북한의 민주화 등이 통일의 필요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통합역량에서는 권위주의만이 유효한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 요소에 대한 태도가 통일 필요성 판단에 유효하였다. 정부의 대북 대처능력, 압박과 제재정책에 대한 지지,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 핵전쟁 시 생존 희망 역시 통일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통일에 대한 인지적 요소는 분단 고착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지만 통일에 대한 정서적 요소는 통일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쳤다. 통일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강할수록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경향이 강했다. 통일의 편익 중 국가에 대한 편익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한국의 경제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할수록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통일의 이유로 전쟁위험의 해소를 꼽았다. 다시 말해서 통일의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민주화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통일을

I
II
III
IV
V

표 IV-12 ▶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⁵⁰⁾

	통일 선호 → 공존통일 병행	공존통일 병행 → 분단체제 선호	통일 선호 → 분단체제 선호
통일에 대한 정서		-3.01	-3.04
통일에 대한 부정적 믿음	0.88		0.99
통일편의:국가	-0.43	-0.49	-0.92
통일편의:본인	-0.47		-0.68
통일편의: 북한 주민	-0.34		-0.58
통일이유: 이산가족	0.96		
통일이유: 전쟁위협제거		0.81	0.85
통일시기: 필요 없음	2.38	3.84	6.22
통일시기: 속도조절	0.86	0.90	1.76
통일여건: 북한민주화		1.16	
삶의만족도	-0.36		-0.38
권위주의	-0.03	0.89	0.86
사회구조의 안정성			0.43
사회구조의 합법성	0.27		0.36
한국경제상황		-0.66	
이탈주민의 부정적 요소			0.60
이탈주민의 긍정적 요소		0.51	
대북정책 전반		0.21	0.24
압박제재		-0.36	-0.50
안보상황		-0.36	
전쟁위협		-0.52	-0.49
핵전쟁 발발가능성	0.14		
핵전쟁 생존가능성	0.12	0.14	0.26
핵전쟁 생존희망	-0.18		
남한핵무기 보유	-0.18		-0.32
연령		-0.04	-0.05
이념		-0.41	-0.42
학력: 중졸 이하			-1.07
지지정당: 국민의당			1.44
지지정당: 진보당			-3.05

⁵⁰⁾ 각 변수의 β 값은 화살표이전의 집단에서 화살표 이후의 집단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통일에 대한 부정적 믿음이 강하면($\beta = 0.88$) 통일 선호집단 보다는 공존통일 병행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원하지 않는다는 결과 역시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변화, 특히 정치적 변화를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권위주의 의식,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할수록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공존통일 병행집단에 비해 분단체제를 선호하는 집단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높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의 간접적 지표로 사용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이 결과를 해석하면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인식과 반대되는 결론이 도출된다. 북한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화,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분단체제 선호집단은 공존통일 병행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의 대북한 대처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 정책 지지도 측면에서 압박과 제재정책을 지지하지 않을수록 통일을 반대하는, 즉 분단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안보상황에 부정적일수록 그리고 전쟁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낮을수록 통일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전쟁 시 생존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수록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생존희망이 높을수록 분단을 찬성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요약하면 전쟁 발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하며 생존을 원하는 응답자, 그리고 북한과의 대치국면 조성에 부정적인 응답자일수록 통일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통일 선호집단 vs. 분단체제 선호집단

통일 선호집단과 분단체제 선호집단은 통일의 필요성과 분단 고착에 대한 선호 모두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두 집단의 차이는 앞서 분석한

통일 선호집단과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차이 그리고 공존통일 병행집단과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차이의 함으로 볼 수 있으며 분석 결과는 대부분 이를 지지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통합역량 중 사회적 이동에 관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구조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 구조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을수록, 즉 사회 변화에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분단 고착을 선호하고 있다.

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통일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통일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특히 불확실성이 강한 통일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필수적이다. 통일이라는 과제는 성과를 계량화하기 힘들다. 전년 대비 남북의 무역량, 관광객 수의 증가가 통일정책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북한의 핵개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 상황은 통일이라는 최종 목표 지점의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 통일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정 정책이 통일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 통일정책은 더 큰 불확실성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통일정책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통일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통일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여론조사 결과 1천 명의 성인남녀 중 74.4%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사 결과와 10%p 이상 차이나는 62.1%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문 조사는 6월 11일부터 3일간, 본 조사연구는 6월 2일부터 3주간 실시되

었다는 점에서 실시기간의 차이로 보기는 힘들다. 본 연구의 통일유형 구분에 따르면 32.9%만이 통일이 필요하며 분단 고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의 지지를 가정한 통일정책, 60%의 지지를 가정한 통일정책, 30%의 지지를 가정한 통일정책은 목표와 수단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으며 달라져야 한다. 통일의식, 특히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정책당국의 고민이 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 국민들의 통일인식이 ‘통일의 필요성’과 ‘분단체제에 대한 선호’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절반이 분단 고착에 명시적 반대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통일유형 구분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의 특성상 무선적 반응의 결과일 수도 있다. 또는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문항들을 조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추론이 맞다면, 본 연구에서 구분한 통일유형 간 통합의지, 통합역량,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기대할 수 없다. 본 연구의 분석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고 분단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분단체제 선호집단, 통일이 필요하지만 분단체제에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공존통일 병행집단, 그리고 통일이 필요하며 분단체제를 반대하는 통일 선호집단이 통합의지, 통합역량,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분류한 통일유형이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실질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단체제 선호집단은 통일 선호집단에 비해 거의 모든 면에서 낮은 수준의 통합의지와 통합역량을 나타내었다.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경우 분단체제 선호집단과 통일 선호집단의 중간 수준이었다.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는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지만 세 집단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태도가 다층

I
II
III
IV
V

적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통일을 ‘통일 대박’으로 대표되는 편익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통일이 불러올 ‘손해’ 역시 존재하며 우리 국민들은 통일의 편익과 손해에 차별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필요 또는 불필요’의 단선적인 분석은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러한 다층적 태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을 것이다. 적어도 통일인식에 대해서는 간명성을 강조하는 ‘오컴의 면도날(Occam’s Razor)’ 보다는 다양한 분석을 강조하는 ‘히캄의 격언(Hickam’s dictum)’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유형의 결정요인 분석은 통일정책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통일정책의 방향은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국민들은 남북의 긴장 고조를 통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통일을 반대하면서 분단을 고착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한다. 전쟁에 대한 공포는 통일 필요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분단체제 고착의 방향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킨다. 또한 한반도의 갈등상황이 고조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된다면 통일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분단체제에 대한 선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의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구분하여야 한다. 통일과 관련된 긍정적 정서는 통일의 필요성을 결정짓는 요인이었지만 통일과 관련된 인지적 측면, 통일의 편익과 손해는 주로 분단체제 선호를 결정짓는 요인이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통일의 긍정적 편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야기할 부정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관련하여 민족 정체성 관련 변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민족담론의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증해 주고 있다. 통일은 전쟁, 편익, 손해 등 현실적 필요와 기대에 좌우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셋째, 통일로 인한 편익과 손해와 더불어 현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통일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현 사회구조 변화에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분단 고착을 원하거나 통일을 원하지 않았다. 현 정부의 ‘행복한 통일’ 기조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통일로 인해 발생할 사회구조 변화에 긍정적인 측면 발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한국 사회 내 갈등과 국가 신뢰도

가. 연구배경

한국 사회의 갈등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다. 갈등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다양한 갈등 영역이 한국 사회의 통합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남북통합의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한국 사회의 통합 역량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대표적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가 신뢰도가 낮아 남북통합 역량이 미약하다면, 무엇이 한국 사회의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도 한국 사회 내 남북통합의식 형성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본 장은 한국 사회의 국가 신뢰도 형성을 설명하는

I

II

III

IV

V

요인으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의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 사회의 대표적 갈등 영역에는 계층갈등과 지역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처럼 다양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급속한 사회 변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사이에 산업화뿐만 아니라 민주화까지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은 급속한 세력 교체뿐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로도 이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추구하는 다수의 집단들이 조직화된 세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념적으로는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으로 나뉘거나 보수정당 지지자와 진보정당 지지자들로 나뉘어 서로에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사회·경제적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해져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중산층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영남과 호남으로 갈라져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 충청권도 점차 자신들의 이해관계 실현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이 문화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에서도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는 남북분단 상황에 처해 있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나 이와 연관되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대한 남한 사회 내 상이한 시각차가 종종 남남갈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처럼 복수의 집단이나 세력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나 가치관 상충이 점차 확연해지고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갈등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갈등이 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갈등이 관찰된다는 것은 사회 변화에 의해 초래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대변하는 집단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 사회 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회가 역동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변화와 발전을 위한 잠재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정 사회에서 갈등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그 사회 내에서 갈등을 해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체적 능력이나 국가 수준의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⁵¹⁾ 다양한 사회갈등이 존재하는 사회 내에서 이러한 갈등 문제들이 국가 수준의 정치제도를 통해 평화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사회가 통합의 방향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사회갈등이 더 심화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 사회의 통합과 관련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신뢰도 수준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통일연구원이 조사해온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2014년 5.92점에서 2015년 5.25점, 2016년 4.94점으로 계속 하락해 왔다.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조사를 시작한 이래 계속 하락해 왔다. 다만, 정당과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3점대로 다른 국가기관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 2015년 조사에서는 두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각각 3.99점과 3.80점으로 다소 상승했다. 그러나 2016 조사에서는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3.28점,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3.02로 다시 크게 하락했다. 즉, 한국 사회에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갈등과 국가 신뢰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국가와 그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는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협력적 가치의 산물이다.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⁵¹⁾ 조원빈, “정치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갈등,” 『정치·정보연구』, 제19권 1호 (2016), pp. 209~242.

집단이나 세력의 이해관계 대립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갈등이 국가 혹은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한 정치제도의 개입으로 합의에 이르렀을 때 국민이 보여주는 국가에 대한 신뢰는 확고해질 수 있다. 국가의 정치제도가 이해관계나 가치관의 충돌로 발생한 세력 간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민주적 정당성은 더 심화될 수 있다.

나. 국가 신뢰도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이다.⁵²⁾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이 높다는 것은 체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면서 체제에 대한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줄여준다. 더욱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는 사회개혁을 추동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기대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국가에 대한 높은 신뢰는 체제에 대한 확고한 지지 세력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체제가 심각한 위기를 마주할 때조차도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당연히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국가는 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중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 정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구체화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국가의 정치제도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부, 국회, 정당, 군대 등이다. 일반적으로

⁵²⁾ Pippa Norris, "Institutional Explanations for Political Support," in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ed. Pippa Norr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217~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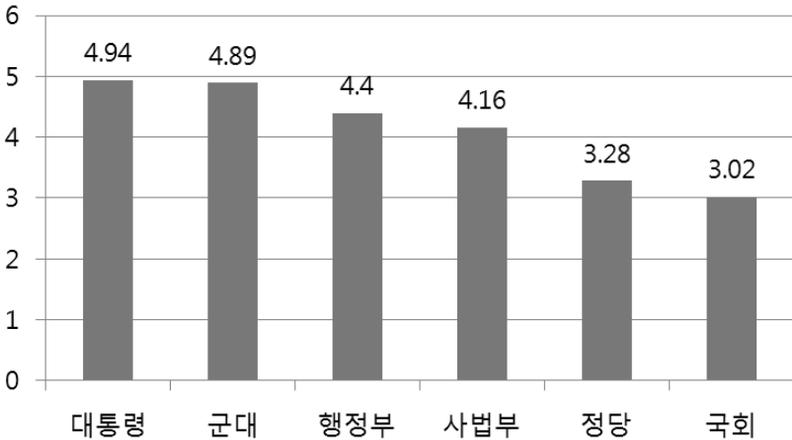
이 여섯 가지 주요 정치제도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주요한 정치제도들은 민주적 선거의 결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선거의 승리를 통해 스스로의 민주적 정통성을 주장한다. 물론, 선거의 승리를 위해 유권자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갈등 영역을 중심으로 정치세력을 구분 지음으로써 갈등이라는 사회 문제를 정치권력 획득을 위한 도구화 혹은 정치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제도들이 특정 세력의 권력 획득을 위해 도구화되면 자연스럽게 그 정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반복됨으로써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림 IV-8〉은 여섯 가지 핵심적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여섯 기관 모두의 신뢰도 평균 점수가 5점에 못 미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민이 이들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섯 가지 국가기관 중 응답자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대통령으로 평균 4.94점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은 국회이며 평균 3.02점으로 조사되었다. 정당에 대한 응답자의 신뢰도 역시 평균 3.28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분립과 동시에 이들 3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국가 기관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이 개별 국가기관에 대하여 상이한 신뢰도를 갖고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며, 입법부와 그 내부에서 활동하는 정당에 대하여 낮은 신뢰도를 보여준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수준은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입법부에 대한 신뢰도 사이에 있다.

I
II
III
IV
V

그림 IV-8 > 국가 기관별 신뢰도



설문문항: 귀하는 한국 사회의 다음 각 기관이나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전혀 신뢰할 수 없다(0점) - '매우 신뢰할 수 있다(10)' 사이에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는 이들 여섯 기관에 대한 개별 신뢰도를 가로지르는 동일한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표 IV-13>은 요인 분석 결과 계산된 요인에 대한 각 변수의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을 보여준다. 여섯 가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변수 모두 국가

표 IV-13 >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요인분석

	제1요인 (국가 신뢰도)	고유분산
대통령에 대한 신뢰	0.748	0.346
행정부에 대한 신뢰	0.866	0.207
사법부에 대한 신뢰	0.813	0.317
국회에 대한 신뢰	0.826	0.216
정당에 대한 신뢰	0.819	0.232
군대에 대한 신뢰	0.651	0.538

신뢰도라는 한 가지 요인에 대한 요인적재값이 0.65 이상이므로 제거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이들 여섯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합산한 평균값을 국가 신뢰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조작했다. 이렇게 조작된 국가 신뢰도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크론바크 알파(Cronbach's α) 값으로 측정하였는데, 그 값이 0.91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섯 가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합산한 평균값으로 측정된 국가 신뢰도 척도가 내적 일관성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14 국가 신뢰도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국가 신뢰도	4.11	1.86	0	10	1000

〈표 IV-14〉가 보여주듯이, 국가 신뢰도 척도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은 10이다. 그리고, 국가 신뢰도의 평균값은 4.11이며 표준편차는 1.86이다.

다. 한국 사회 내 갈등과 국가 신뢰도

본 연구는 갈등을 사회의 집단적 구성단위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분쟁이라고 정의한다.⁵³⁾ 한 사회에서 갈등이 관찰된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사회집단이 서로 충돌되는 가치관이나 이해관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갈등 심각성에 대하여 ‘심각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81.7%(매우 심각하다: 8.8%, 다소 심각하다: 72.9%)로 매우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동일한 설문문항에서 응답자의

⁵³⁾ 조원빈, “정치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갈등,” p. 212.

75.1%가 ‘심각하다’고 대답한 것에 비하여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 중 80% 이상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제도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양산한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 사회의 갈등에 대하여 국민이 항목별 갈등 수준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번 조사에서 ‘귀하는 현재 한국 사회의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을 이용했다. 2014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올해 조사까지 3년 연속 다섯 가지 주요 갈등 영역 중 계층갈등에 대한 심각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답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2016년 조사는 65.6점이며 2015년에는 65.5점이었다. 올해 조사에서 응답자가 심각수준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대답한 항목은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이었다. 2016년 조사 결과 61.7점이었으며 2015년의 64.7점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이념갈등은 61.1점, 세대갈등은 59.6점, 지역갈등은 59.5점 등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조사에서는 이 세 항목에 대한 점수가 각각 59.0점, 60.2점, 60.9점 등이었다. 201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올해의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느끼는 항목별 갈등의 심각수준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항목별 갈등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60%에 가깝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처럼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갈등영역들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1) 계층갈등

한국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계층갈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 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등에 의해 제시되었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경제체제에 미친 영향이 누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⁵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효과가 누적됨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계층갈등 기원을 이미 1960년대부터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구했던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모델에서 찾는 연구도 있다.⁵⁵⁾ 당시 권위주의 정권이든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 등장한 민주정권이든 정부는 주도적으로 경제성장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고 이 목표를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추구해온 경제성장 우선 전략은 시장 메커니즘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국민을 위한 분배와 복지의 문제를 중요시 하는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정부는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수행한 결과로 얻어진 경제적 이득을 국민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는 데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는 한국 사회 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해 왔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노동자를 경제활동으로부터 퇴출시키기도 했다. 그 결과 소득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한국 사회 내 중간층 감소와 더불어 빈곤층 증가로 이어져왔다.

객관적 계층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응답자가 대답한 가구

⁵⁴⁾ 신광영, “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변화와 불평등체제,” 『시민과 세계』, 제13권 (2008), pp. 13~24.

⁵⁵⁾ 조원빈, “정치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갈등,” p. 214.

월평균 소득 자료를 이용했다. 이번 조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귀하의 가구 월평균 소득(부부합산)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였다. 본 연구는 이 자료를 이용해 상위 25%에 속하는 응답자를 객관적 상류계층으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응답자를 객관적 하위계층으로, 나머지 중간 50%에 속하는 응답자를 중간계층으로 조작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 소득이 260만원 이하면 하위계층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이 460만원 이상이면 상류계층으로 구분되었다.

주관적 계층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가 사용한 설문문항은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귀하 가정의 소득 수준은 평균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응답자의 대답이 ‘평균보다 훨씬 낮다’거나 ‘평균보다 약간 낮다’이면 주관적 하위계층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계층에 속한 응답자는 311명이었다. 응답자의 대답이 ‘평균과 비슷하다’인 경우는 주관적 중간계층(634명)이라 구분되었으며, 나머지 주관적 상류계층 55명은 ‘평균보다 약간 높다’로 대답한 응답자들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없었다.

표 IV-15 계층별 국가 신뢰도 차이(ANOVA)

		객관적 계층	주관적 계층
상류	평균	4.27	4.22
	(표준오차) 응답자 수	(0.134) 226	(0.266) 55
중간	평균	3.94	4.14
	(표준오차) 응답자 수	(0.079) 531	(0.074) 634
하위	평균	4.33	4.031
	(표준오차) 응답자 수	(0.113) 243	(0.102) 311
F (p)		4.73 (0.009)	0.48 (0.619)

〈표 IV-15〉은 국가 신뢰도에 있어서 응답자의 계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보여준다. 우선, 객관적 계층별 국가 신뢰도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신뢰도에 대한 객관적 계층별 평균값은 중간계층이 가장 낮은 3.94이고 하위계층이 가장 높은 4.33이었다. 반면, 주관적 계층간 국가 신뢰도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2) 이념갈등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은 분단체제라는 구조적 한계 내에서 체제 내부의 결속과 안정을 강조하는 국가와 이에 대응해 자유주의의 확대를 추구하는 시민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결과물이다.⁵⁶⁾ 1980년대 말 국제적으로는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과거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체제가 종식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장기간 한국 사회를 통치해왔던 권위주의체제가 무너지고 민주화를 경험함으로써 한국 사회는 제한적 이나마 이념적 자유가 다시 확대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이념갈등은 과거처럼 체제의 선택을 강요받는 수준에서 일어난다기보다, 대북 인식과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차를 중심으로 보수세력은 진보세력을 친북 혹은 ‘종북’이라 비판하면서 이념적 갈등 상황으로 표면화되고 있다.⁵⁷⁾

본 연구는 이념갈등을 정당선호와 정치이념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요인이 국가 신뢰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우선, 정당선호는 응답자가 정부여당을 선호하는지, 야당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선호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인지에 따라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했다.

⁵⁶⁾ 한국 사회 내 이념갈등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강정인, “한국 보수주의의 딜레마,” 『사상』, 제13권 3호 (2001), pp. 73~100; 함재봉, “한국의 이념적 갈등 구조와 역사,” 『사상』, 제13권 4호 (2001), pp. 7~22 참고.

⁵⁷⁾ 조원빈, “정치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갈등,” p. 216.

표 IV-16 >> 선호정당별 국가 신뢰도 차이(ANOVA 분석)

	여당 지지	무당파	야당 지지
평균 (표준오차)	5.00 (0.104)	3.81 (0.083)	3.73 (0.109)
응답자 수	273	440	287
F (p)	47.32 (0.000)		

<표 IV-16>은 국가 신뢰도에 있어서 응답자의 정당 선호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보여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정당 선호에 따라 나누어진 세 집단 사이에 국가 신뢰도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중 여당을 선호하는 집단의 국가 신뢰도 평균값이 5.00으로 가장 높았다. 무당파(3.81)와 야당을 선호하는 집단(3.73) 간에 보여주는 국가 선호도 평균값의 차이는 미미했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본 조사의 설문문항은 응답자 스스로 자신의 이념성향을 규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다. 본 연구는 응답자 중 ‘매우 보수’나 ‘보수’, ‘약간 보수’라고 대답한 이들을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집단(275명)으로 재구성했다. 또한, ‘중도’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을 중도 집단(421명)으로 조작했으며, 나머지 ‘약간 진보’나 ‘진보’, ‘매우 진보’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을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집단(304명)으로 재구성했다.

표 IV-17 >> 정치이념별 국가 신뢰도 차이(ANOVA)

	보수	중도	진보
평균 (표준오차)	4.55 (0.105)	3.96 (0.089)	3.93 (0.110)
응답자 수	275	421	304
F (p)	10.84 (0.000)		

〈표 IV-17〉은 국가 신뢰도에 있어서 응답자의 정치 이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일월분산분석 결과, 응답자 스스로 규정한 정치이념에 따라 국가 신뢰도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이념에 따라 조작한 세 집단 중 스스로를 보수라고 규정한 응답자 집단이 평균적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4.55)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국가 신뢰도 평균값이 높은 집단은 중도(3.96)였지만, 스스로를 진보라고 규정한 응답자 집단의 국가 신뢰도 평균값(3.93)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세대갈등

세대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역사와 문화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강한 연대의식을 보유하며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라 정의된다.⁵⁸⁾ 세대갈등은 특정 세대의 정체성만을 통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물질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더욱더 첨예하게 나타난다.⁵⁹⁾ 전자의 대표적 사례가 세대별 투표행태이다. 21세기 들어 한국 사회에서 세대별 투표행태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20~30대 유권자 중 다수가 진보성향의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50~60대 유권자들은 절대적 다수가 보수성향의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⁶⁰⁾ 또한, 물질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도 점차 세대갈등이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다.⁶¹⁾ 예를 들어, 한국 사회는 2000년대 이후 고용 없는

58) 세대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박길성,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참고.

59) 조원빈, “정치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갈등,” p. 216.

60) 세대별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는 강원택,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출판사, 2004); 오세제·이현우, “386세대의 조건적 세대효과: 이념성향과 대선투표를 대상으로,” 『의정연구』, 제41권 (2014), pp. 199~230 참고.

61) 금재호, “사업체규모로 살펴본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리뷰』, 제83호(2012), pp.

성장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적 퇴직 현상이 발생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가 구직난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둘러싼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세대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 IV-18 > 세대별 국가 신뢰도 차이(ANOVA)

	만19세~29세	만30세~39세	만40세~49세	만50세~59세	만60세 이상
평균 (표준오차)	3.81 (0.150)	3.77 (0.131)	4.07 (0.132)	4.09 (0.124)	4.66 (0.112)
응답자 수	178	187	207	198	230
F (p)	7.89 (0.000)				

〈표 IV-18〉에는 국가 신뢰도에 대한 세대별 평균값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일원분산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각 세대의 국가 신뢰도 평균값을 보면, 젊은 세대에서 나이든 세대로 갈수록 평균값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은 국가 신뢰도(4.66)를 보여줬다. 다섯 집단 중 30대 집단의 국가 신뢰도 평균값(3.77)이 가장 낮았지만, 그것은 20대의 국가 신뢰도 평균값(3.81)과 별 차이가 없었다.

(4) 지역갈등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대표적 지역갈등은 영남과 호남으로 대변되는 두 지역 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역갈등은 지역주의라는 개념으로 한국의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⁶²⁾

35~56.

⁶²⁾ 지역주의 투표행태는 강원택,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참고.

한국 사회는 민주화를 겪으면서 민주 대 반민주 대결이 호남 대 영남이라는 지역주의 대결양상과 겹치면서 지역주의가 정치동원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동원 움직임은 영남과 호남에 그치지 않고 충청권으로까지 확대되어 왔다. 최근 들어 충청지역 출신 정치인들은 충청(혹은 ‘증원’) 역할론과 충청 소외론을 통한 이 지역 유권자의 위기의식을 자극하며 반영남, 반호남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지역주의가 지역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정치 과정을 통해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에 속한 유권자들이 민주적으로 구성된 정치체제로부터 소외감을 느낌으로써 스스로의 지역적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지역갈등으로 표출되는 것이다.⁶³⁾ 지역이나 종족과 같은 집단적 의식이 소외의식으로 연결되면 그러한 집단적 의식은 정서적 배타주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속해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민주적 정치체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표 IV-19 지역별 국가 신뢰도 차이(ANOVA)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기타
평균 (표준오차)	4.17 (0.086)	3.92 (0.106)	3.21 (0.172)	5.12 (0.145)	4.23 (0.307)
응답자 수	495	257	101	104	43
F (p)	15.16 (0.000)				

〈표 IV-19〉에는 국가 신뢰도에 대한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 평균값의 차이를 볼 수 있는 일원분산분석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는 거주 지역을 수도권과 영남, 호남, 충청, 기타 등 다섯 지역으로 구분했다.

⁶³⁾ 박기덕, “한국정치의 갈등 분석과 해소방안의 모색,”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1호 (2006), pp. 237~350.

일원분산분석 결과 이들 다섯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국가 신뢰도 평균값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중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평균적으로 국가 신뢰도(5.12)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지역별 국가 신뢰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호남지역(3.2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역갈등이라 하면 영남지역과 호남지역 사이의 갈등을 염두에 두지만, <표 IV-19>가 보여주듯이 영남지역 응답자(3.92)와 호남지역 응답자 사이에 국가 신뢰도 평균값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 두 지역의 국가 신뢰도 평균값은 전국의 평균값인 4.11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

‘남남갈등’이라는 용어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⁶⁴⁾ 남남갈등을 한국 사회에 구조화된 사회갈등 전반을 의미한다고 보는 연구도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 남남갈등이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내용이나 방향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시각의 차이를 의미한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무엇이 국민들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시각을 갖게 하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과연 남남갈등이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남남갈등이 국민이 보유한 국가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려 한다.

⁶⁴⁾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4), pp. 11~53.

표 IV-20 >> 대북정책별 국가 신뢰도 차이(ANOVA)

	조건 없는 남북대화 추구	북핵 문제 해결 후 남북대화 추구	압박과 동시에 남북대화 추구	대북 압박 추구
평균 (표준오차) 응답자 수	4.11 (0.143) 168	4.06 (0.074) 601	4.41 (0.151) 163	3.82 (0.228) 68
F (p)	2.10 (0.087)			

〈표 IV-20〉은 대북정책에 대한 상이한 시각을 보유한 집단들 사이에 국가 신뢰도에 대한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대북정책에 대한 4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방향을 선택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응답자들은 ‘조건 없는 남북대화 추구’나 ‘북핵 문제 해결 후 남북대화 추구’, ‘압박과 동시에 남북대화 추구’, ‘대북 압박 추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과연 국민들이 남북대화를 중요시하는지 대화보다 대북 압박을 더 강조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설문문항이었다. 〈표 IV-20〉의 일원 분산분석 결과, 이들 네 집단 간에 국가 신뢰도 평균값 차이는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박과 동시에 남북대화 추구’를 선호하는 집단의 평균 국가 신뢰도(4.41)가 가장 높았고 ‘대북 압박 추구’를 선호하는 집단의 국가 신뢰도(3.82)가 가장 낮았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된 남남갈등이 국가 신뢰도 차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경험 분석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갈등영역이 국가 신뢰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특정 갈등 수준이 매우

I
II
III
IV
V

심각해져 그 갈등을 중심으로 체제의 정당성을 형성하는 데 차이를 가져 오면 체제의 통합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통합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북통합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21〉은 앞서 살펴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영역이 국가 신뢰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층과 지지 정당, 지역별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형성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객관적 계층 변수가 종속변수인 국가 신뢰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가구에 속할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민일수록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주관적 계층 인식 변수는 국가 신뢰도에 0.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선호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국가 신뢰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정부여당을 지지하는지 야당을 지지하는지에 따라 국가 신뢰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당연히 현재의 여당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보다 높은 수준의 국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이념이 보수적 인지 중도인지 진보인지는 그들이 보여주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는 정치이념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에는 스스로의 이념을 ‘보수’라고 대답하는 이들이 다수였지만, 여전히 ‘중도’나 ‘진보’라고 대답하는 응답자들도 상당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념갈등이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개별 국민의 이념 때문이라기보다 특정 이슈가 정당의 엘리트나 지지자 중심으로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당이 중심이 되어 특정 이슈에 대하여 지지자를 동원함으로써 관찰되는 갈등이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야당 지지자들이 국가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확연히 높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정당성 위기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본 연구는 세대별로 국가 신뢰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해 자신의 나이를 '60세 이상'이라 대답한 응답자 집단을 기준 집단으로 하는 4개의 더미변수를 회귀분석 모델에 포함시켰다. 이는 각 세대가 60대 이상의 집단이 보여주는 국가에 대한 신뢰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는 세대별로는 국가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4개의 더미변수가 보여주는 회귀계수가 모두 음인 것은 각 세대의 국가 신뢰도는 60세 이상의 집단의 그것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21 한국 내 사회갈등과 국가 신뢰도: 회귀분석

변수	국가 신뢰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계층		
객관적 계층	0.133*	0.0667
주관적 계층 의식	0.003	0.074
이념		
정치이념	0.022	0.060
여당선호	0.418*	0.129
무당파	-0.021	0.097
세대		
20대	-0.003	0.148

I
II
III
IV
V

변수	국가 신뢰도	
	회귀계수	표준오차
30대	-0.013	0.150
40대	-0.087	0.134
50대	-0.206	0.128
지역		
수도권	0.416*	0.145
영남	-0.066	0.152
충청	0.487*	0.180
기타 지역	0.123	0.225
대북정책		
대북정책 방향	-0.046	0.051
북한은 협력대상	0.093*	0.018
사회 신뢰도	0.566*	0.024
민주주의 수준	0.067*	0.025
교육수준	-0.066	0.042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	0.443*	0.072
현재 경제상황	0.150*	0.068
성별	0.003	0.077
지역 크기	-0.036	0.066
상수	-1.121*	0.390
N	1000	
R-squared	0.584	
F	62.41	

주: * $p < 0.05$.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별로 국가 신뢰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해 호남 지역을 기준 지역으로 4개의 지역 더미변수를 회귀 분석 모델에 포함하였다. 수도권 지역 더미변수와 충청 지역 더미변수가 종속변수인 국가 신뢰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의 국가 신뢰도는 호남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국가 신뢰도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들과는 상이한 것이다.

지역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지역주의는 영남과 호남 간의 갈등을 그 중심축으로 전개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 두 지역 간의 국가 신뢰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호남 지역을 비롯해 영남 지역과 기타 지역에 포함된 제주도와 강원도 지역 응답자들이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에 비해 국가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지역 갈등은 여전히 심각하지만 그 중심축이 과거의 영남 대 호남에서 수도권과 행정수도가 위치한 충청 지역 대 그 외의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무엇이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보유한 신뢰도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나 북한에 대한 국민의 태도가 과연 그들이 국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회귀분석 모델에 응답자들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태도 변수와 북한에 대한 태도 변수를 포함했다. 북한에 대한 태도 변수는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을 이용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차이는 국가에 대한 자신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남북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국민이나 대북 압박을 추구해야 한다는 국민들 사이에 국가 신뢰도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북한을 ‘협력대상’이라는 데 동의하는 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대북정책의 방향이나 통일방식, 북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대답하지만, 이러한 측면에 대한 개인의 인식 차이가 그들의 국가에

I
II
III
IV
V

대한 신뢰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부나 정치 엘리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추어 지지자를 동원하지 않는 한, 국민들은 대북정책 방향의 차이나 통일방식에 대한 차이가 자신들이 느끼는 국가에 대한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모델은 다양한 갈등의 축을 대변하는 변수들 외에도 통제변수로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사회 신뢰도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 신뢰도 변수는 ‘귀하는 우리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을 이용했다. 사회 신뢰가 국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고 확고하게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 수준 변수도 국가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민주주의 수준 변수는 ‘귀하는 현재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을 이용했다. 회귀분석 결과는 현재 한국 사회가 더 민주적인 사회라고 대답한 응답자일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변수는 종속변수인 국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그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는 유사하다는 의미이다.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 변수도 국가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정운영 평가 변수는 ‘귀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문항을 이용했다. 회귀분석 결과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일수록 국가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상황 변수도 국가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상황 변수는 ‘귀하는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문항을 이용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6%가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한다: 16.0%, 다소 불만족한다: 66.6%)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일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도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본 연구의 회귀분석 모델은 통제변수로 성별과 지역 크기를 포함하고 있다. 이 두 통제변수 모두 종속변수인 국가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가 신뢰 수준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이는 없으며 응답자의 주거지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읍/면’인지에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주요 갈등이 국가 신뢰도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다수의 국민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더욱이, 본 연구는 주요 갈등의 중심축 중 본인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에 따라 국가에 대한 신뢰 수준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몇몇 사회갈등은 그 수준이 국가와 체제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민들은 본인이 속한 경제적 계층에 따라 국가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으로 하위계층에 속하는 국민일수록 국가를 불신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국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여당인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 국가에 대한 신뢰도 수준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지

I
II
III
IV
V

하는 정당이 없거나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가 신뢰도를 보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국민들의 세대 차이는 그들의 국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국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국가에 대한 신뢰 수준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지역주의는 영남 대 호남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되어 왔다. 이번 연구 결과 이 두 지역은 국가 신뢰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과 충청 지역 대 그 밖의 지역으로 나뉘어 국가 신뢰 수준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국가 신뢰도가 영남이나 호남, 강원, 제주 지역 등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다섯 번째, 국민들은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그들이 보유한 국가 신뢰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북한에 대한 태도는 국민의 국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좀더 '협력대상'으로 생각하는 국민일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았다.

본 연구는 이상 다섯 가지 갈등영역 중 계층과 지지정당, 지역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갈등이 국가 신뢰도에 확연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들 세 가지 영역의 갈등 수준은 이미 심각해 국민이 보유한 국가 신뢰도에도 차이를 보일 정도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계층 갈등과 지역갈등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 갈등 영역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의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면 국가나 체제의 민주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집단이 등장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이에 국가는 부의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하위계층이나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안전판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념갈등은 일반 국민들의 이념이 아니라 지지하는 정당이

여당인지 아니면 야당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정당들은 주요한 이슈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 지지자를 동원하는 것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없이 정부나 각 정당들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갈등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갈등의 축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소외 받는 집단의 국가 신뢰도는 점점 낮아져 궁극적으로 체제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으로까지 심각해질 수 있다.

본 연구 프로젝트가 관심을 갖는 핵심적 이슈는 남북통합이다. 여기서 남북통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남북통합이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남북통합의 구체적 모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측면 중 하나는 한국 사회의 통합역량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통합역량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인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연구에서 잘 나타났듯이 현재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다. 이러한 낮은 국가 신뢰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갈등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남북통합의 기반이 되는 한국 사회의 통합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계층갈등과 지역갈등, 세대갈등을 완화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구상해야 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마주한 심각한 갈등 상황을 관리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없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요인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2015년을 기준으로 2만

I
II
III
IV
V

8천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⁶⁵⁾ 이에 따라 학교, 직장, 주거지 등 일상에서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접촉이 잦아졌으며 상호작용하는 빈도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인도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통일과 사회통합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남한 주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성공적 정착을 방해하며 거시적으로 남북의 발전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태도나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자료들을 살펴보았는데, 유해숙과 이현숙⁶⁶⁾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이 태만하고 과격하며 두렵다고 지각하였으며 자신의 자녀들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함께 어울리거나 공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윤인진과 채정민⁶⁷⁾의 연구에 따르면 남한 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덜 개방적이고, 친절함이 부족하며 진실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각하였으며 이주노동자보다 친밀함을 덜 느낀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되었지만 부정적 태도나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이탈주민도 남한 주민에 대해 냉정하고 편견이 많으며 일본다고 하는 등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⁶⁸⁾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주

6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검색일: 2016.8.30.).

66) 유해숙·이현숙,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인식 비교연구: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제20호 (2014), pp. 325~365.

67) 윤인진·채정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pp. 48~49.

68) 유해숙·이현숙,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인식 비교연구: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pp. 325~365.

민이 소수이며 약자라는 점에서 볼 때 남한 주민의 부정적 인식이 더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남한 주민들의 부정적 태도도 중요하지만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태도와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의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시선, 차별, 처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재민과 황선영⁶⁹⁾은 남한 주민이 무시하고 비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적응의 정도가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분석하였는데 개인적 요인, 사회적 지지 요인,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의 다양한 영역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남한 사람의 태도나 인식 이외에 직업만족도, 연령, 학력, 자신의 건강상태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남한 사람의 태도와 인식이었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남한 주민들의 태도와 인식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남한 주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보면, 문화적 요인인 국가정체성과 정치적 요인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성별 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⁰⁾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나 적응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들은 자주 언급되었지만

⁶⁹⁾ 이재민·황선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제33권 6호 (2008) pp. 61~84.

⁷⁰⁾ 권수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 제20권 2호 (2011), pp. 129~153.

I
II
III
IV
V

심리적 요인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심리적 요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에 비해 구조적 측면과 관련이 적고 캠페인 등을 통한 개입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정책을 통한 변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심리요인과 사회와 관련된 심리요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개인적 심리요인 가운데 개인이 현재 삶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소에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사회와 관련된 심리요인 가운데 사회적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얼마나 합리적이라고 지각하는지가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더하여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심리요인 이외의 변수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이러한 심리요인들의 영향력이 유지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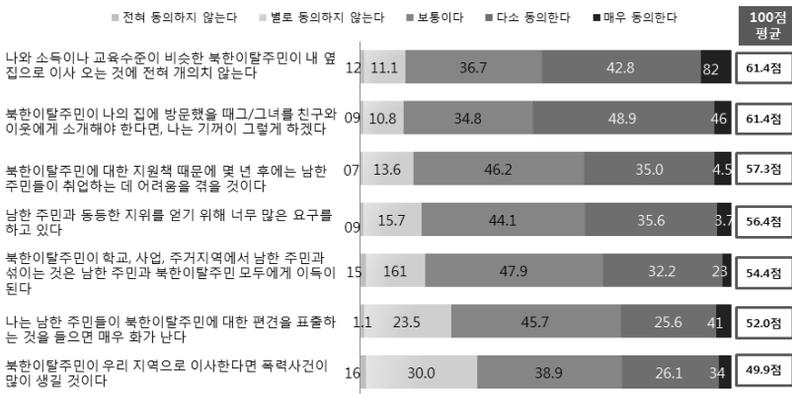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2. 개인적 심리요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3. 사회와 관련된 심리요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4. 개인 및 사회와 관련된 심리요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남한 주민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총 7문항에 대해 5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으며⁷¹⁾ 4문항은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며 3문항은 부정적 태도를 의미한다. 7문항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의 방문 시 소개’와 ‘소득/교육수준이 비슷한 북한이탈주민의 이사’에 대해 동의하는 문항이 각각 61.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책으로 인한 남한 주민들의 취업 어려움’ 문항이 57.3점이었고, ‘북한이탈주민의 많은 요구’ 문항이 56.4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융합에 따른 이득’ 문항이 54.4점이었고, ‘북한이탈주민의 이사로 인한 폭력사건 증가’ 문항이 49.9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IV-9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의 태도



⁷¹⁾ 다른 크기의 척도로 측정된 문항들과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이 결과들에 근거하면 남한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을 소개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사오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보통 이상의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취업문제나 남한 주민과 동등한 지위를 얻기 위한 요구와 같이 직접적 접촉이 아닌 정책적이거나 거시적 관점에서는 보통 이상의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역채점하여 긍정적 태도와 합산하여 통합된 전반적 태도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의미한다. 결과를 보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3.24점(표준편차 0.40)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방문 시 소개’ 문항에서는 지역 크기, 권역, 주관적 가계 상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 크기에 따라 읍/면이 63.2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가 5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권역의 경우 강원도가 72.6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이 가장 낮은 57.7점이었다. 주관적 가계 상황에서는 ‘비슷’ 63.0점, ‘상승’ 62.8점, ‘악화’ 58.3점 순서로 나타났다. ‘소득/교육수준이 비슷한 북한이탈주민의 이사’ 문항의 경우 지역 크기, 권역, 국정운영평가, 주관적 가계 상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 크기에 따라 대도시, 읍/면, 중소도시가 각각 62.9점, 62.8점, 59.8점 순서였으며, 권역의 경우 강원도가 72.6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호남이 가장 낮은 56.4점이었다. 국정운영평가에서는 ‘긍정’(64.9점)이 ‘부정’(60.2점)보다 더 높았으며 주관적 가계 상황에서는 ‘상승’ 68.6점, ‘비슷’ 62.2점, ‘악화’ 59.1점 순서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책으로 인한 남한 주민들의 취업 어려움’ 문항에서는 성별, 지역 크기, 주관적 가계 상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여성(58.6점)이 남성(55.9점)보다 더 높았으며, 지역 크기의 경우 대도시 59.5점, 중소도시 55.8점, 읍/면 52.6점 순서로 나타났다. 주관적 가계 상황에서는 악화, 상승, 비슷한 순서로 각각 59.4점, 56.4점, 56.1점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많은 요구’ 문항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융합에 따른 이득’ 문항에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성(55.7점)이 여성(53.2점)보다 더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이사로 인한 폭력사건 증가’ 문항에서는 연령, 학력, 주관적 가계 상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의 경우 20, 30, 40, 60대는 50.2~51.4점 범위로 비슷하였으나 50대는 46.5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력에서는 중졸 53.4점, 고졸 49.9점, 대졸 이상 48.8점 순서로 나타났다. 주관적 가계 상황의 경우 악화, 상승, 비슷이 각각 51.6점, 51.1점, 48.9점 순이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관련 각 문항이 몇몇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특별히 일관된 배경 변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문항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삶의 만족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관계

남한 주민이 현재 느끼고 있는 삶의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총 5문항에 대해 7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⁷²⁾ 5문항 가운데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가 5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가 47.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전반적인

⁷²⁾ 다른 크기의 척도로 측정된 문항들과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7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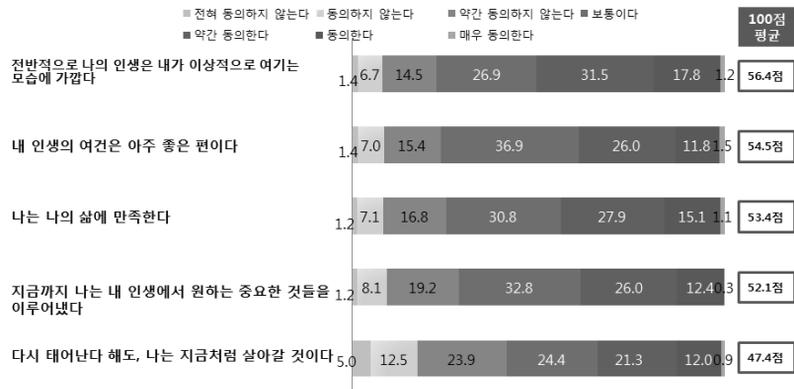
I
II
III
IV
V

삶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5문항을 합산한 결과를 보면 7점 척도를 기준으로 4.17점(표준편차 1.03)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정도였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점수가 가장 높았던 문항인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는 연령, 권역, 주관적 소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60세 이상(60.9점), 권역별로 대전/충청(64.6점),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 평균이상(63.0점)에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점수가 가장 낮은 문항인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는 권역, 국정운영평가, 주관적 소득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권역별로 강원(38.2점), 국정운영평가별로 부정(45.3점), 주관적 소득 수준별로 평균이하(42.1점)에서 가장 낮았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r=.15(p<.001)$ 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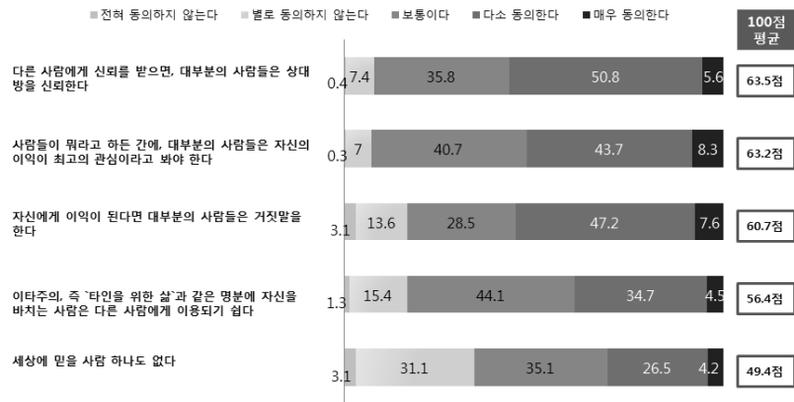
그림 IV-10 남한 주민의 삶의 만족도



다. 대인신뢰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

남한 주민들이 타인에 대해 어느 정도 믿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인 신뢰도를 질문하였다. 총 5문항에 대해 5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⁷³⁾ 5문항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신뢰한다’가 63.5점으로 가장 높으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최고의 관심이라고 봐야 한다’(63.2점),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60.7점) 순으로 평가되었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가 49.4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전반적인 대인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5문항(4문항 역채점)을 합산한 결과를 보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2.87점(표준편차 0.48)으로 보통보다 다소 낮은 정도였다.

그림 IV-11 ▶ 남한 주민의 대인신뢰도



⁷³⁾ 다른 크기의 척도로 측정된 문항들과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신뢰한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권역과 이념성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권역별로 제주(72.9점), 이념성향별로 보수(66.5점)에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점수였던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문항의 경우 권역과 학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권역별로 제주(33.3점), 학력별로 대졸 이상(48.6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대인신뢰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r=.03$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전반적인 대인신뢰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서로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라.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의견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

그림 IV-12 다양한 인종 공존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의견



남한 주민들의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총 4문항에 대해 5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⁷⁴⁾ 4문항 가운데 한국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44.5% (매우: 3.3% + 다소: 41.2%)로 ‘반대’ 19.5%(매우:3.8% + 다소: 15.7%)

⁷⁴⁾ 다른 크기의 척도로 측정된 문항들과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36.0%),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25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이였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한 나라에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 권역별로 광주/호남은 중립이 45.5%로 지지 의견보다 높았다. 이 문항은 성별, 지역 크기, 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57.8점), 지역 크기별로 대도시(58.9점), 권역별로 강원(62.1점)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그림 IV-13 다양한 종교 공존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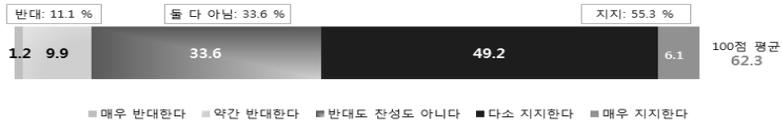


한국 사회 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38.9%(매우: 2.6% + 다소: 36.3%)로 ‘반대’ 20.6%(매우:2.8% + 다소: 17.8%)보다 높게 나타났다(‘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40.5%).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18점으로 보통 이상이였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는 한 나라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30% 이상으로 반대보다 높으나, 지역 크기별로 읍/면, 권역별로 광주/호남 지역의 경우 반대한다는 입장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권역과 국정운영평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권역별로 강원(62.9점), 국정운영평가별로 긍정(56.6점)에서 높게 지지하였다.

한국 사회 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55.3%(매우: 6.1% + 다소: 49.2%)로 ‘반대’ 11.1%(매우:1.2% + 다소: 9.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33.6%), 5점 척도를



그림 IV-14 다양한 문화 공존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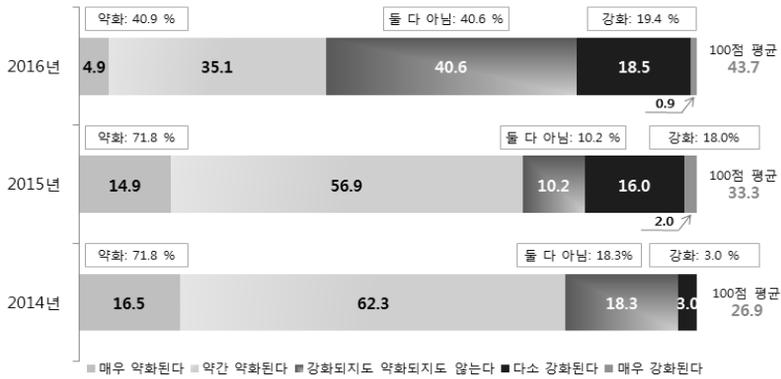
기준으로 평균 3.49점으로 보통 이상이였다. 모든 계층에서 한 나라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30% 이상으로 높았다. 지역 크기와 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지역 크기별로 대도시(64.6점), 권역별로 강원(67.7점)에서 높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이 ‘강화된다’는 응답이 19.4%(매우: 0.9% + 다소: 18.5%)로 ‘약화된다’는 40.0%(매우: 4.9% + 다소: 35.1%)보다 낮았으며(‘강화되지도 약화되지도 않는다’: 40.6%),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2.75점으로 보통 이하였다. ‘약화된다’는 응답은 40.0%로 2015년(71.8%) 대비 31.8% 하락하였으며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이 ‘약화된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지역 크기, 권역, 국정운영평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33.3점), 지역 크기별로 읍/면(46.5점), 권역별로 제주(52.6점), 국정운영평가별로 긍정(44.6점)에서 결속력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4문항을 합산한 결과를 보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3.17점(표준편차 0.62)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정도였다.

전반적인 사회적 다양성 의견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r=.19(p<.001)$

그림 IV-15 귀화자 증가에 따른 국가 결속력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의견



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사회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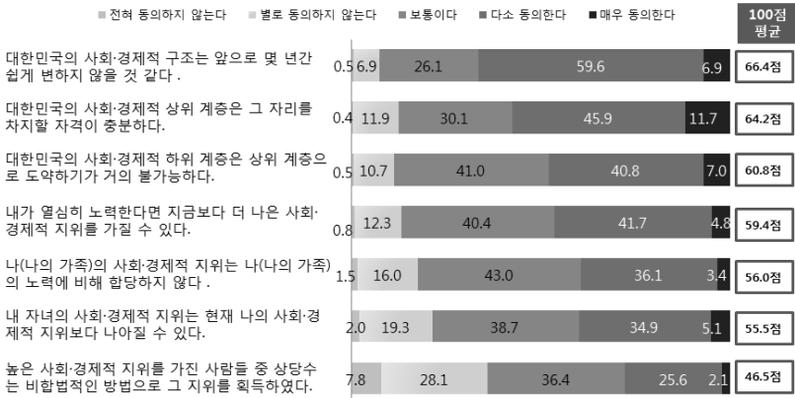
마. 우리나라 사회구조에 대한 의견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합리적 측면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 보는 문항을 질문하였다. 총 7문항에 대해 5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⁷⁵⁾ 7문항 가운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앞으로 몇 년간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항목이 66.4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으로 도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64.2점),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중 상당

⁷⁵⁾ 다른 크기의 척도로 측정된 문항들과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수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지위를 획득하였다’(60.8점), ‘내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현재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나아질 수 있다’(59.4점) 순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합리성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7문항(4문항 역채점)을 합산한 결과를 보면 2.79점(표준편차 0.38)으로 보통보다 다소 낮은 정도였다.

그림 IV-16 우리나라 사회구조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의견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앞으로 몇 년간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제주(75.0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지위를 획득하였다’는 응답은 주관적 가계상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악화(63.8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합리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r=.06$ 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회구조의 합리적 측면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서로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된 ① 삶의 만족도, ② 대인신뢰도, ③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의견, ④ 우리나라 사회구조에 대한 의견 점수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삶의 만족도와 대인신뢰도는 개인적 심리요인이며 사회적 다양성과 사회구조에 대한 의견은 사회와 관련된 심리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22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	유형	N	평균	표준편차	F값
성별	남성	493	3.24	0.40	0.02
	여성	507	3.25	0.40	
연령	만19-29세	178	3.23	0.42	0.57
	만30-39세	187	3.23	0.43	
	만40-49세	207	3.25	0.41	
	만50-59세	198	3.23	0.38	
	만60세 이상	230	3.27	0.39	
학력	중졸 이하	148	3.27	0.39	1.60
	고졸	423	3.26	0.39	
	대졸 이상	429	3.22	0.42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8	3.26	0.43	0.95
	200-400만원 미만	466	3.26	0.40	
	400만원 이상	445	3.23	0.40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 수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각의 심리요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심리요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와 더불어 어떠한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한편, 심리요인 이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 수준을 통제하였다. 이를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1단계에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 수준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는 삶의 만족도, 대인신뢰도,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 사회구조에 대한 의견을 예측변인(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표 IV-23 ▶ 심리요인들 간의 단순상관계수 (N=1,000)

	①	②	③	④	⑤
평균	3.24	4.17	2.87	3.17	2.79
표준편차	0.40	1.03	0.48	0.62	0.38
①	1.00				
②	0.15***	1.00			
③	0.03	0.17***	1.00		
④	0.19	0.12***	0.08**	1.00	
⑤	0.06*	0.26***	0.08**	0.02	1.00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② 삶의 만족도 ③ 대인신뢰도 ④ 사회적 다양성
⑤ 사회구조

* p<.05, ** p<.01, *** p<.001

표 IV-24 ▶ 심리요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N=1,00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β	t	R^2
1단계	성별	-.002	-.07	.003
	연령	.003	.09	
	학력	-.041	-1.05	
	월평균 소득	-.022	-.62	
2단계	삶의 만족도	.121	3.71*	.056
	대인신뢰도	-.006	-.20	
	사회적 다양성	.181	5.74*	
	사회구조	.018	.56	

* $p < .001$

표 IV-25 ▶ 심리요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N=1,00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β	t	R^2
1단계	성별	-.002	-.07	.003
	연령	.003	.09	
	학력	-.041	-1.05	
	월평균 소득	-.022	-.62	
2단계	삶의 만족도	.146	4.59*	.025
	대인신뢰도	.006	.20	
3단계	사회적 다양성	.181	5.74*	.056
	사회구조	.018	.56	

* $p < .00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준거변인(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다양성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신뢰도와 우리나라 사회구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 즉, 개인적 심리요인 두 가지 중에 삶의 만족도가, 그리고 사회와 관련된 심리요인 두 가지 중에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의견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변수 이외에 개인적 심리요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서도 사회 관련 심리요인의 영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 관련 심리요인은 개인적 심리요인에 비해 변화가 더 용이하므로 개인적 심리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 관련 심리요인의 영향력이 유지된다면 이 요인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와 대인신뢰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설명력을 제외하더라도 사회적 다양성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을 제거한 후에도 정책적으로 접근이 더 용이한 사회적 다양성의 효과가 지속되었다.

사. 정책적 시사점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전반적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긍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를 모두 질문하였는데,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2문항(북한이탈주민의 방문 시 소개, 소득/교육수준이 비슷한 북한이탈주민의 이사)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부정적 태도에 대한 질문(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책으로 인한 남한 주민들의 취업 어려움, 북한이탈주

민의 많은 요구)에서도 중간 이상의 점수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긍정적 태도를 보이지만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취업문제와 같은 정책적 또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보통 이상의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접촉면을 넓히는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증가로 인한 취업문제의 발생과 같은 측면이 부각되면 부정적 태도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소수 나타났지만 일관되게 나타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주민들이 현재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질문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문항에서는 보통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남한 주민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관련성의 크기 자체는 매우 크지 않지만 서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즉, 남한 주민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게 느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더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한 주민들이 일상적인 삶의 만족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을 바라보는 인식도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와 관련된 심리요인 이외에 개인적 심리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통일정책과 더불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긍정적 태도를 서로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했는데, 이후에 경제 지표 등을 사용하여 경제상황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I
II
III
IV
V

개인적 심리요인인 삶의 만족도 이외에 개인적으로 평소에 타인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인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으면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였으며 대부분의 문항에서 보통 이상의 대인신뢰를 나타냈다. 하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문항에는 보통 이하의 신뢰를 나타내어 남한 주민들이 타인을 쉽게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대인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체 5문항을 합산한 결과에서도 보통보다 다소 낮은 정도로 나타나 타인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높지 않았다. 개인적 심리요인인 대인신뢰도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을 믿는 정도가 높거나 낮은 특성을 가진 정도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는데, 전반적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정도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 내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의 공존에 대해 모두 보통 이상의 지지를 나타냈고, 특히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다. 한편,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이 강화된다는 질문의 경우 보통 이하로 나타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2014년과 2015년에 비해 결속력이 강화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개의 요인과 다르게 사회적 다양성은 사회와 관련된 심리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의견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인종, 종교, 문화 등의 공존을 지지하며 사회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통일과 관련된 정책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접근하고, 대한민국 내의 고유한 문화에 북한이탈주민의 문화를 동화시키려는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사회와 관련된 두 번째 심리요인인 사회구조의 합리적 측면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는데, 전반적 합리성이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경제적 구조가 몇 년간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문항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다. 한편,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합리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사회구조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정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관계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견이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인식과 별개라는 것을 의미한다.

각 심리요인들 간의 관계 이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개의 요인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영향력을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개인적 심리요인 가운데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사회 관련 심리요인 가운데 사회적 다양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두 개의 요인 중에서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사회적 다양성이 삶의 만족도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적 심리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사회 관련 심리요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사회적 다양성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즉, 정책적으로 접근이 더 용이한 사회적 다양성을 매개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4. 북한·통일문제 인식과 안보의식

가. 연구배경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했고, 러시아는 이를 “모험주의적 행동”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이 즉시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기회에 한국 사회 일부에서는 미국 전술핵의 재배치 혹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통해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북핵실험은 동북아시아 질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에도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북핵위기에 대응하는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은 국민들의 안보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와 정치인, 일부 전문가들의 대응 전략 혹은 주장을 접하며 국민들은 북한 무력도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이 가장 최근의 무력도발이지만 한국 사회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행위를 반복적으로 경험해왔고, 그때마다 국민들은 국내외적으로 유사한 대응전략이 추진되는 과정을 목격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는 일정한 경향과 패턴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안보위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의 도발로 인해 국민들의 안보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으며,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안보의식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사회적 중요성을 지닌다. 첫째, 소위 ‘안보불감증’이라는 말처럼 국민 개인이 사회적으로 안보위협요소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낮을 때에 국가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안보위협 요소를 실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프레이밍하는 경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수용될 수 없는 정책이 입안되고 국민적 동의를 얻게 되는 안보화(securitization)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현상 모두 국가재정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안보문제

의 심각한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들의 안보의식 분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북한의 핵위협 관련 안보의식과 기타 북한의 위협 관련 일반적인 안보의식으로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통적 개념의 안보의식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안보의식은 인지, 정서, 생활의 차원에서도 구분될 수 있다. 두 가지 안보위협에 대한 민감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핵위협 의식 일반적 안보의식은 두 개의 축으로 그 수준의 변화를 조작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념적 프레임을 바탕으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안보의식의 형성과 분화에 어떠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통일 후 남북통합에서 경쟁과 대결의식을 해소하고 다층적 안보의식을 재구성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가설 및 연구 설계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에 따라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 안보위협의 유형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가 예측 가능해지는 경우 대중들은 그 피해의 수준과 정도에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다. 즉 개인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안보의 위협이 국민들에게는 국가, 동북아시아, 국제 차원의 안보위협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질 것이다.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커질수록 해당 위협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과소평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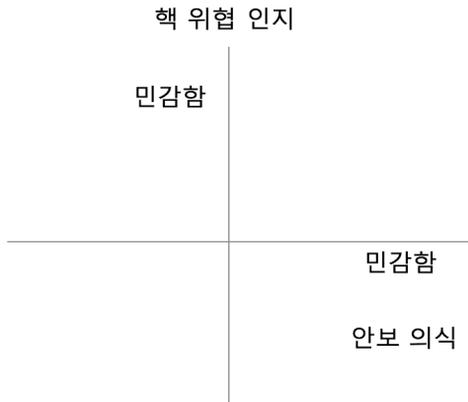
그리고 일반적인 안보의식과 핵무기 위협에 대한 안보의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들은 일반적인 안보위협에 대해 국민들이 민감하더라도 핵위협에 대해서는 오히려 덜 민감할 수 있는 반면 일반적인 안보위협에 덜 민감하지만 핵위협에는 더 민감할 수 있다. 핵위협이 실재할

I
II
III
IV
V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핵위협에 대해 무기력하거나 그것이 실재할 수 없다고 인식한다면 국민들의 핵위협에 대한 안보의식은 덜 민감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 안보의식과 핵위협 안보의식에 대한 민감성을 <그림 IV-17>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두 가지 위협요인에 모두 민감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라도 다른 요인에는 덜 민감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국민들은 두 가지 안보위협에 모두 민감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IV-17 안보의식의 두 측면



분단 이후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 북한의 도발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가장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되고 있는 행위자, 즉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안보의식의 민감성은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을 경계와 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할 때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북한의 도발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을 협력과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북한의 도발을 예외적인 현상 혹은

통상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의식의 민감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일반적 안보의식을 현재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남북한 사이에 전쟁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통하여 측정하고 있다.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개인의 진단은 자신의 경험과 사회가 형성해온 문화의 영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분단과 긴장이 고조될 때 남북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진단도 개인과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화의 과정에 의존하여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론은 전통적으로 북한이 핵심적 안보 위협을 유발하는 행위자였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인식이 안보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 사회는 장기간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대의 북학의 핵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위기와 달리 2000년대에는 다섯 차례의 핵실험으로 긴장은 한껏 고조되고 있다.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가 대대적인 대북제재를 시행하여도 북한은 공식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까지 핵실험을 지속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 핵위협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핵무기 위협은 완전히 해소하거나 적절히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북한 핵실험이 한국의 안보, 지역의 안보, 국제적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의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 일부에서는 이 기회에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하거나 과거의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여 북한과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의 이러한 주장과 반론은 선행연구와 나름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지지만 대중들은 핵무장과 관련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보가 제한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 즉 일반 시민들은 전문가들만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핵위협에 대한 안보의식은 삶에서 체득되는 정보에 의존하는 정서적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핵위협에 대한 안보의식은 정서적 측면에서의 걱정, 인지적 측면에서의 관심, 생활적 측면에서 삶에의 영향에 대한 인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종합적이고 완전한 정보가 없더라도 정서, 인지, 태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핵위협에 대한 안보의식을 진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에서 탐색하려는 가설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안보위협 인식이 더 크다. 북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뿌리 깊은 적대의식 등이 북한의 위협을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실재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보위협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대처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안보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구체적 태도가 적대적 인지 또는 협력적인지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안보의식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둘째,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경우 안보위협에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할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었던 햇볕정책들과 최근의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지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들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이 대중들의 안보의식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 지금보다 강경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보다는 물리력을 동원한 제재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제재와 협상의 병행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안보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겠지만, 제재의 강화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우선 안보의식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먼저 진행하여 일반 안보의식과 핵위협에 대한 안보의식에 표면적 차이가 있는지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안보의식과 핵위협에 대한 안보의식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북한에 대한 태도와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의 수준이다. 그리고 인구학적 변수 중 성별, 연령대, 정치적 신념, 경제적 만족도 등은 통제변수로 사용되며, 회귀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TATA 13.0을 이용하였다.

다. 안보의식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쟁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전반적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보십니까? 불안정적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하였다. 측정은 ‘매우 불안정적이다’=1, ‘약간 불안정적이다’=2, ‘보통이다’=3, ‘약간 안정적이다’=4, ‘매우 안정적이다’=5로 이루어졌다. 평균은 2.76으로 국민들은 현재의 안보 상황을 좀 더 불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43.9%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안보의식에 대한 평가를 위해 ‘남한과 북한이 언젠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하였다. 측정은

I
II
III
IV
V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1,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2, ‘보통이다’=3, ‘다소 걱정한다’=4, ‘매우 걱정한다’=5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은 3.14이며, 이는 남북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표 IV-26 주요 안보의식의 기술통계

변수	사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반적 안보상황 평가	1000	2.76	0.869	1	5
전쟁에 대한 우려	1000	3.14	0.860	1	5
핵위협 걱정	1000	3.48	0.916	1	5
핵위협 관심	1000	3.29	0.835	1	5
핵위협 삶	1000	2.99	0.877	1	5
핵위협 언론보도 행태	1000	3.22	0.723	1	5
핵전쟁 발발 가능성	1000	4.46	2.069	0	10
핵전쟁 생존 가능성	1000	3.14	2.432	0	9

핵위협 인식은 정서, 인지, 생활 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 핵전쟁 발발 가능성과 핵전쟁 발발 시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핵위협에 대한 정서는 ‘귀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어느 정도 걱정하십니까?’를 이용하여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1,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2, ‘보통이다’=3, ‘다소 걱정한다’=4, ‘매우 생각한다’=5 등으로 측정하였다. 평균이 3.48로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핵위협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응답자의 58.5%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위협에 대한 인지적 측면은 ‘북한의 핵위협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를 이용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1,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2, ‘보통이다’=3, ‘다소 생각한다’=4, ‘매우 생각한다’=5 등으로

측정하였다. 평균이 3.29로 역시 국민들이 핵위협에 대해서 종종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응답자의 47.5%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8.5%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핵위협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식은 ‘북한의 핵위협은 귀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를 이용하여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 ‘보통이다’=3, ‘다소 영향을 미친다’=4, ‘매우 영향을 미친다’=5 등으로 측정하였다. 핵위협을 느끼고 관심도 있지만 정작 핵위협이 본인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을 때, 평균이 2.99로 평상시의 생활에서는 핵위협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응답자의 31.8%만이 일상의 생활에서 핵위협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북한과의 핵전쟁 발발 가능성은 ‘10년 내에 북한과의 핵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전혀 가능성이 없다’=0부터 ‘가능성이 매우 높다’=10까지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평균은 4.46으로 ‘보통’보다 낮지만 핵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예상보다 높은 결과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핵전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11점 척도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평균 3.14로 핵전쟁 발발 가능성보다 낮은 결과는 핵전쟁이 난다면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안보의식의 상관관계 <표 IV-27>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남북한이 전쟁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 할 개연성이 더 크다. 반면 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북핵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핵위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 다양한

I
II
III
IV
V

경로를 통해 정보를 취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핵위협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고 있다. 핵위협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핵위협에 관심도 많고, 자신이 삶이 핵위협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표 IV-27 >> 안보의식의 상관관계

	전반적 안보상황 평가	전쟁에 대한 우려	핵위협 걱정	핵위협 관심	핵위협 삶	핵전쟁 발발 가능성	핵전쟁 생존 가능성
전반적 안보상황 평가	1						
전쟁에 대한 우려	-.069*	1					
핵위협 걱정	-.097**	.365**	1				
핵위협 관심	-0.002	.363**	.538**	1			
핵위협 삶	-0.035	.286**	.457**	.405**	1		
핵전쟁 발발 가능성	0.05	.398**	.315**	.258**	.376**	1	
핵전쟁 생존 가능성	.282**	.077*	.066*	.081*	.125**	.320**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라. 북한에 대한 태도와 안보의식

북한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가 그들의 안보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안보의식은 경직될 수도 있고 유연할 수도 있다. 북한을 협상의 파트너로 이해하는지 혹은 경계와 적대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인지는 응답자들의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의 구조적 변수들을 이해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전반적 태도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 적대 대상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전혀 동의하지 않음’=0, ‘매우 동의함’=10 점을 부여하였다. 한 질문에서 네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선택지로 제공

하기보다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11점 척도로 제시함으로써 응답자들은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자신의 중첩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질문에 대한 평균은 경계대상이 6.18, 적대대상 5.65, 지원대상 5.36, 협력대상 5.2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북한에 대해 경계와 적대의 이미지가 국민들의 인식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8 >> 북한에 대한 태도의 기술통계

	변수	사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반적 태도	지원대상	1000	5.36	2.249	0	10
	협력대상	1000	5.25	2.180	0	10
	경계대상	1000	6.18	2.051	0	10
	적대대상	1000	5.65	1.991	0	10
구체적 태도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이 통일을 원한다	1000	3.43	0.844	1	5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1000	3.52	0.880	1	5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1000	3.66	0.921	1	5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불신은 대부분 북한 때문이다	1000	3.54	0.782	1	5

북한에 대한 태도를 이미지와 같은 추상적 수준에서 측정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와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불신은 대부분 북한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북한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이 통일을 원한다’ 혹은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고 했을 때 응답자가 북한에 좀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28>에 따르면 근소한 차이로 적대적 성향의

I
II
III
IV
V

태도가 수용적 성향의 태도보다 더 많았다.

북한에 대한 태도와 안보의식의 상관관계는 <표 IV-29>에 나타난 바와 같다.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이라는 이미지가 높아질수록 전반적 안보상황의 평가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즉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는 사람일수록 한국의 전반적 안보상황을 불안정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하나의 국가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수준이 높아지면 전반적인 안보 상황이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는 지역 질서와 안보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사람의 북한에 적대적 태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북한의 극단적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면서 안보위협을 관리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문항들의 상관관계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

표 IV-29 >> 북한에 대한 태도와 안보의식의 상관관계 계수

	전반적 안보상황 평가	전쟁에 대한 우려	핵위협 걱정	핵위협 관심	핵위협 삶
지원대상	0.043	.154**	.117**	.165**	.193**
협력대상	.076*	.063*	.107**	.121**	.087**
경계대상	-.110**	.066*	.097**	.066*	.068*
적대대상	-.066*	0.055	.116**	.064*	.098**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통일을 원한다	0.029	.107**	.145**	.125**	.167**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118**	.107**	.101**	.121**	0.053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0.034	.144**	.190**	.235**	.137**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불신은 대부분 북한 때문이다	-0.051	.139**	.225**	.210**	.208**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 중에도 전쟁에 대한 우려, 핵위협에 대한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북한에 대한 태도와 안보의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표 IV-30〉)에 의하면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준다. 북한이 협력대상이라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 1점 상승할 때마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확률이 3%가량 증가한다. 반면 응답자들의 북한에 대한 경계의 이미지가 1점 더 커질 때 시민들의 일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

표 IV-30 북한에 대한 태도와 안보의식 회귀분석 결과

	전반적 안보상황		전쟁발생 가능성	
지원대상	0.002		0.061 ***	
협력대상	0.030 *		-0.008	
경계대상	-0.052 ***		0.020	
적대대상	0.005		0.010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통일을 원한다		0.047		0.069 *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0.123 ***		0.095 ***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0.011		0.091 ***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불신은 대부분 북한 때문이다		-0.053		0.100 ***
성별	-0.026	-0.038	0.056	0.064
연령대	0.024	0.032	-0.010	-0.017
최종학력	-0.003	0.001	-0.031	-0.039
정치적 성향	-0.007	0.011	0.007	0.018
경제만족도	0.229 ***	0.232 ***	-0.060	-0.048
상수	2.268 ***	2.535	2.895 ***	2.078 ***

I
II
III
IV
V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주장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른 구체적인 태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전반적 안보상황 진단의 두 가지 모델을 비교했을 때 대중들은 북한에 대한 구체적 사안에 자신의 의견에 따라 안보상황을 진단하기보다 북한의 국가이미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전쟁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모델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를 추정한 결과와는 사뭇 다르다. 전쟁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국가이미지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로 인하여 전쟁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구체적인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일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해하지만, 전쟁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그보다 더 구체적인 이유에 근거를 두고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구체적 태도에 해당하는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통일을 원한다’는 변수의 회귀계수가 0.069로 다른 변수들의 회귀계수들과 비교하면 가장 작다. 네 가지 구체적인 태도 변수가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것의 영향력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불신이 높고, 북한이 테러리즘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전쟁에 대한 우려의 정도가 높다고 알 수 있다. 그로 인하여 북한에 대해 좀 더 강경한 정책을 유지하기를 원할수록 전쟁 발발의 가능성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태도가 핵위협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가 발견된다. 첫째,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핵위협을 더 많이 걱정하고, 더 자주 생각하고, 생활에서도 더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인다. 북한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안보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그들이 반드시 핵위협에 무감각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핵위협의 존재와 그것이 가지는 심각한 위협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의 해결을 위해 강경책 이외의 다른 수단들도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다른 점일 것이다.

표 IV-31 >> 북한에 대한 태도와 핵위협 안보의식 회귀분석 결과

	핵위협 걱정		핵위협 인지		핵위협 생활	
지원대상	0.031 *		0.051 ***		0.076 ***	
협력대상	0.028		0.016		-0.005	
경계대상	0.011		0.013		-0.002	
적대대상	0.047 *		0.020		0.044 *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통일을 원한다		0.095 **		0.061 ***		0.122 ***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0.086 **		0.100 ***		0.038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		0.118 ***		0.162 ***		0.058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불신은 대부분 북한 때문이다		0.192 ***		0.136 ***		0.181 ***
성별	0.019	0.025	-0.044	-0.040	0.018	0.034
연령대	0.039	0.030	0.044 *	0.039	0.029	0.017
최종학력	-0.030	-0.035	-0.022	-0.031	-0.050	-0.057 *
정치적 성향	0.003	0.019	0.001	0.019	-0.024	-0.005
경제만족도	0.074	0.095 *	0.015	0.033	0.037	0.056
상수	2.600	1.424 ***	2.722 ***	1.570 ***	2.484 ***	1.608 ***

북한에 대한 구체적 태도들은 전반적 상황에 대한 안보의식과의 관계와 유사하다. 각각의 구체적인 태도에 동의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핵위협에 대한 정서, 인지, 생활 모든 측면에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에 대해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 대부분은 통일을 원한다'에 동의할수록 결국 핵위협의 안보위협 인식도 고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강경한 태도 즉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거나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불신은 대부분 북한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할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핵위협에 대한 안보의식이 고취되고 있다.

마. 대북정책 지지도와 안보의식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 정책이 포용적인지 또는 대결적인지에 따라 국민들은 그 정책의 기초를 수용할 것이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를 수용함으로써 한반도의 전반적 안보상황과 핵위협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와 억지 전략을 지지할수록 안보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이다.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동안 대북정책을 정부가 주도하고 그 정책에 따라서 정부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을 선택하기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선호가 먼저 발생할 개연성이 더 크다. 이러한 역전현상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는 현상과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심화된 남남갈등에 의해서 고착되어 왔다.

표 IV-32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 대북정책 평가

정책	평균	표준편차	정책	평균	표준편차
안보정책	5.31	2.151	인도적 대북지원	4.91	2.119
통일 외교	5.06	2.190	남북한 교류협력	4.79	2.065
남북관계 발전	4.84	2.104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해결	4.78	2.027
한반도 평화정착	4.93	2.092	남북대화	4.61	2.096
통일기반 구축	4.96	2.094	북핵정책	4.86	2.208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해온 안보정책, 통일외교에 대한 지지도의 평균은 ‘보통이다’보다 높았다. 남북관계보다는 통일대박론과 같은 담론으로 통일정책에 초점을 두었던 것을 고려할 때 다른 어떤 부문의 정책보다 정책 지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지도의 절대적 평균값은 기대보다 높지 않다.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 등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구상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을 도모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지만 절대적인 측면에서 5점 미만이었다. 다른 정책에 대한 지지도의 평균값들 모두 5점 미만이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대부분의 정책 지지도가 높았지만, 지난 3년 동안 정책의 지지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 정책에 대한 일반적 지지도와 세부정책별 지지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안보정책, 통일 외교 등의 부문별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정책을 지지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적 평가와 달리 평가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과 통일외교를 지지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신중을 기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의 안보정책을 지지하면서도 개성공단의 재개를 지지하고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공감할 수 있다.

I
II
III
IV
V

표 IV-33 박근혜 정부의 구체적 대북정책 지지도

정책	평균	표준 편차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에서도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5.63	1.869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	6.48	1.776
스포츠나 문화, 인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6.27	1.663
대북 전단 풍선 보내기, 라디오 방송, 확성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5.80	1.991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6.62	1.860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5.40	1.989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경제 교류를 중지해야 한다	6.01	1.909
개성공단 폐쇄는 옳은 결정이다	5.83	2.295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는 도입되어야 한다	6.09	1.974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5.64	2.120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	5.07	2.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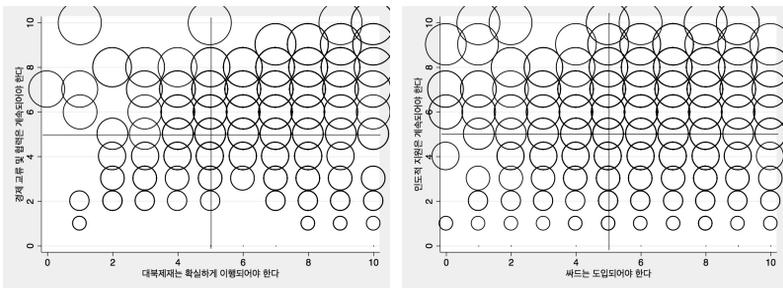
박근혜 정부의 구체적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보다 훨씬 역동적이다. 즉 대북강경책에 동의를 하면서도 동시에 남북한의 협력 및 교류에 무게를 두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현상은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 대북정책에 대해 이중적 인식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정책과 ‘정치적, 군사적 대결 상태에서도 경제 교류 및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순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대북제재의 확실한 이행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는데 그러면서도 그중에는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이 많다. 계속적인 대북제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기간의 대북제재 효과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경제 교류 및 협력

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쟁점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V-18>에 의하면 사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도 대북지원을 계속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북지원을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달리 말하면 사드 도입과 인도적 지원 중단을 연계하기보다 사드 도입과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자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사드 도입이 국내적으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2015년 북한의 두만강 유역의 홍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정부가 소극적이었는데,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의식과는 다른 방향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IV-18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의 이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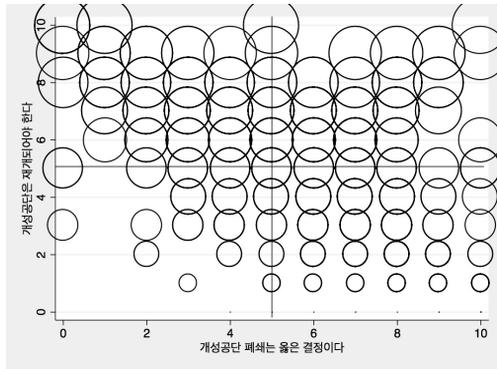
(a) 대북제재 vs. 경제협력

(b) 사드 도입 vs.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의 폐쇄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은 절반 정도가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이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인해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포함하여 대응조치를 해야

- I
- II
- III
- IV
- V

그림 IV-19 개성공단 폐쇄 결정 및 재개에 대한 평가



할 필요가 있었음에 동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가지는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의 장기적 폐쇄가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이 설령 개성공단 폐쇄가 옳은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의 재개가 남북관계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표 IV-34〉에 의하면 구체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국민들의 전반적 안보상황 평가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우려하는지 혹은 핵위협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등과는

표 IV-34 대북정책 지지도와 안보의식의 상관관계 계수

	전반적 안보상황 평가	전쟁에 대한 우려	핵위협 걱정	핵위협 관심	핵위협 살
대북제재의 확실한 이행	-0.0784*	0.0446	0.1573***	0.1203***	0.0018
사드의 도입	-0.042	0.0356	0.1141***	0.1101***	0.0582
경제 교류 및 협력 지속	0.041	0.0242	0.1071***	0.1101***	0.1289**
개성공단 재개	-0.0142	0.0167	0.0242	0.1101	0.0703*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대북제재의 확실한 이행, 사드의 도입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질수록 핵위협에 대한 걱정의 수준도 높아지고 핵위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 교류 및 협력의 지속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도 핵위협에 대한 우려의 수준과 핵위협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안보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을 무색케 하는 결과이다. 그들도 대북 강경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위협을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교류와 협력 중심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핵위협이 자신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심각한 안보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인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피로감일지 모르지만 북핵위협은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IV-35〉에 의하면 대북제재의 확실한 이행 혹은 사드 도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국민들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려가 높다. 대북 제재의 확실한 이행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북한의 핵위협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60.88%이며, 지지도가 낮은 사람들도 46.00%이다. 사드 도입에 대해 정책적 지지가 낮은 사람들 중에 54.86%가 북한의 핵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즉 대북 강경정책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정책선호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국민들보다 핵위협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한편, 경제 교류 및 협력의 지속 또는 개성공단 재개와 같이 대북교류 정책에 대해 정책 지지도가 높은 국민들이 핵위협을 우려하는 확률이 정책 지지도가 낮은 사람들이 핵위협을 우려하는 확률보다 높다. 이러한 현상은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핵위협을 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대북

I
II
III
IV
V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상관없이 핵위협 인식은 한국 사회에서 실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표 IV-35 대북정책 지지도와 핵위협 우려 교차분석

% (빈도)

		걱정 없음	보통임	걱정함	합계
대북제재의 확실한 이행	지지도 낮음	20.00 (20)	34.00 (34)	46.00 (46)	100.00 (100)
	보통임	19.77 (34)	37.21 (64)	43.02 (74)	100.00 (172)
	지지도 높음	17.17 (125)	18.96 (138)	60.88 (465)	100.00 (728)
사드의 도입	지지도 낮음	18.86 (33)	26.69 (46)	54.86 (96)	100.00 (175)
	보통임	17.91 (36)	35.82 (72)	46.28 (93)	100.00 (201)
	지지도 높음	17.63 (110)	18.91 (118)	63.46 (396)	100.00 (624)
경제 교류 및 협력 지속	지지도 낮음	21.83 (50)	20.52 (47)	57.64 (132)	100.00 (229)
	보통임	15.95 (33)	33.82 (70)	50.24 (104)	100.00 (207)
	지지도 높음	17.02 (96)	21.10 (119)	61.88 (349)	100.00 (564)
개성공단 재개	지지도 낮음	21.32 (78)	23.22 (85)	55.46 (203)	100.00 (366)
	보통임	18.34 (33)	22.49 (33)	59.17 (100)	100.00 (169)
	지지도 높음	15.06 (70)	24.30 (113)	60.35 (342)	100.00 (465)

〈표 IV-36〉 대북정책의 결과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대북정책의 지지도에 따라 살펴본 것이다. 대북제재의 확실한 이행과 사드 도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북핵위협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많다. 경제 교류 및 협력의 지속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48.58%,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의 42.79%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개성공단의 재개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44.09%,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49.73%가 북핵위협 정보에 관심이 많다. 일반적인 경제 교류 및 협력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대북제재의 확실한 이행, 사드의 도입 등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국민들과 비슷한 인지 패턴을 보인다. 그렇지만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북한의

핵위협을 인지하는 패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된 국민의 인식과 태도가 안보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정치화되어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36 >> 대북정책 지지도와 핵위협 인지 교차분석

% (빈도)

		생각하지 않음	보통임	생각함	합계
대북제재의 확실한 이행	지지도 낮음	22.00 (22)	47.00 (47)	31.00 (31)	100.00 (100)
	보통임	16.28 (28)	46.51 (80)	37.21 (64)	100.00 (172)
	지지도 높음	18.54 (135)	31.87 (232)	59.58 (361)	100.00 (728)
샤드의 도입	지지도 낮음	21.15 (37)	40.00 (70)	38.86 (68)	100.00 (175)
	보통임	21.40 (43)	39.30 (79)	39.30 (79)	100.00 (201)
	지지도 높음	16.83 (105)	33.65 (210)	46.52 (309)	100.00 (624)
경제 교류 및 협력 지속	지지도 낮음	25.32 (58)	31.88 (73)	42.79 (98)	100.00 (229)
	보통임	17.39 (36)	42.03 (87)	40.58 (84)	100.00 (207)
	지지도 높음	16.13 (91)	35.28 (199)	48.58 (274)	100.00 (564)
개성공단 재개	지지도 낮음	19.40 (71)	30.87 (113)	49.73 (182)	100.00 (366)
	보통임	19.52 (33)	39.64 (67)	40.84 (69)	100.00 (169)
	지지도 높음	17.42 (81)	38.49 (179)	44.09 (205)	100.00 (465)

바.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일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과 핵위협에 대한 안보의식에 다른 유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반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위기인식은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보다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북한에 대해 적대와 경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보의 상황을 불안정하다고 여기고, 지원과 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안보의 상황을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전쟁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보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전쟁이 비인도적이고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남북한 간 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국민들이 남북한 관계가 전쟁으로 치달을 것을 원하거나 바라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분단과 전쟁을 경험하고 휴전상태에서 고도로 무장화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걱정해보지 않은 이가 드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태도와 인식에 따라 안보의식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핵위협 안보의식에 미치는 북한의 국가이미지는 일반적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다르다. 핵위협은 한국이 통제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에 의한 안보위협 인식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협력적 대상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적대적 대상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그와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을수록 핵위협 안보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구체적인 태도에 따라서는 핵위협 안보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다. 개별적 사안 중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국민들이 북한에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보다 핵위협에 의한 안보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북정책의 지지도를 고려하면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불감증에 걸려 있지는 않다. 예상할 수 있는 바대로 대북강경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우려와 인지의 수준이 높다. 그런데 경제 교류 및 협력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국민들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려와 인지의 수준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

들은 북한의 핵위협이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대응정책의 측면에서는 대북강경책과 협상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을 정치화하여 한국 사회 일부 진영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국민들의 정책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도 국민들은 북한의 핵위협에 따른 안보상황을 유연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도 유연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갈등의 심화를 예방하고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안보불감증, 혹은 지나친 안보의 민감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보화 현상 모두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이 실재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사회는 불필요한 자원을 지출하게 되고, 물질적 자원 이외에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도 희생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나친 안보불감증 또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안보위협 의 상황과 요인에 따라 국민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요인이 달라진다. 이러한 결과는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또는 불감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정책의 개발 및 조정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V. 남북통합을 위한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남북통합을 ‘통합의지’, ‘통합역량’,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 등 세 영역에서 측정하였다. 첫 번째 요소인 ‘통합의지’는 다시 통일에 대한 태도와 통일국가에 대한 비전으로 구분되며,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 분단 고착에 대한 견해, 통일과 관련된 정서, 통일과 관련된 인지적 믿음 그리고 통일과 관련한 행동의도로 구성하였다. 통일국가에 대한 비전은 통일국가의 방향성과 목표, 통일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 탈물질적 가치에 대한 견해, 통일 후 통합의 장애물 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남북통합의 두 번째 영역인 ‘통합역량’은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그리고 사회적 이동으로 구분되며,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 공동체에서의 삶의 만족도와 경제적 만족도, 공동체에 대한 신뢰, 사회적 참여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포용에서는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 원인, 해결 방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을 전반적 차원과 지역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대북통일 관련 남남갈등의 구체적 차원에서 조사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갈등의 원인을 가치관의 차이, 개인 이익 추구, 정부의 대처 부족, 정보 부족과 오해 등의 수준에서 탐색하였다. 갈등 해결 역량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 민주성, 권위주의 사회적 관용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우리 사회의 구조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이동에서 살펴보였다.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가 지속될 것인지,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가 정당한 것인지, 사회구조의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는 남북통합의식 측정의 세 번째 영역으로 북한에 대한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었다. 북한에 대한 태도는 북한에 대한 관심, 북한 정보 획득 경로와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지원, 협력대상, 경제 혹은 적대의 대상,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를 8개 문항

I
II
III
IV
V

으로 측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는 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평가’를 상정하여 조사하였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를 포함한 11개 영역에 대한 정부의 대처 능력, 그리고 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압박과 제재정책 등 11개 구체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안보에 대한 전반적 평가, 안보위협 요소, 그리고 향후 외교정책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평가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 여부, 북한의 핵위협에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태도 등을 1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통일에 대한 인식을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의 현실성’을 기준으로 ‘통일무관심 집단’, ‘통일선호집단’, ‘분단체제 선호집단’, ‘공존통일 병행집단’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심층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일선호집단, 공존통일 병행집단, 그리고 분단체제 선호집단은 남북통합의 3요소인 통합의지, 통합역량,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일선호집단의 통합의지와 통합역량이 가장 높았으며, 분단체제 선호집단의 통합의지와 통합역량이 가장 낮았다. 공존통일 병행집단은 두 집단의 중간 수준이었다. 통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전쟁에 대한 우려와 통일의 편익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통일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남북통합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 사회의 남북통합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이다. 국가기관 신뢰도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경제적 계층, 그리고 지지정당, 지역에 따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하위계층에 속하는 국민일수록, 그리고 정치적으로 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수록,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지역 거주자일수록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 세대와 대북정책 방향에 따른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개인적 심리요인과 사회와 관련된 심리요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하였다. 개인적 심리요인은 삶의 만족도, 대인신뢰도, 사회와 관련된 심리요인은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의견과 우리나라 사회구조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 국민은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취업문제와 같은 정책적 또는 거시적 영역에서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개인적 심리요인 중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더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지만 개인신뢰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사회와 관련된 심리요인에서는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사회구조에 대한 의견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믿음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본 결과,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믿음이 삶의 만족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북한의 핵위협 관련 안보의식과 기타 북한의 위협 관련 일반적인 안보의식을 구분하여 북한에 대한 태도,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의 관련성을 심층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안보위협에 대한 위기 인식은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보다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북한에 대해 적대와 경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보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반면, 북한을 지원과 협력의 파트너로 여기는 사람은 안보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남북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전반

I
II
III
IV
V

적인 태도보다는 북한에 대한 구체적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는 남북통합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먼저 남북통합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통일은 '사건'이지만 남북통합은 '과정'이다. 통일에 대한 의지와 통일국가에 대한 비전, 통일한반도 국가의 시민으로서 대인·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역량,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다. 남북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통일한반도 국가의 시민으로서 남한과 북한 주민이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결책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남북통합의 촉진, 남북갈등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의 개발과 평가는 남북통합의 정의와 목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통일에 대한 단선적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통일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필요함(원함)' 또는 '필요하지 않음(원하지 않음)'의 일차원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다층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통일의 당위성 외에 통일의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입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통합과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역시 남북통합, 그리고 남북통일이 정치와 경제의 영역을 넘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 삶의 만족도는 통합의지와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국민일수록 통일에 대해 적극적이었지만 삶의 만족도가 낮은 국민들은 분단 고착을 선호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국민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남북통합과 통일을 당위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접근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남북통합과 관련한 국민들의 양가적(ambivalent) 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통일에 대해 정서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편익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경계의 대상인 동시에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남북통합과 관련된 국민들의 부정적 태도는 통일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는다.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들이 가진 심리적 틀(psychological mental frame)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통일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국민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부정책의 신뢰도 향상'과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를 꼽았다. 심층분석에서도 우리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가진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단 이후 남북관계를 포함한 통일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신뢰도 향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지지 정당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차이가 나고 있으므로 정당들은 주요한 이슈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 지지자를 동원하는 것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는 한국 사회의 경제문제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본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통일한반도 국가의 목표로 경제성장을

I
II
III
IV
V

꼭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대한 요구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복지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통일한반도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평등, 공정함, 상호 돌봄을 선택한 국민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경제적 편익의 관점에서만 남북통합과 통일을 논의하기보다는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의 균형 속에서 남북통합과 통일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 이번 조사 결과는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이 제로섬 게임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지속적인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예방 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불안한 안보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불안함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안보상황에서 국민들은 통일보다는 분단 고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안보에 대한 강조는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덟 번째, 이러한 종합적 대책은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불감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정책의 개발 및 조정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의 비율과 그렇지 않은 국민의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자칫 정부의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이 사안에 따라서 ‘남남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정책 수립과 적용이 남남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특정 계층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홉 번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북한이탈주민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경험이 극히 드문 상황에서 우리 국민 스스로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남북통합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과 동시에 국민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남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적 수용성과 동질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다양성에 대한 포용과 관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신욱 외. 『사회통합지수 개발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강원택.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출판사, 2004.
- 구영록. 『인간과 전쟁: 국제정치이론의 체계』. 서울: 법문사, 1994.
- 김수암 외.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노대명 외. 『한국 사회 통합지표 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박길성.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박종철 외.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박종철 외.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박종철 외. 『남북한 통합연구 분석II: 경제·사회·문화』.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6.
- 이희길·신지성. 『사회지표 개편 기초연구1』. 서울: 통계개발원, 2010.
- 윤인진·채정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탈콧트 파슨스 저, 윤원근 옮김. 『현대사회의 체계들』. 서울: 새물결, 1999.

Consejo de Europa,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Methodological guide*. Belgium: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2005.

Deutsch, Karl W.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Durkheim, Emile.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56.

Norris, Pippa. *Institutional Explanations for Political Support*. In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edited by Pippa Norr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OECD. *Social Cohesion in Shifting World*. Paris: OECD, 2011.

Offe, Claus. *Der Tunnel am Ende des Lichts: Erkundungen der politischen Transformation in osten* Campus Verlag: Auflage, 1994.

Putnam, Robert D., Robert Leonardi, and Raffaella Y. Nanetti.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2. 논문

강정인. “한국 보수주의의 딜레마.” 『사상』. 제13권 3호, 2001.

권수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 제20권 2호, 2011.

- 금재호. “사업체규모로 살펴본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리뷰』. 제83호, 2012.
- 김창남.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연구.” 『주관성 연구』. 제29호, 2014.
- 박기덕. “한국정치의 갈등 분석과 해소방안의 모색.” 『민주주의와 인권』. 제6권 1호, 2006.
- 박영자. “다문화시대 한반도 통일·통합의 가치 및 정책방향.” 『국제관계연구』. 제17권 1호, 2012.
- 박준 외.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CEO Information』. 제 710호, 2009.
- 손호철. “남남갈등의 기원과 전개과정.”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4.
- 신광영. “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변화와 불평등체제.” 『시민과 세계』. 제13권, 2008.
- 오세제·이현우. “386세대의 조건적 세대효과: 이념성향과 대선투표를 대상으로.” 『의정연구』. 제41권, 2014.
- 유해숙·이현숙.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인식 비교연구: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제20호, 2014.
- 이재민·황선영.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제33권 6호, 2008.
- 정은미·송영훈. “북한주민의 통일의식과 남한사회의 수용성.” 『통일문제 연구』. 제24권 1호, 2012.
- 정영호·고속자.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포럼』. 제221호, 2015.
- 정해식. “사회통합의 결정 요인: 통합상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제221호, 2015.

조원빈. “정치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갈등.” 『정치·정보연구』. 제19권 1호, 2016.

조진만·한정택.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 비교 분석: 민족적 당위와 현실적 이익의 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6권 1호, 2014.

최순중. “통일한반도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통합의 의미: 독일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문화예술연구』. 제15권, 2014.

함재봉. “한국의 이념적 갈등 구조와 역사.” 『사상』. 제13권 4호, 2001.

Beauvais, Caroline and Jane Jenson. “Social Cohesion: Updating the State of the Research.” CPRN Discussion Paper. no. F22. 2002.

Berger-Schmitt, Regina. “Social Cohesion as an Aspect of the Quality of Society: Concept and Measurement.” EU Reporting Working Paper. no. 14. ZUMA. 2000.

Chan, Joseph, Ho-Pong To, and Elaine Chan. “Reconsidering social cohesion: Developing a definition and analytical framework for empirical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75, no. 2. 2006.

Galtung, Johan. “A structural theory of integr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 no. 4. 1968.

Jenson, Jane. “Mapping Social Cohesion: The State of Canadian Research.”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 (CPRN) Study*. no. F03, 1998.

Kreckel, Reinhard. “Social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German Unification.” In *Surviving the Twentieth Century: Social Philosophy from the Frankfurt School to the*

Columbia Faculty Seminars. edited by. J. T. Marcu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9.

Weiner, Myron *et al.* “Problems of Integration and Modernization Breakdown.” In *Politic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edited by Jason Leonard Finkle and Richard W. Gabl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6.

3. 기타 자료

『영남일보』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박주화. “통일 필요성 측정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도.” 통일연구원 원내 발표, 2015.7.

Canadian Government. Final report On Social Cohesion, June 1999, <<http://www.parl.gc.ca>>.

최근 발간자료 안내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3 제9차 KINU 통일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전략 - 8·25남북합의 평가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대북·통일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통일정세분석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통일나침반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함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욱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욱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욱 외	18,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도경욱 외	22,500원

연구보고서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향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욱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13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김수암 외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근, 홍우택, 신종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 · 도시정치 · 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 교육과정 · 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증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에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 · 사회 · 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2016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	-------------------------	-------	---------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한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식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수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에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3,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7,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	--------------------------------------	----------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연례정세보고서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기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성 명*		입 금 일 자*	
소 속*		입 금 자 (신청자와 다를 경우)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전 화		이메일
	핸드폰		F A X
이메일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사항: 성명, 입금일자,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 선택사항: 입금자, 이메일서비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